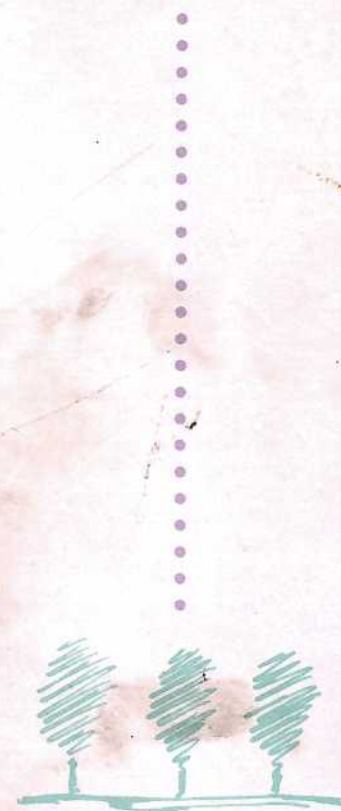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2

# 인권하루소식

합본 Ⅱ호  
(제101호~200호)



1994. 10

인권운동사랑방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인권하루소식

합본 Ⅱ호 1994. 10

인권정보자료실  
R1.1.2

인권운동사랑방



·조선민족박해·규탄, 작가회의·민예총

**제195호(94.6.30, 목) / 250**

- 1면 ·매일 첫 금요일 미군범죄주방 캠페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 중심 치료는 낡은 것”,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 2면 ·“‘아시아교류 유학생 지원센터’ 설립안 진상조사등에 정부입장 밝혀라” 정대협  
·전국연합 “신공안통치중단, 내무·노동·교통장관 퇴진”  
·조작간첩 피해자 위한 6월 고난 기도회  
·철창에 갇힌 희망세에 실행선고

**제196호(94.7.1, 금) / 255**

- 1면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한준수 전연기군수 고심에서도 유죄판결  
·구국전위 관련 4명 추가구속
- 2·3면 ·「인권하루소식」 6월분 총목차(175호-195호)

**제197호(94.7.2, 목) / 258**

- 1면 ·3%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목회자대회 열기로, 전국연합·한교협 시국대책회의  
·민정련 마창지부 회원 박채홍씨등 2명 연행  
·아·태지역 엠네스티 병행행사 확정
- 2면 ·단체탐방 24-전국삼청교육대동우회(구 전국삼청교육진상규명투쟁위원회)

**제198호(94.7.5, 화) / 260**

- 1면 ·재소자 청원권 및 비진향이유로 종교활동 제한  
·전노대 제3차 개입금지, 직권중재등 철폐결의
- 2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비운의 죽음  
·탈냉전 이후 환경, 인구이동등 일국차원 벗어나는 문제 많아, 민정련 국제관계교실

**제199호(94.7.6, 수) / 262**

- 1면 ·‘APEC 서울회의’, ‘사회발전 정상회담’ 대비 민간단체 모임  
·민변 대법관 임명제청 논평 “민주적 의견수렴 미흡”  
·일본정부 후속조치에 관여 안해, 정부 위안부 대책
- 2면 ·광주전남연합소속 오병윤씨등 3명 구속, 범민련 관련  
·미군 영동 양민학살 피해보상 요구, 미대사관에서 진정서  
·지하철노조 총회 “조합원 중징계 반대”

**제200호(94.7.7, 목) / 264**

- 1면 ·16개 단체 두말분교 후원회 모임, 서울교대생 방학기간 보충수업 실시키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중지”,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위해 개방”요구, AI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 2·3면 ·「인권하루소식」 지령 2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이 나아갈 길

# 인권하루소식

94년 2월

(제101호 - 제112호)



<이달의 주제 - 행형>  
수감, 연쇄, 차고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3조>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흥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는 7일 일본 검찰에 강덕경 할머니(68) 등 30명과 「정대협」 명의 2차대전 당시 군대위안부에 관여한 전범들에 대해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4일 서울 장충동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정부는 중대한 전쟁범죄인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회피한채 비공식적으로 ‘보상에 대신 하는 조치’로 일본의 중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본질 은폐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정대협」은 “작년 7월부터 군대위안부 문제 책임자를 고소·고발을 검토해온 결과 국제법상으로 시효의 문제나 ‘위안부 책임자’ 처벌 등의 사례가 전혀 문제되지 아날을 것”이라며 “고소·고발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범죄행위를 전 세계에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대협」은 “일본정부는 고소·고발을 계기로 자신이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을 해야 국제사회

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미경총무를 비롯한 「정대협」 관계자와 강덕경 할머니 등 군위안부 피해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일본 검찰 방문 대표단은 6일 출국해 7일 동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뒤 보고집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대협」과 ‘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제출할 고소·고발장의 피고소·고발인들은 1937년-1945년 사이에 육군중앙과 해외파견군의 주요지휘관등으로 당시의 일본군내에서 오고간 공문서 등에 의해 확인되어진 사람들이다. 천황과 참모총장은 명백한 문서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보유하고, 위안소 설립과 통제에 관한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3월 11일까지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 정기회기 중에 작년 8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쟁 중의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 등에 대한 보고를 2월 14일(현지시간)에 듣는다. 소위원회의 결의가 유엔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 결의를 거치면 특별보고자인 린다 차베즈가 공식적으로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을 받아 활동

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작년 8월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 등에 대해 법률적 분석 및 요망사항’을 연구·보고하도록 하여, 보스니아 내전에서 일어난 강간문제, 태평양 전쟁중의 일본군의 조직적인 위안부 운영에 대한 조사를 유엔에서 최초로 공식조사하도록 했다.

### ‘모성보호 확대’ 구체화 요구 여성계, 무급생리휴가 폐지도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등은 정부에서 지난 3일 확정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에 대해 “유급생리휴가의 폐지 반대 등 여성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생리무급휴가 조항 삭제, 정규직 중심의 고용확대 등의 세부추진계획 확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무급생리휴가 대신 출산휴

가 확대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모성보호 확대가 여성고용을 기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가 부담을 지는 방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추진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황석영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알기 위해 방북’

소설가 황석영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알기 위해 방북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짜고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했는데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을 통해 “유엔인권위에서도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인 요소가 많은 법임을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사법의 정당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길산’ 남북합작의 남측계약당사자인 김보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 <인권하루소식>이 유료화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송신비때문에 부득이 1월부터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독료는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형편에 따라 납부해 주십시오.

제일은행(낙원지점) : 128-10-131017 서준식



단체탐방 10 /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

한 웃고 계신 문익환 목사님의 얼굴이 담긴 검은 흰 휘장이 드리워져 있고 '한울살'이라 쓰인 단정한 문패가 걸린 한옥의 문을 들어서면 깔끔하게 정리된 방하나가 있다. 흔히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기재들이 놓여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책장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여러개의 향로와 또 한가지, 삼면의 벽을 두르고 있는 미색커튼이다. 그 커튼 뒤에는 민주화 재단에 목숨을 바쳤던 분들의 얼굴이 순박한 웃음을 띠고 있고, 그 미소가, 아니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픈 모습이 벽면 가득 차 있다.

**젊은 영혼들의 일깨움과 아픔을  
압제에 저항하는 용기로 승화시킨 '한울살'**

부모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지만 자식이 죽으면 땅이 꺼진다고 했던가?

그 하늘과 땅 사이를 자신들의 어깨로 받치고자 자식, 남편, 형제를 잃은 분들이 모여 86년 8월 12일 「민주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를 만든 것이 오늘의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 협의회」가 있게 된 시작이었다.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라 이 땅의 모순을 안고 업고 쓰러져간 젊은 영혼들의 존재는 그 자체가 분노요, 참담함의 폭로요, 일깨움이요, 새벽을 알리는 울음이었다. 이 모두를 가장 뼈저리게 경험한 유가족들이 아픔을 한데 모으고 그것을 압제에 저항하는 용기로 승화시키고자 한 것이 「유가족」을 있게 한 힘이었다.

「유가족」은 처음엔 이소선 어머니등 몇 분이 마포의 마리스티 수녀원에서 모이기 시작하여, 그간 열사들의 희생이 늘어남에 따라 현재 공식집계로는 156가족, 그중 「유가족」의 활동에 참여하는 가족이 약 75가족이 되었고, 동대문에 「한울살」이라는 작은 집을 꾸리고 열사들의 영정과 각종 자료들을 보존하고 있다.

현재의 조직구성은 작년 9월의 총회를 거쳐 회장 1인(강민조-고 강경대 열사 아버지), 부회장 2인의 회장단과 각 지회장, 운영위원회, 감사 2인, 사무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간 「유가족」이 해온 가장 큰 활동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민족민주열사를 비롯하여 외세와 독재에 의해 죽어간 이들을 범국민적으로 추모하고 그 뜻을 잇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이는 「민족민주열사범국민추모사업회」를 중심으로 매년 「합동추모제」를 여는 것으로 집약되는데, 89년 개운사에서 첫 합동추모제를 가졌으며 올해 5회째를 맞게 된다.

둘째,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명예회복사업이다. 이를 위해 88-89년 당시 의문사진상규명특위가 구성되고 청문회가 열리는 등의 정치상황속에서 오랜 농성과 국회청원, 자료수집등의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벌였고, 이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의문사의 경우 죽은 이를 다시 한번 죽이는 결과를 낳는데, 예를 들어 타살의 증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단정하는 왜곡보도속에서 본인의 의지와 구조적 모순등은 희석화되고 우울증이나 부적응자 등으로 왜곡되어 바르게 살고자 했던 본인뿐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한울 심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분들의 명예회복

이 되고 책임자에 대한 보상청구가 되야만 추모·계승 사업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분 한분에 대해서 쌓여 있는 자료만도 엄청난 양이다. 그것들을 풀어헤치고 정리해 내는 일이 남아 있다. 그간 「유가족」에서 많은 자료집을 통해 소개 하기는 했지만 짧은 문단으로 담아낼 수 없는 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물어야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일은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유가족」이 해왔다. 누군가는 가족들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가족」의 모습을 한번 머리속에 그려보자. 젊은 자식과 남편을 잃고 몸과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였고, 죽음의 진상이라도 밝히기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느라 직장도 장사도 매러치고, 있는것 없는것 다 들어먹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리고 오랜 농성과 최후탄 세례속에서 병을 얻어 몇년째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도 많다. 자신들의 생계유지도 어려우면서 자식들의 뜻을 잇고자 민족민주단체와 유가족에 꼬박꼬박 후원금과 회비를 내며 살림을 꾸려 오신 분들이기도 하다.

이상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 역사의 식을 조금이나마 가진 사람들은 독립유공자의 가족들을 제대로 대우 못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거나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며 통탄해 한다.

지금까지 「유가족」이 해온 일은 「유가족」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그분들을 초대하고 보여드려야 할 것이었다. 「유가족」의 사무국장 백종수씨는 이 점을 힘주어 말한다. "유가족 사업은 이땅의 정권이 올바르게 있을 때에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유가족만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단체들의 힘으로, 전 민족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 땅의 양심을 위해 죽어간 분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지, 가족들이 나서서 알아달라고 외치는 것은 우습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가족」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들의 끈을 다시 탄탄히 엮는 것이다. 오랜 싸움에 지치고 아픈 신 분들도 많고 서로 돌아와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앞장서고 함께 할 일들이다. 「민족민주열사 범국민 추모사업회」를 염속한 마음으로 강화하고, 「의문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책임자 색출, 특별검사제 도입,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요구를 한 목소리에 담아 터트리는 것이다. 얘기를 나누는 내내 창밖에는 눈이 내렸다. 문밖에 나왔을때도 하얀 눈과 찬바람과 하얀개 한 마리가 함께 뛰어놀고 있다. 오늘 이집에는 찾아오는 벗들이 많은가 보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 - 행형>

수감, 연쇄, 차고 및 구속복 등 계구는 결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3조>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검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 ...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 법무부 지난 3일 전처6주 부상입힌 안회권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수사도중 폭행한 전 인천지검 안회권검사(현 영월지청)와 서울지검 남부지청 송관호검사(현 목포지청)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검사의 폭력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소극적 태도와 한계가 드러나자 시민들의 적극적인 고발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회권검사는 지난 1월 4일 새벽 마약혐의 혐의자로 연행된 김동철씨(37, 건측업)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혀,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안강민 검사장)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폭행사실이 확인돼 지난 달 15일 영월지청으로 전 보되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또한 송관호검사도 1월13일 새벽 술에 취해 뇌물혐의로 연행한 김용달씨(40, 노래방주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며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여, 지난 17일 목포지청으로 전보된 바 있다. 이들 검사의 폭행사건 직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대검 감찰부는 폭행사실이 확인되면 독직폭행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안강민 검찰부장은 지난해 11월 6일 전국 검찰 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등 불법·탈법 수사 관행을 뿌리뽑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나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입건'하는 등 탈법적 수사관행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징계조치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폭행사실이 확인돼 지난 달 15일 영월지청으로 전 보되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노태훈씨, 경찰의 불법체포·감금등 손해배상 청구

지난해 7월 13일 경찰청

남영동 분실에 연행되어 10월 20일에 집행유예로 석방된 노태훈씨는 지난 2일 서울민사지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이석태 변호사 등 3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출하였다.

노씨는 연행과정에서 영장없이 수감을 채우는 등의 불법체포·감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도청 및 불법계좌추적, 집행유예 선고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감금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액은 3천만원이다.

**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배아무개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보던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고 지난 1월 31일 「대한변호사회」(회장 이세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번 '변호사 성희롱'사건

과 관련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대위」 7일 오후 여성평화의 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각계의 공적영역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또 「대법원」에 성희롱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대조교 성희롱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우아무개 조교 판결에서 여성인권을 향상시킬 계기가 될 수 있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 등을 촉구했다.

배아무개 변호사는 지난 11월 24일 면접을 보던 최아무개씨(22)에게 성에 대해 지극히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자신의 성 경험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최씨의 '진정서'를 접수한 후 1달간의 진상조사를 벌였다.

**양심선언 박석진씨 집행유예**

서울고법 합의5부는 7일 박석진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인권하루소식> 103호는 2월 15일(화)에 발간합니다.

**◆ 공 판 안 내 ◆**

□2월 8일(화)

- 10시, 허택, 국보법, 319호, 1회
- 2시, 김중호(전해군참모총장), 특가법(뇌물), 302호, 선고
- 2시, 이종구(전국방부장관), 특가법(뇌물), 309호, 선고

<인권하루소식>이 유료화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송신비때문에 부득이 1월부터 구독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독료는 월 1만원, 2만원, 3만원 중 형편에 따라 납부해 주십시오.

제일은행(낙원지점) : 128-10-131017 서준식



국제 인권 소식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 추진중  
일본 오사카 인권단체들

일본 오사카지역의 인권단체들은 올해 7월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의 발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주로 아태지역 여러나라 인권단체들 간의 정보교류와 교육훈련, 그리고 기초연구 및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될 이 센터는 올해 12월부터 정보서비스 등 본격적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문의 : 센터설립 준비위, 전화: 81-6-568-8420).

유엔 인권상 9명 수상

매 5년마다 선정되는 유엔 인권상에, 1993년에는 그리스, 보스니아, 네팔 등 8개국의 인권운동가와 단체,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법률가 협회(ICJ)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출처: HUMAN RIGHTS MONITOR 23호).

사회적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1995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5년 3월 11-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92년 유엔총회 결의에 따

라 「사회적 발전」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정상회의의 취지는 빈곤추방과 생산적 고용창출 그리고 사회통합성 증대로서, 정상회담과 그 직전 개최되는 각료회의에서는 이 3가지 주제에 관한 공동의 관심사와 전략이 논의된다. 이 정상회담은 90년대에 연속으로 개최되고 있는 리우 환경회의, 비엔나 인권대회, 빈곤과 발전 세계회의에 이은 4번째 세계회의이다. 끝이어서 개최될 북경여성대회와 범죄방지에 관한 유엔총회로 마무리될 6대 세계회의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그 어느 세계회의보다도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가장 종합적으로 부각될 것이며,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선진국들의 책임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선진자본주의국들이 주도하는 경제전략이 인권·환경·평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 혹은 인간존중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가가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여성·경제적 불평등의 분야에서도 각각 나름대로의 영향과 기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1차 준비회의는 93년 4월에 있었고, 2차 준비회의는 현재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중이다(1월 31일-2월 11일)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안건

인권위원회는 1월 31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인권하루소식> 2월 3일자 참조, 숫자는 안건번호.

- 4. 팔레스타인지역내 인권상황
- 5. 아프리카 남부지역 인권상황
- 6.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상황
- 7. 개도국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발전의 권리의 실현에 관한 문제
- 8. 발전의 권리에 관한 문제 일반
- 9. 민족자결권과 식민지상황
- 10. 고문, 구금, 실종에 관한 상황
- 11. 인권증진을 위한 조치,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연관된 사항
- 12. 각국 인권침해상황
- 13. 이민(외국인) 노동자
- 14. 인종차별
- 15. 국제인권조약의 지위
- 16. 유엔인권기구들의 활동 효과 검토
- 17. 차별방지소위의 보고
- 18. 소수집단의 권리
- 19. 인권 전문활동
- 20. 신앙과 사상에 따른 차별철폐선언의 실행
- 21.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인과 사회집단의 권리와 의무선언 기초작업
- 22. 아동의 권리
- 23. 세계 가정의 해
- 24. 차별방지소위 위원 선출
- 25. 제51차 인권위원회 안건 초안 작성
- 26. 제50차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한 보고

남아시아 대학생 인권실기교육  
지난해 12월 10-20일, 네팔에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열흘동안 네팔의 카트만두에서는 아시아학생연합(ASA) 주최로 인권실기교육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89년 임수경씨의 석방캠페인과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에 대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활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기도 했던 아시아 학생연합은 창립된지 25년이나 된 국제민간단체로서 유엔협의자격을 갖고 있으며,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 대학생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단, 한국에는 참여단체가 없다). 소식지로 월간 「운동(Movement)」를 발간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홍콩에 있다.

이번 교육은 인권운동가를 위한 2차 훈련프로그램인데 아시아학생연합 산하 교육센터가 주최하고 네팔의 진보적인 대학생조직 3개가 후원하였다. 참여자들은 남아시아 6개국 14개단체에서 온 56명의 대학생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국제적인 교육과정과는 달리, 이번 교육의 첫 프로그램을 남아시아에서의 인권단체에 향의하는 집회로 시작하였는데, 여기에 4천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아시아학생연합 산하의 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실무적 훈련코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한국학생들의 참여도 희망하고 있다.

북한정부 AI 「인권보고서」에 답신

지난 해 10월 15일 국제엠네스티는 “북한:국제엠네스티의 관심 요약”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에 앞서 복사본을 미리 북한에 제출하였고, 북한은 발표 하루전인 10월 14일 제네바주재 이철 북한대사가 AI 사무총장 피에르 사네에게 4쪽 분량의 공식입장을 전달하였다.

북한 당국은 AI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사실과 무관한 전적으로 근거없는 것”이라며, 대개의 경우 부인하였다.

AI는 북한 정부가 북한 보고서에 대해 답변한 것을 환영하며, 이 사실이 앞으로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정부가 토론하겠다는 신호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보고서에 거명된 양심수들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 유감의 표명과 함께 인권단체의 입국 허용등을 요구하였다.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편집자주 < >안은 주재어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HA.2.3.1): 한겨레 2월 3일자 1면.

- <4.3사건>·국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나서(HA.2.3.1)/제주 「4.3」규명 본격화,여야 국회의원 74명 특위구성 결의,제주도의회 회생마을서 현장 조사(D.2.5.27)/4.3사태와 해녀의 애증 그려,「폭풍의 바다」연극협 창작극개발 첫작품(D.2.4.15)
- <비리인사 관대한 형량>·전직권력층은 '치외법권'인가(HA.2.2.14)/"비리인사 잇단 집유, 법원이 개혁에 역행",변협 성명(D.2.3.31)/거물급 판결관대 국민감정에 위배(C.2.3.13)/이건재 김종인씨 집유석방,법적용 형평성등 따졌어야(D.2.6.19)
- <폭행검사>·폭행검사 2명 감봉-견책처분(C.2.4.30)/폭행검사 2명 징계(M.2.4.23)
- <당번검사제>·당번검사제 전국확대(HA.2.3.19)/24시간 당번 검사제 도입(D.2.3.31)/민원담당-전결검사제 확대/야간 영장청구도 추진(C.2.3.30)
- <서울법대 자살>·"군사독재 쓴 빌려준 과거 반성해야",서울법대 동창회보(HA.2.3.18)/「권략아합 서울법대 출신」동문이 비판글 게재 화제(H.2.3.30)
- <신원조회>·민주화운동 투옥전력인사, 해외여행 제한 여전,안기부 신원조회때 F판정 통보(HA.2.4.19)
- <재소자인권>·수감동료 폭행 피해제소자 치료소홀 국가 배상, 서울민사지법(M.2.3.19)/제소자 인권침해 항의,민가협 대학생 등 집회(J.2.1.22)/교도소 반인권 규탄(H.2.1.30)/시대에 역행하는 군산교도소의 인권유린을 규탄한다(HA.2.6.14)
- <경찰 검문>·시민검문 당연시...인권배려 어렵다(J.2.1.31)/독자의눈,경찰관들 노상 검문 검색 헌법,적무집행법에 저촉(HA.2.4.14)
- <경찰 비리>·「송파서 떡값」관련 경관 2중 뺑소니(J.2.1.22)/강도는 못잡고...경관 곳곳서 말쑥만(H.2.1.30)/경찰서장 거액 수뢰 조사,수원 남부서(D.2.3.31)
- <경찰 신고목살>·경찰, 강도신고 목살,축소(J.2.2.22)/경찰, 3인조 택시강도 은폐/신고 목살(HA.2.3.19)/강도없었던일로 해달라, 경찰 시민에 돈주며 은폐, 대통령순시 앞두고, 강원(D.2.4.31)/경찰이 돈주며 강도은폐,강원서 피해자 신고하자 없던 일로 해달라(J.2.4.12)/돈주고 강도은폐 관련경관 중징계(D.2.5.31)/경찰,수원서도 강도은폐, 강원 돈주고 입막음 확인...징계(J.2.5.22)/경찰 또 강도신고 목살,3인조 택시털어 피해운전자에 돈주며 "쉬쉬",동대문 창신파출소 보고 안해(D.2.6.27)
- <경찰>·서울청장 담화 독후감 요구에 일선경찰 반발(HA.2.2.19)
  - 경찰 수사장비 과학화(HA.2.2.1)
  - 울고싶은 경찰, 3인조, 농민시위, "잇단밤샘 근무"(H.2.3.31)
  - 취재일기, 일파로 삼파로...사기없는 경찰(J.2.4.4)
  - 인터뷰, 15만 경찰 명예 걸겠습니다, 김화남 경찰청장, 치안확립·비리추방 국민신뢰일기 최선
- <출산·생리휴가>출산휴가 24일 늘려,생리휴가는 무급으로(J.2.3.1)/출산휴가 24일 늘린다,근로여성 복지위 생리휴가는 무급전환(C.2.4.2)/출산휴가 84일로,여성 이공계교-직업훈련원 진학우대,정부 근로여성복지위(D.2.4.2)/출산휴가 84일로 늘려,여성정책심의안 생리휴가는 무급(H.2.4.30)/출산휴가 12주로 늘린다,여성정책심의위 생리휴가 무급으로...남녀차별 개선,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제' 적용키로(HA.2.4.2)/미주알,출산 생리휴가 개정(HA.2.4.19)
- <장애인>그때 그사람, 82년 장애인 이유 법판탈락 변호사 박운수씨, 사법부 편견에 분노,이듬해 대구지법판사발령 5년간 근무(J.2.5.17)/장애인 고용 사업체 지원금-장려금 확대(C.2.6.18)
- <고사복직>·재단서 무시된 고사 복직판결, 강제집행소송으로 관철(HA.2.2.18)/고사 복직조건 소취하 요구, 부산교육청(HA.2.6.4)
- <전교조복직>·복직제의 교사 60명 구제될듯, 서울교육청 해당자에 재면담 통보(HA.2.4.14)/복직제의교사 65명 재면담 검토, 서울시교육청 밝혀(H.2.4.29)/전교조교사 우월한 복직 연수, '교장말 따라라' 정신교육 일색(HA.2.4.17)
- <고사증 유효기간제>·교사증 유효기간제' 통계도구화 우려, 교육부 추진계획 교원단체 "악용소지 크다"반발, 월반·속진제도 "과외열풍 등 부작용" 학부모 비판(HA.2.5.12)
- <학부모회>인터뷰;참교육전국학부모회 첫 여성회장 김완자씨"돈봉투 안주기등 지속 추진",조명상태,책걸상문제등 교육환경실태 조사도(HA.2.6.8)
- <임금인상>노총, 올 임금인상 요구를 6.7-10.8%로(H.2.4.31)/노총 임금인상률 6.6-10.8% 요구(HA.2.4.2)/올 임금협상 앞길 험할듯, 노총-경총안 명목·실제 큰차이, 그나마 단위노조선 거부분위기, 물가·재야반발·정부억제 워혀 진통예고(H.2.4.27)



<임금체불>임금체불 2만 8천여명 '우울한 설'(HA. 2.4-18)  
 <노동절 명칭>근로자의 날보다 노동절 좋다; 독자(D.2.2-19)  
 <기사 과로사>기사 잇단 과로사, 자살 계기 다시 관심, 택시 기사 잇단 과로사...처우개선 시급(D.2.5-19)  
 <산재환자>죽어가는 산재환자 외면말라/독자(HA. 2.3-14)  
 <쌀시위>입원치료중 농민 연행 구속(HA. 2.4-19)/농민단체대표회견, 구속자석방요구(J.2.4-22)/서울 도심시위 농민 2명 구속(D.2.5-31)/한총련 48명 경찰청앞 시위, 구속농민 석방요구(HA. 2.5-15)/구속농민 석방 촉구, 9개 농민단체 성명(HA. 2.5-15)/한총련임시의장 김현준군, 올 학생운동 최대 현안은 쌀개방 반대투쟁(M.2.5-4)  
 <UR재협상>UR국회비준 동의 민자의원 소환, 충북농민회 서명운동(HA. 2.6-15)/야 UR재협상요구 정가 긴장, 야3당 공동보조 새 불씨(D.2.6-15)/쇠고기등 기초농산물 UR재협상 요구가능, 야3당 긴급합동회서 가트협정 조항 근거로 제시, 정부 노력없고 불가능 주장은 기만 질타(HA. 2.6-4)/6개도시서 UR집회 재협상촉구 평화시위, 36개 시민단체(H.2.6-23)  
 <반핵운동>반핵운동 연합 출범(HA. 2.5-15)  
 <산업쓰레기 수입>서방 유독성 산업쓰레기 한국, 주요 수입국중 하나, 그린피스 보고서(J.2.2-6)/"아시아는 서방 선진국 유독성 쓰레기장", 그린피스 폭로(D.2.2-7)/그린피스 보고서 충격, 환경단체들 경악(H.2.3-31)  
 <그린라운드>그린라운드 대책위 결성(HA. 2.2-18)/"그린라운드 비상" 정지권 자성, 일본의회연 20개 분과위...환경 무기 무역전쟁(C.2.4-13)/기자의눈: 그린라운드의 손익(H.2.4-2)  
 <온실가스>온실가스 억제회의 7일 개막, 세계자연보호기금(M.2.5-6)/"온실가스" 국제회의 내일 개막, 2천년내 90년대 수준 감소, 자연보호기금(H.2.6-7)  
 <공윤심의-노래>인터뷰:당국사전심의 없이 음반내놔 "몰의" 가수 정태춘, "심의 맞추다 보면 좋은 노래 안나오죠"(J.2.4-29)  
 <공윤심의-영화>정치영화 「증발」, 공윤 심의 "골머리"(D.2.3.21)/문민시대 문제될 일 아닌데... 정치영화「증발」, 연출한 신상옥(D.2.5-21)/신상옥감독 제작 3공정정치영화 「증발」 개봉싸고 "시끌시끌", 공윤심의 진통, 신감독 "삭제나 수정 받아들일 수 없다" 강경입장(D.2.5-19)/김형욱 '거세'공작동 소재 본격정치영화「증발」화제, 사실과 예술창작은 별개문제...외부압력 안될말(HA. 2.5-9)/김형욱소재영화 「증발」, 문민시대에도 영화소재 한계 있다니... (J.2.5-17)/문소영화 「전함 포탈킨」 방영 취소(D.2.3-21)  
 <민중미술>민중미술 15년 한눈에, 민중미술 16년 1980-1994전(HA. 2.5-1)  
 <통일모니터제>"통일모니터제" 신설, 평통 업무보고(D.2.1-2)  
 <남북교역>남북교역 민족내부거래 인정여부 논란, UR의정서 마감시한 앞두고 쟁점, 남북합의서 필요하지만 북과 협의 어렵다-통일원, GATT법률에 근거있다 별도노력 불필요-외무부, 경실련선 정부가 책임회피...포괄적 인정 받아야(J.2.4-4)/남북교역 국제규범 적용 배제, 정부, 가트 등에 별도인정 제기 않기로(HA. 2.6-1)  
 <대일 보상청구권>제일한국인 전상자 보상청구권 갖는다(D.2.6-12)  
 <군위안부>정신대 관련자 처벌 일검찰에 고발키로, 정신대책협의회(C.2.5-30)/위안부 강제연행 책임자 일본검찰에 고소할 계획, 정대협 기자회견(HA. 2.5-14)/정신대 문제 일 검찰에 고발, 대책위 항일(M.2.5-1)/일법정에 정신대 세조사 출국 이미항 정대협 총무, 정신대 사죄-책임자 처벌 별개(C.2.6-13)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미 국무부 '93연례인권보고서', 한국인권 개선, 북한은 심각(H.2.3-5)/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북한 부분 요지(D.2.3-8)/한국인권 크게 개선, 미국무부 보고서(C.2.3-2)  
 <브라질>미 인권비난 관련 브라질 강력반발(H.2.4-7)  
 <중국>중국 반체제인사 3명 석방(HA. 2.5-5)  
 <멕시코>농민반군과 협상키로, 멕시코 정부(C.2.6-5)  
 <군축회의>중동무기 확산금지 초안 작성, 안보-군축위 실무회의(C.2.5-6)

**유엔 세계인권대회 자료집 발간**  
 93년 6월14일부터 25일까지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국내 인권단체들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Korea NGO's Network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KONUCH)」를 결성하여 공동참여하였다.  
 『유엔 세계인권대회 자료집』은  
 제1부 세계인권대회의 개요와 관련자료,  
 제2부 공동위 결성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  
 제3부 93년 4월 아시아-태평양지역 준비회의 자료,  
 제4부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관련자료,  
 제5부 공동위 평가서 및 참가기  
 제6부 영문자료 등 별첨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엠네스티 94년 2월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펴내는 「국제엠네스티」 94년 2월호가 발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중기획/테러속에 방치된 어린이들 ·국가별 캠페인/일본-경찰에 의한 가혹행위 ·사형제도폐지/일본-사형제도하에서의 비인도적 처우 ·난민캠페인/구급된 망명희망자의 죽음 ·이권교육/양심수 개념에 대한 확대고찰 ·남북한에 대한 국제엠네스티의 관심/한국-40년 이상 구급되어 있는 양심수들(안학섭, 김선명씨 사례), 북한-국제엠네스티의 인권보고서에 대한 북한정부의 답신 ·인론홍보/유엔 인권관련 재원확보와 인권고등판무관 신설 논의  
 -연락처: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전화:053-426-2533)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 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등 이유로 14일 유엔 인권위도 종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

지난 7일 일본검찰은 강덕경 할머니등 6명이 태평양 전쟁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노예 행위의 책임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의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낸 고발장도 접수가 거부되었다.  
 도쿄 지방검찰청은 접수 거부 이유로 \*시효가 지났고, \*범죄사실이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발인이 명기되지 않았고, \*일본의 법률조문이 불특정화 되어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정대협」 등은 고소·고발장에서 「일본군대의 행위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관한 죄」를 위반했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범죄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정대협」의 이명 총무는 "일본정부는

2차대전중 종군위안부의 감독·집행을 위해 전쟁중 일본군대간에 오간 공문을 보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소·고발장의 접수에는 도즈카 예즈로 등 일본 변호사 6명을 포함한 일본인 40명이 함께하였다.  
 이날 오후 6시 30분 일본 NCC회관에서 150여명의 일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고소·고발장 제출에 대한 보고집회'에서 박원순 변호사는 "일본이 국제법에 의한 전쟁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검찰은 국제법에 의해 전쟁중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집행·감독한 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의 규약에도 그 당시 일본이 가입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집회에서 박 변호사와 일본측 변호사들은 "일본국회는 강제매춘을 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 민간단체들은 집회에서 호소문을 통해 "한국을 비롯 일본군이 점령했던 각 지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에 나서고 유엔 인권위에서도 종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일본정부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뒤에야 말만의 사죄와 조사보고를 했을 뿐"

이고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몇 푼의 돈으로 문제를 마무리하려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대협」 김선실 실행위원을 비롯한 4인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6인, 박원순 변호사 등 11명의 대표단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오전 11시 일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전범자의 처벌이 왜 필요한지와 고소·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발표하였다(<인권하루소식> 101호-2월 5일자 참조).  
 보고집회에 앞서 일본 검찰이 접수를 거부하자 이들은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알림**

□위원회 소식(통권 28호)-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요내용:문익환 목사님을 그리며/출소장기수를 찾아서('말'지 선생님 이경규님)

□평화의 일꾼(2월호)-천정련 장기수가족후원회  
 주요내용:함께 생각해 봅시다-인권이야기/인물탐구 금제성 선생님-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소식(3호)  
 주요내용:문국진을 생각하며/고문후유증 사례-재미교포의 꿈속에 나타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격월간 「인권」-한고협 인권위원회  
 주요내용:고 닷봄 문익환 목사 소천/장기수 선생 송환/인권법률상식-헌법소원(김제환 변호사)/세계의 인권상황(난민)등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중앙노동상담소 이전  
 주소:서울 구로구 구로6동 97번지 영진빌딩 303호  
 전화:864-0990 팩스:865-1213

**고 김남주 시인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공판안내**

□2월 15일(화)  
 11시, 김주옥, 집시법, 317호, 5회

□2월 16일(수)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항소심 속행

□2월 17일(목)  
 10시, 강태중, 군무이탈, 광주고법 301호, 항소심

□2월 18일(금)  
 10시, 김삼석의 1인, 국보법, 311호, 6회

□2월 21일(월)  
 2시, 황석영, 국보법, 항소심, 선고



이행", "성노예 인권범죄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벌였다. 시가행진 도중 "정대협"의 이미경 총무는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운동" 등과 같은 압력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정

기회의에서는 2월 14일(현지시간) 작년 8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전 세계의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 등을 포함한 보고를 듣는다.

여기에는 전후 최초로 유엔 차원에서 일본의 중군위안부 범죄문제가 다루어진다.

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작아진 산재보험

'산재환자 치료 어렵게 해'

'전노협', '인의협' 등 산재환자 치료제한 사례 접수

'전국 노동조합협의회', '노동과 건강연구회',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 10여개 노동·의료단체들이 참가하여 결성한 '노동부의 산재치료제한 방침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올해초 산재보험금 요율을 12.2% 인하함에 따라 '산재환자의 강제종결과 치료제한'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례를 신고받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자살한 한진중공업 노동자 정인석씨의 경우도 정부의 산재보상정책의 후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노동부는 또 산재로 인한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치료 및 재요양의 제한, 재요양이 많이 접수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재환자 요양합리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산재보험금을 줄여 부족한 만큼 산재치료와 요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대위'는 최근 산재환자 치료제한 및 재요양부자가 빈번하고 있다며 '전노협', 조직망과 '노동과 건강연구회' 등 각 의료기구를 통해 각 사례를 접수 받아 조직적 대응에 나서

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7일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지난 달 10일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인정과 이에 합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반타 나 바라즈(27)씨 등 14명은 지난 7일 농성을 해제했다. 28일째 농성중이던 이들은 7일 노동부가 불법취업 외국인에게도 산업재해보험과 휴업·장애급여 등을 적용하고 시기도 3년전까지 소급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의 농성으로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끈 것을 사실이나 이들의 대부분이 저임금에 다 노동조건도 국내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어 단방처방으로 끝나는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인하로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욱 소홀해지고 있어 산재가 빈발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첩첩산중이다.

한편에서는 기업주들이 투자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맛을 들여 산업구조 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7일-13일)

편집자주 < >안은 주제어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HA.2.8-13):한겨레 2월 8일자 13면.

- <인권일반> 화요일에 만난 사람: 김병상, "정부 한계 뚜렷 민주화운동 계속", 북한 적대하기보다 형제애로 포용을, 사제단 결성 20돌, 미국정책 잘못 규탄(HA.2.8-13)
- <집중심리제> 불구속사건 단한번 재판으로 처리, 사안 경미한 경우, 피고인 불변 줄이게 신속 진행, 서울형사지법(J.2.12-23)/재판 집중심리제 실시, 서울형사지법, 증거조사 한번에 처리등(C.2.13-18)/형사재판 집중심리제 도입, 서울형사지법, 증거조사 일괄처리등 신속진행(HA.2.13-15)/재판 '집중심리제' 시행, 서울형사지법, 증거조사 1회종료·불출석 증인 과태료(H.2.13-22)
- <당직변호사제> 현강추적, 당직변호사제, 피의자 인권보호 '응급실', 무료 법률 조력으로 강압수사 방지(HA.2.7-16)
- <국보법위반> 前 조통위원장 김영하씨 구속, 보안법 위반 혐의(D.2.9-31)/前전대협 조통위원장 국가보안법위반 구속(H.2.9-29)/92년에 인공기계양 前전대협 간부 구속(C.2.9-22)/전대협 조통위원장 구속(HA.2.9-19)
- <양심수석방> 더불어 생각하며; 양심수 석방은 문민개혁 첫걸음, 장기표(HA.2.9-14)
- <시위> '폭력시위 용납안해', 김대통령 지시(H.2.8-2)/농민시위 강도높은 경고, 김대통령, "경찰에 폭력때 미국선 바로 총 사용"(HA.2.8-4)/"농촌 지키자는 농민을 폭도 취급", 농민대회 참가 구속된 윤상영씨등 가족들의 '빼앗긴 실', 혐의사실도 애매... 이웃 주민 도움 큰 위안(HA.2.9-19)/남충련 대학생 4백여명 아메리칸센터 앞서 시위(HA.2.9-19)/국제화 시대 시위문화도 개선될(J.2.13-15)
- <재소자인권> 시국재소자 단식농성, 군산교도소 수감 6명(HA.2.7-18)/교도소 인권유린 여전, 공손히 인사 안했다고 '금지처분' 이라니... (HA.2.9-14)
- <노동> 비노동계열·법의노조 인정검토, 노동부, 노동중심 정책전환... 언노련등 6개노련 접촉(HA.2.7-18)/사설: 노동계 판도변화와 정부의 정책전환(HA.2.8-3)/"개인택시면허 경력 산정때 노동쟁의기간 제외는 부당", 고법, 서울시 패소 판결(HA.2.7-17)/노사관계 발전전략 채택낸 경기노동위 최성준 심사관, "생산현장에도 '성과급' 도입을", 노사분규 줄었지만 타율적 근로관행은 그대로(J.2.7-17)
- <임금협상> 공기기업 임금협상제도 개선율, 협상타결된 기확원 예산편성 마땅(HA.2.7-13)/경총-노총 올 임금협상 금주부터 본격화(H.2.13-9)/올 임금협상 "산넘어산", 전노협등 노총·경총 협의안보다 높게 제시(J.2.13-22)
- <실업> 청년층 실업 '위험수위', KDI 고용문제 보고서, 전체 39% 차지... 유럽보다 심각, 장년층의 무려 6.5배(H.2.9-9)

- <부당노동행위> 사설: 부당노동행위 살살이 밝혀 해결해야, 자보사태와 정부의 책임(HA.2.7-3)/기자의 눈: 노동청의 궁색한 변명(H.2.7-2)/기자의 눈: 남노동 '재벌총수 박주기'(D.2.8-4)/자보간부 14명 부당노동행위, 서울노동청 발표(H.2.9-31)/자보14명 사법처리 요청, 서울노동청, 간부 6개지점장 부당노동행위 확인(HA.2.9-1)
- <자보검찰수사> 사설: 돈봉투 수사는 빈봉투(H.2.8-3)/사설: 돈봉투사건, '용두사미'로 끝나는가(HA.2.8-3)/사설: 아직 끝난 게 아니다(D.2.8-3)/기자의 눈: '철저규명' 다짐 어디까지나(H.2.8-3)/투시경: '돈봉투' 수사검찰 할일 다했나(HA.2.8-2)/전망대: 정은영, 거짓말 행진곡(HA.2.8-4)/'돈봉투' 의혹 밝혀질까, 비자금 추적에 "한가닥 기대", 검찰 수사의지가 문제(H.2.9-5)
- <업무상재해> "통근차량 이용않고 자가용출근 업무상 재해에 해당안돼", 대법(M.2.12-15)/"출근중 자가용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대법원 판결(HA.2.13-14)
- <지하철노조> 승무원 구속 항의 지하철 서행, 4호선 30초이상 역 정차... 내일 모든 노선 확대(HA.2.13-14)/지하철노조, 동료구속에 항의, "안전수칙 운행"... 연착 사태, 어제 4호선... 전노선 확대방침(C.2.13-19)/지하철 4호선 연발착사태, 노조 "안전확보" 지연운행, 사고노조원 구속항의(H.2.13-22)
- <UR재협상> 정부 "UR재협상 불가", UR특위답변, 여야 시장개방 대응책 마련 촉구(J.2.7-2)/UR재협상 가능여부 공방, 야당쪽 문서제시하며 '불가' 논리 반박, 정부 가트서한 공개 "모두 끝내" 강조(HA.2.8-4)/"UR재협상" 가능성 공방, 국회대책특위 벽두 논란, 가트-클린턴 서신서한 2통 공개, 야의원 "내용변경 여지" 공세, 정부 "재협상 시도는 불가" /농발위, 출발부터 "빠격", 설치목적 무관한 'UR재협상' 표결까지(C.2.9-11)/UR재협상,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연말 비준까지 과정은 부대절차, 백17개국 합의문 바꾸긴 힘들어(J.2.13-4)/더불어 생각하며; UR에 '남북교역' 문제 거론해야, 이장희
- <외국인근로자> "낯선 땅 외로움 잊읍시다", 안산 서부공단 외국인노동자 잔치 개최, "한국노동자와 동등한 대우 계기되기를"(HA.2.7-18)/외국인도 산재보험 적용, 노동부 지시, 3년전 사고까지 전면 소급보상(J.2.8-22)/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내국인과 같게,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은 유보(D.2.8-29)/불법취업 외국인도 "즐거운 실", 7일밤 경실련강당, 산재보험·장애급여 적용 노동부 발표 "낭보", 처우개선 요구 14명 농성풀고 잔치상받아(H.2.9-29)
- <성희롱> 이번엔 "변호사 성희롱", 서울변호사회 '혐의' 인정... 파문 확산, 직원모집 면접서 응시여대생에 '언어폭력', "낙방하자 모함하는 것" 관련 변호사 주장(M.2.7-23)/"여직원 면접때 변호사 성희롱", 징계개시 신청(J.2.7-23)/변호사 여직원채용 면접때 성희롱 물의, 여대생 진정... 서울변호사회서 징계청구(D.2.8-30)/표주박: 변호사국가여직원 채용 면접하면서 성희롱, 서울변협 징계요청(H.2.8-30)
- <성폭력> 인터뷰: 미국무부 성폭행문제담당 린다 그레이엄씨, "가족·의사에 신고의무" 도입해볼만"(J.2.12-9)/來韓 미국무부 성폭행문제담당 린다 그레이엄씨, "어려서부터 올바른 성·인권교육시켜야"(H.2.9-24)
- <정신대> 정신대동원 '전범' 심판대 세운다, 피해자 할머니등 11명 어제 일본으로, "책임자 처벌없는 보상 무의미", 오늘 고소-고발장 제출... "역사에 교훈 남겨야"(D.2.7-30)/위안부 피해자 책임자 처벌요구 고소, 일 검찰 접수 거부(D.2.8-31)/한국인 위안부 피해, 일, 소장접수를 거부(H.2.8-7)/정신대 책임자 처벌법 촉구, 국제우화회, 유엔인권위에(HA.2.7-2)
- <일본내 차별> 잠깐: 한국인 이유 아르바이트취업도 못해, 일 국적차별 항의투쟁 교포3세 河朝子씨, "민권단체와 연대 '권익찾기' 힘쓸터", 책임자 처벌요구 소송도 준비중(D.2.8-25)/지구촌풍경: 한국인 양녀에 달린 '일본의 문'(HA.2.13-5)
- <노인> "치매노인 간호고민 풀어드립니다", 상담전화 15일 국내 첫 개설, 병에 대한 이해 돕고 용품등 정보알려(J.2.12-9)/치매노인 상담전화 개설 청암노인복지대표 이성희씨, "간호용품-예방법등 정보제공에 최선"(M.2.12-4)/노인고민 전화로 해결, 치매상담전화등 개설 잇따라(HA.2.13-8)
- <장애인> 장애인등기 큰 정성 거리 '자선공연', 15일노 노래팀 '한마음' 7개월째 이웃사랑 실천, 자활복지관 건립 목표... 합동공연 계획도(HA.2.7-19)/장애인에 열차좌석표 마련을(D.2.9-28)/이땅의 사람들: 동인지 '글다래' 펴낸 광주 장애인 34명, 아픔으로 키운 재활열매, 서로서로 눈·손·발 되어 문학교류(HA.2.9-16)
- <교육> 교사자격 '유효기간제' 도입, 교육문제 본질 의면한 처사(D.2.7-27)/독자의 눈: '경쟁력 구호아래 인간화 교육 실종(HA.2.8-14)/'해직'에 켜진 교사의 내면고백, 정영상씨 유고시집·산문집 잇따라 발간(HA.2.9-12)/책해적교사 56명 복직추가, 서울시 교육청(HA.2.13-14)/교장 임기제 철회 결의 '불법' 집단행동 아닌가, 교사 중심 교육자상 위해 '단임제' 마땅(HA.2.13-10)/한겨레는 단: 김우창, 능력과 필요에 따른 교육
- <환경> 남북참가 동북아 환경회의, 일·중·러 함께 4월 베이징 6-7월 서울서(HA.2.7-2)/월요논단: '그린라운드' 선진국체무 더 크다, 김상중(H.2.7-19)/GR과교 '발등의 불', 국제기구 '환경인증제' 도입 추진, 미국선 무역규제 입법화 적극적(D.2.8-13)/미·일 '환경협정' 서명, 클린턴-호스카와 정상회담, "공해방지 기술개발 협력"(H.2.13-16)
- <통일> 아침햇살: 김명걸, '라이 파이한'과 통일특례법(HA.2.9-4)/남침때 미국개입 반대 55%, 미국인 아시아 인식조사(HA.2.9-5)/그때 그사람: 남북한 남매 찾포로 해후 한필성씨, 이산가족 '만남장소' 있었으면(J.2.12-17)
- <주한미군> 미군의 한국인 택시기사 불법연행, 한국 검찰서 '감금죄' 등 수사마땅(HA.2.7-13)
- <중국인권> 중 구정범죄 소탕, 사형만 2백여명(D.2.9-7)
- <민중미술> 막내린 '제도권', '민중미술' 평가하기, 민중미술 15년전, "이적표현물서 예술로 복권" 작가들 감회(J.2.7-12)/"이젠 민중미술도 개혁할 때다", 민미협대표 재선 임옥상씨, 이념집착은 예술창작 장애물(C.2.7-21)/민중미술 한시대 파노라마, "민중미술 15년전"을 보고, 성완경, 세상모습 아우른 목직한 질량감(HA.2.8-11)/"공인, 첫 나들이 의 것만 미소, '민중미술 15년전'을 보고, 강성원(D.2.9-14)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서대표 "이번 사건을 통해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운동의 모범을 보일 터"

「인권운동 사랑방」은 서준식대표 명의로 지난 1월 4일 마약복용혐의 피의자인 김동철(37)씨를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전인천지검 영월지청(현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15일 독직폭행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2면 참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서대표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인권유린을 당한 후에 대응을 해도 소용

없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사람들은 의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가혹수사를 국민들이 감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대표는 또 "검찰이 과거의 권위적 습성때문에 안희권검사를 형사입건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

지만, 수사기관의 가혹행위가 더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안검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안검사의 고발장 접수 이후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지속적인 고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폭력남편 살해 이순심씨 살인혐의로 기소

수원지검 구본원 검사는 지난 달 16일 새벽 술에 취한 채로 부인을 폭행하던 남편 이진태(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달 17일 구속된 이순심씨를 1월 31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이순심씨는 남편 이씨가 술에 취해 망치로 가재도구를 부수고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로 남편 이씨를 찔러 사망하게 했다.

주위 사람들에 의하면 숨진 이씨는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부인을 폭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행사를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년 10월부터 93년 8월말까지 모두 8백 50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으나,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단 10건인 1.17%로 나타났다. 나머지 8백 40건은 미군측에서 자체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미군범죄에 대해 제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특히 「한미행정협정」의 여러 문제 조항중 미군범죄와 관련된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하는 '굴욕적인' 22조(본문, 합의의사록)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행정협정」 본문과 합의의사록 22조 규정에 의하여 윤금씨 살해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케네스 마클 일병도 한국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날때까지는 미군당국이 구금하도록 되어 있다.

미군범죄를 죄목별로 보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1백 67건, \*절도 60건, \*관세법 위반 32건, \*기타 40건순이다.

한편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신부)에서는 '주한미군범죄신고센터'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2면 참조).

### 알림

#### □월간 「함께걸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한국특수교육 1백주년 기념 기획시리즈 <1>-한국특수교육의 성립과정/호주 장애우 복지현장을 찾아 <1>-유배지, 그 어두운 기억을 넘어서/우르르 이라운드, 무너진 농촌의 꿈과 현실/자본주의 노동시장과 장애인의 고용계약/장애예방과 복지사회

#### □나눔터-한국성폭력상담소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내용과 문제점-(최영애 성폭력상담소 소장)/직장내 성희롱(최은순 변호사)/위기상담(조중신 상담부장)/적어도 피임은 책임지는 멋진 남자(이미경, 단국대 여성학 강사)

#### □민족의 자존을 다시 찾는 작은 불씨-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요내용 : 윤금이 항소심 진행과정/미군범죄 재판권 행사를 1.17%/미군범죄신고센터 센터개설/미군헌병의 횡포/계속되는 미군범죄-한창열씨 사건등

**고 김남주 시인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선보)

## 고 발 장

고 발 인 : 서 준 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B/D 501호

피고발인 : 안 희 권(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前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독직폭행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사 실

1. 피고발인은 1994. 1. 4 오전 1시경 마약복용혐의자로 인천지검에 연행된 김동철(37세, 인천시 남구 송의2동 300)씨를 술에 취한채 철제의자와 구둣발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2. 피해자 김동철씨는 피고발인에게 당한 폭행으로 머리가 터지고 녹골 1대가 부러지는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3. 피고발인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 김동철씨를 대마초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인도 없이 석방하였으며 수사관들을 김씨의 입원실로 보내 설득을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4.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제반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커녕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것은 단순 폭력행위보다 더 엄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합니다

속수무책인 미군범죄,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미군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군들에게 피해를 당하시거나 미군범죄를 목격하시면 즉각 신고해 주십시오. 아울러 운동본부에서는 미군주둔지역의 단체와 주민들이 「미군범죄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주한미군 범죄센터」 개설지역 : 동두천, 평택, 준비지역:의정부, 송탄, 대구, 군산 등  
 ·연락처 :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 (전화:744-1211)

\*정확한 현장검증과 증거확보를 위해 비디오카메라와 사진기가 필요하니 뜻있는 분들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5. 또한 피고발인은 지난해 4월에도 마약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때린후 폭행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준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10일에도 인천 중부경찰서 당직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당직과장을 바꾸라고 요구한 뒤 당직형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한 채 수사관 2명과 함께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입니다.

6. 이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직권남용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폐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의당 사법조치되어야 합니다.

7. 지난해 11월 6일 대검 검찰부(안강민 검사장)는 전국 5대 고검 및 12개 지검 검찰 전담부장등이 참석한 전국 검찰전담검사회의에서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폭언, 폭행과 같은 가혹행위에 대해 징계는 물론 형사 입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도인 검찰총장은 취임직후 수사과정중의 폭행은 물론 철야수사와 같은 간접적 폭력도 금지할 것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 첨 부 자 료

1. 조선일보 94.1.11(31면) 기사
2. 중앙일보 94.1.11(23면) 기사
3. 조선일보 94.1.13(3면) 사실
4. 중앙일보 94.1.14(3면) 사실

1994년 2월 15일

고 발 인 서 준 식(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대검찰청 키증

### 제6기 장애우대학 수강생 모집

장애우의 참모습 세워나가는 배움의 한파당

개 강 : 1994년 3월 18일 개강  
 문 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521-5364)  
 수강료 : 4만5천원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로 「대구경북지역 제1기 장애우대학」을 3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7시에 개설됩니다.  
 문의: 053-628-5085나 02-521-5364

### 공 판 안 내

□2월 18일(금)  
 ·10시, 백성기,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309호, 항소심, 선고  
 ·2시, 황주석의 3인,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309호, 항소심, 1차



●인터뷰/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 집행위원장 조세 라무스 호르타●

편집자주: 호주에서 진행중인 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DTP)에 참석했던 이성훈씨가 <인권하루소식>을 위해 창립지이자 강사인 동티모르 조세 라무스 호르타와 지난 2월 4일 DTP 사무실에서 인터뷰한 것입니다.

조세 라무스 호르타(46)씨는 동티모르 저항운동평의회(CNRM)의 공동의장으로 1975년 12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무력침공하기 3일전에 극적으로 탈출하여 당시의 동티모르 정부 대표로 유엔을 무대로 활발한 국제외교운동을 펼쳐왔다. 그의 뛰어난 외교감과 능력은 인도네시아 정부를 여러번 곤경에 처하게 하였고 유엔총회와 인권위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동티모르 문제가 항상 국제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89년부터는 자신의 국제연대 및 외교경험을 동티모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민중운동단체와 나누기 위해 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Diplomacy Training Program:DTP)을 창설하였다.

◇먼저 바쁘신데 <인권하루소식>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5회 DTP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는데 주요 진행자이자 강사로서 먼저 간단히 이번 프로그램을 평가해 주십시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DTP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유익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열심히 참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속에서 유엔인권위등 여러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DTP는 능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후속작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자신이 속한 단체와 관련하여 어떻게 배운 것을 활용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DTP의 후속작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DTP를 마친 참가자들이 갖게 되는 고민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상황이 달라 뭐라고 일반화하여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후속작업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유감스럽게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곳 시드니까지 와서 배우기에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청이 있으면 각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약 1주일내지 2주일 정도 일정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DTP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네팔, 태국 등지에서 이러한 현지연수를 실시했고, 올해 5월에 태국에서 버마 인권운동가들을 위해서 단기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DTP 참가자 가운데 일부는

돌아간 후에 저희를 초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위원회나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89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DTP를 시작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도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제가 75년 조국 동티모르를 탈출하여 다음날 곧장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 도착했을때 사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조국의 급박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저의 안중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유엔에 대해 공부한 것도 없어 모든 것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제3세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도 저와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고 능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도움을 주곤 했지만 그럴수록 보다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마침 호주 시드니의 뉴사우스 웨일즈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Garth Nettheim 씨가 저의 구상에 적극 지지를 보내주셨고, John Scott-Murphy씨가 실무를 자원하여 법과대학 부설로 지금의 DTP가 정식으로 89년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내용과 방법이 변화하였는데 올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약간의 조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작년 3월의 방콕대회와 6월의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통하여 많은 한국 인권활동가를 만나셨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인권운동발전을 위해 한국인권운동이 해야할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인권운동은 지난 20-30년 동안 군사독재와 지난한 투쟁을 겪어온 해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그러한 경험을 가진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인권운동이 작년 방콕과 비엔나대회를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 한국처럼 풍부한 운동경험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방콕과 비엔나대회에서 한국 참가자들의 단결된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말, 마리 알카티리씨가 한국을 3박 4일간 방문하여 동티모르 연대캠페인을 하였는데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현재 동티모르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뒤늦게나마 미리 알카티리씨의 한국방문동안 협조해

“유엔이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장이 되도록 민간단체 노력 필요”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알카티리씨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지만 최근 동티모르 이슈는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위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압력때문에 항상 인도네시아 입장을 지지했던 아시아의 국가들도 작년 유엔 인권위에서 처음으로 미국, 호주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일부는 기권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유엔 인권위 한국대표를 만났는데 동티모르 이슈에 호의적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최근 저희는 아시아 지역에서 동티모르 지원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마리 알카티리씨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것도 그러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5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아의 동티모르 지원단체들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2월 4일 DTP가 끝나서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 제네바로 가는데 이번 회의에서 동티모르와 관련된 주요의제는 무엇입니까?

-알다시피 그 동안의 즐거운 노력의 결과 작년 인권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정책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과거의 관행에 젖어 방심한 탓도 있습니다. 작년 결의안으로 동티모르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 정부와 유엔에서의 외교전쟁이 이제 본격화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막대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자국에 유리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티모르 정책에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폭로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전략은 비밀이라 현재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동안의 즐거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데 동티모르 이슈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닙니다. 최근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변화된 국제정세와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계속된 저항에 직면하여 과연 동티모르를 지금처럼 점령하고 있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하르토가 고령으로 이번의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이므로 임기중에 어떤 형태로든 동티모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최근의 유엔 개혁논의에서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함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하는데 자국의 인권상황과 동티모르 문제는 당연히 자격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인권탄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과거처럼 서방국가들이 자국의 군사,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무조건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권탄압을 묵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아마 동티모르는 3-5년 안에 독립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3-5년이라고요? 개인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동티모르 저항평의회와 공식의견입니까? 너무 낙관적으로 사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미래에 대한 견해를 공식화

유엔은 인권문제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으므로 유엔기구를 주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는 없지만 저항평의회에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3-5년후면 독립의 기회가 오리라 예상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그다지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최근 유엔이 결국 인권보다는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무대이고 모든 결정이 국력에 바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예로 들며 유엔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민간단체(NGO)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유엔 활동 경험이 많은 조세씨는 유엔을 인권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려 회의론을 피력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상당부분 긍정합니다. 저도 유엔을 무대로 18년을 일해 오면서 좌절감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은 정당한 근거를 가진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전세계의 많은 인권문제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제도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유엔기구를 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체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유엔에 대한 극단적 편향, 즉 유엔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것이다라는 환상, 또는 유엔을 대상으로 시간과 돈을 쓰기에 얻는 것이 하나도 없고 유엔 자체가 무용하기에 폐지해버려야 한다는 과격 입장을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

유엔은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많은 제도와 기구처럼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United Nations이 아니라 United Government라는 표현이 상징하듯이 유엔이 각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모여 협상하는 외교의 장인 것을 분명 사실이지만 유엔현황에 나타났듯이 국제적 인권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많이 경험했듯이 유엔에 있는 국제공무원과 각 나라 대표단 가운데 인권에 대해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과 협력, 연대해서 어떻게 유엔의 정책을 몇몇 강대국의 이익이 아니라 약소국가의 이익과 보편적인 인권이 증진되도록 만들어 가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유엔관계자들은 NGO가 유엔인권관련 전체의 70%를 차지한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NGO의 참여없이 UN의 많은 사업, 특히 인권관련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보다 많은 NGO가 유엔에 대해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이 단순하게 국익에 기반한 외교의 장으로 전략하지 않고 인권보호와 증진의 도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모든 NGO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알다시피 DTP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주: 동티모르 독립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에서 발행한 자료집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을 참조.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형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 연행, 민정련 회원 10%에 해당  
"문민경찰, 민정련과 '범죄와의 전쟁' 벌이고 있다"

16일 오전 8시 30분과 오전 10시에 전남경찰청 보안 수사대는 '민중정치연합' 순천지부장 김영기(32세) 씨, '민정련 광주지부' 연 대사업부장 신현숙씨 등 13명을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원이란 혐의를 두고 거주지 및 직장에서 연행하고, '민정련' 광주·목포·순천지부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긴급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연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에서 연행된 송진이(25세, 금성알프스, 광주지부 회원) 씨의 연행장면을 목격한 김화정(광주지부 회원) 씨에 따르면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기는 커녕 소재지와 혐의사실 및 변호사 선임권 등 기본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를 전혀 이행하

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연행된 후 언론사 등을 통해 소재지를 파악한 가족들과 '민정련' 회원들이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광주 남부경찰서 옆)에 접견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연행한 사실을 잡아떼다가 끝내 접견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전남경찰청의 수사태도는 올해 들어서 잇따라 일어난 경찰과 검찰의 가혹행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잠안재우기 수사등의

가혹수사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민정련'의 한 관계자는 "작년 7월 12일 광주지부 조직부장 김영경씨의 연행 이후 12차례에 걸쳐 88명을 연행하였고, 광주 전남지역은 작년 12월 15일 26명 연행, 올 1월 5일 2명 연행한 이후 오늘 13명을 연행하였다"며 "소위 문민경찰이 합법적 정치조직노선을 천명한 민정련과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분노를 표시하였다.

### 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 제시

1년 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국방부는 양심수 군문제 해결방안으로 형기를 합산해 2년 이상이 된 수형자나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7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하고 제2국민역에 편

입시키겠다는 시국관련 수형자의 처리기준을 확정하여 16일 발표하였다. 16일 밝힌 국방부의 입장은 그동안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 등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수배 및 수감생활을 한 시국관련 수형자의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국회에 청원, 지난 12월 17일 국

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시국관련 수형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군문제 해결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한 국회 보고내용이 미리 알려진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병역처리기준을 마련, 병역법 시행령이 확정되는 오는 4월부터 모든 수형경험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양군모'는 "이번 국방부의 발표에 의하면 30%만이 해당이 돼 수감하기 어렵다"며 "기왕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시국관련 청년학생들에게 정상적 사회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양군모'의 대표 김정훈 씨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27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보통기업의 입사 상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25세인 사람도 군 복무를 마칠 경우 역시 27세가 넘어 정상적 사회복귀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구체적으로 27세 이상으로 1년미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지만 오랜 수배생활을 한 사실이 감안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이 병역법 시행령 개선취지에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민가협 제23차 양심수석방 국보법 철폐 목요일집회

### 고 김남주 시인 추모집회

장소:17일(목) 2시 탑골공원  
내용:노래마울의 추모곡, 서경원의원 부인 임선순씨가 읽고 있는 양심수 사례발표 등

### 인권운동 실무자를 위한 제9차 월례세미나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과 대책방안

장사: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월 24일(목) 저녁 7시

국내 약 1만 사업장에 6-8만명이 취업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알아본다.

## 국제 인권 소식

### 94년 방콕 아태지역 인권 단체회의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 공대위 유일한 사전준비등 적극적 활동 펼쳐

지난 2월 2-3일간 태국 방콕 출라롱콘 대학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인권단체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모임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22개국 56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유엔인권대회 이후의 활동계획과 체계에 대해서 논의한 후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 활동의 지침으로 삼기로 하였다. 한국에서는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에서 각 1인씩 2명(천정배, 이대훈)이 '인권단체 공대위,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틀 동안의 회의는, 1)93년 방콕 인권단체회의에서 제안된 후속 활동상황 검토 2)비엔나대회 이후의 각 분야 후속 활동상황 3)아태지역 인권운동 연대활동 제안문 검토 4)주요 세계회의에 제기할 민간단체들의 입장-북경여성대회, 사회적 발전에 대한 세계정상회의(95년 3월) 5)결의안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안에서는 주요내용으로서 ①아태지역 민간단체들의 활동·협력 확대, ②연락과 협의추진 책임을 맡는 촉진단(FACILITATION TEAM) 구성, ③촉진단의 첫 10인 구성원을 선정(한국 공대위 포함), ④촉진단 구성원은 각국, 각 소지역의 협의를 즉각 추진해야 하며, 각자의 선임사항을 추진받아야 함, ⑤아태지역 전체 민간단체회의를 2년 주기로 개최, ⑥촉진단의 권한으로 연락, 소식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긴급행동 및 호소제도의 개선 확대, 전체 민간단체회의 준비, 재정확보 등이 합의되었다.

한국 공대위는 잠정적으로 동북아시아 인권단체들간의 연락 및 협의를 추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다. 결의안 중에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긴급구원 연락체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홍콩에 소재한 '아시아민족발전센터 ACPP'의 'Hot Line'을 확대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의 합의까지 이루어진 아태지역의 인권단체회의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범적인 모습이었으며, 기존의 저명한 국제조직에서도 직접 회의에 참관하며 높은 기대와 찬사를 표하였다.

한국 공대위는 이번 회의에서 유일하게 사전에 준비된 서면 제안문을 제출하고 기초발제를 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쳤으며, 그에 기초하여 2월 21-23일 사이에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인권단체 연락담당자회의(NLC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NLC회의는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회기중에 개최되며 또한 인권위원회 안전중의 하나가 민간단체들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 주목할 만하다(자세한 내용은 오는 2월 26일 예정인 사랑방 주최 '국제동향 월례브리핑'에서 소개된다).

\*NLC회의: 세계 민간 인권단체들 사이의 연락체계 등을 구성하기 위해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기간중에 구성.

### 유엔 북경 세계여성대회 소식(2)

유엔, 북경여성대회에 제출할 나라별 보고서 작성 요령 발표

유엔 사무국은 95년 북경여성대회에 제출될 나라별 보고서의 표준 작성지침을 발표하였다. 표준 작성지침은 나라별 여성상황 평가가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지침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①여성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이슈와 조치들 강조
- ②50쪽 이내의 간결한 문서로 작성
- ③통계 및 전문연구기관의 참여하여 작성
- ④수량지표의 사용
- ⑤연령별 특정 서술
- ⑥개선조치와 연관된 상황지표를 사용할 것
- ⑦80년대 이전과 이후의 상황 검토, 국제적 지원내용의 검토, 향후 전략 및 목표의 3단계 구성으로 작성할 것 등이다.

### 「사회변화를 위한 여성교육」 국제회의

캐나다 오타와대학, 올해 8월 13-17일

캐나다 오타와대학 등 2개 대학 주최로 사회변화와 여성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올해 8월 13-17일 캐나다에서 개최된다.

회의의 주제는 「사회변화, 여성학 그리고 여성문제 연구」이다. 사회변화를 위한 고등하고 이상의 여성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초청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타와대학으로 문의 바랍니다(팩스: 613-564-7461).

### 필리핀 인권단체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권선언문 작성, 의회 채택을 요구중

필리핀 인권운동연합(PAHR: 인권하루소식·2월 3일자)에블린 PHARA 사무국장 인터뷰 참조)은 지난해 12월 9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전체 인권기관들의 합의로 「필리핀 인권 및 민중의 권리선언」을 작성하여, 의회에 이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지역차원의 인권제도가 현상이 없는 아시아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로 평가되는 이 선언문은 아시아 각국의 나라별 인권선언 채택에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전문과 14장으로 구성된 이 선언문은 개인의 권리만 다루는 서방의 선언문과는 달리 민중의 집단적 권리도 다루고 있어 흥미롭다(선언문(영문)은 사랑방으로 문의).

###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 참석 이선훈씨 귀국

2월 26일 '국제동향 월례브리핑'에서 특별보고

1달간의 DTP 교육을 받고 귀국한 이선훈씨는 2월 26일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열리는 '국제동향 월례브리핑' 모임에서 특별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뀌  
"비전향장기수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주민 접촉 취소했다"

통일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비전향 장기수인 김영태(63)씨에게 제3국을 통한 재북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했으나 북한주민 접촉신청시 비전향 장기수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냉전시대 악습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원은 "김씨가 북한주민 접촉 신청시 제출서류인 신원진술서에 과거경력을 성실히 기재해야 하는데도 비전향 장기수였던 사실을 누락시켰으므로, 보안관찰법상 비전향 장기수는 제3국에 출국할 수 없으므로 취소한다"는 통지서를 15일 발송했다.

통일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김씨가 북한주민 접촉 승인을 요청할 때 그가 '비전향 장기수'인지 '정말로' 물었다"며 "비전향장기수는 국가정책상 제3국

을 통해서 북한주민과 만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통신문 허용된다"고 밝혔다. 통일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전시대적이고 냉전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며, 더욱더 '보안관찰법'은 여형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강한 법률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한편 김영태씨의 가족상봉과 송환을 추진해온 '한교협 총북인권선교협의회'(회장 김정용 명암교회 목사)는 "통일원이 김씨에 대해 재북가족과의 상봉승인을 취소한 것은 일관성 없는 처사이며 김씨를 정치적 이용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오는 21일(월) 오후 3시 통일원에 대표단을 보내 이에 항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50년 입대하

여 54년 빨치산 활동중에서 지리산 함양지역에서 국군에게 체포된 후 71년 만기 출소하였다. 그후 75년 사

### "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민가협, 「고 김남주시인 추모 목요일집회」서 주장

민가협은 13일 사망한 고 김남주 시인의 추모집회를 17일 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추모집회는 '노래마술'이 나와 '저 창살에 햇살이' '함께가자 우리 이길' 등 고 김남주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불렀고, 고규태 시인이 나와 감옥살이를 표현한 고인의 시 '방'을 낭송했다.

전 서경원 의원(진주교도소 수감중) 부인 임선순씨는 "남편이 고문후유증때문에 다리 통증으로 목발

회안전법의 제정으로 다시 수감되어 89년 출소하여 청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40년간 가족과 만나지 못했던 김씨를 위해 지난 해 12월 2일 '한교협 총북인권선교위'는 충북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김영태 노인 송환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국민 서명전' '대통령에게 편지보내기운동' 등 송환운동을 벌여왔다.

을 짚고 다니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눈이 잘 안보이는 상태"라고 증언했다.

한편 민가협에 따르면 김익진씨(65세, 26년 복역)가 후각과 미각 상실 및 위장질환, 손유희씨(66세)가 위암과 후두암, 김선명씨(70세, 44년 복역)가 백내장등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양심수가 많다"며, "김남주시인이 오랜 감옥생활로 얻은 암으로 사망했듯이 제2, 제3의 김남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치료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정부 1년"

일시: 2월 21일(월) 오후 4-6시,  
장소: 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522-9811)

- 발제: 1. 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곽노현 교수  
2. 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교수  
3.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 박원순변호사

·토론: 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장명국 석탑노동연 구원장/남규선 민가협 총무/이양원 변호사/민자당·민주당 인권위원과 법무부 인권과정은 교섭중

### 인권운동 실무자를 위한 제9차 월례세미나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과 대책방안

강사: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월 24일(목) 저녁 7시,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국내 약 1만 사업장에 6-8만명이 취업해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제대로 못하고,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실태와 그 대책을 알아본다.

## 광주고법 강병섭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치" 즉결심판에선 "다음 공판에 최후진술 보장"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2년을 선고 받은 강태중씨에 대한 항소심 첫공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제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임시금치' 처분을 내리고, 또한 이에 항의하는 방청객에게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같은 날 오후의 즉결심판에서 다음 재판에 최후진술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석방했다.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강태중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씨가 재판부를 공격하는 최후진술을 시작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강씨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재판부가 박탈하는 것"이라며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임시금치를 명해 정리에 의해서 끌려 나가 법원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고 '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가 밝혔다.

### 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석방추구 서명 벌이기로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에 이어 17일 낮 12시경 '민정련 광주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병규(27세,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애쓸 것과 민정련 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재판부는 방청중이던 박석진씨가 이에 항의하자 박씨에게 앞에 나와서 발언하라고 한 후 강씨와 같이 '임시금치'를 내렸다. 이날 오후에 열린 '임시금치'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같은 재판부는 강씨와 박씨가 "최후진술 기회를 봉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다음 공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하겠다"면서도 '임시금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이들을 석방했다.

### MBC '시사매거진 2580' 신설 인권유린 등 다룰 방침

문화방송 보도제작국은 오는 2월 27일부터 '시사매거진 2580'(담당 이은호 보도국 차장)이라는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인물중심, 사건중심, 현장중심을 제작원칙으로 삼고, "건강한 민주사회, 인간이 중심되는 사회 건설"을 취지로 사회의 각종 비리와 병폐에 대한 고발, 현안에 대한 탐사보도를 위주로 다룰 예정이다.

"시청자 주권시대"에 맞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청자의 제보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명칭이 제보전화 번호와 같게 하였다(789-2580). 또한 각 단체의 소식지등 간행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방영시간은 일요일 저녁 9시 30분-10시 20분이다.

## 2.17 기만적 국방부 발표안 규탄과 국회청원 완전수용 촉구대회

일시: 2월 18일 오후 2시 ·장소: 국회앞  
주최: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784-4666)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중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회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자신문은 판사의 임의'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법관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구두선으로 그칠 염려도 있다. 또한 법무부나 점·경의 다른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개선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 개혁의 한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정치판사 등에 대한 인적청산문제는 이번 제도개혁안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건의문

1994년 2월 16일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3년 11월 10일 출범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대법원장께서 부의하신 26개 안건과 위원들이 제의한 3개안건에 관하여 12차의 분과위원회별 회의와 3차의 전체회의에서 토의·의결한 바에 따라, 1994년 2월 16일 다음과 같이 대법원장께 건의를 드립니다.

### 가. 국민의 편의를 보다 널리 보장하기 위한 건의

(1)간이한 상설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 가)전국 각지에 간이한 상설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나)우선적으로는 현재의 순회심판소 중 일부를 순차로 개편하여 간이한 상설법원으로 하고 판사를 상주시키며, 이를 순차로 확대하고, 다)간이한 상설법원의 판사는 상당한 연령과 경력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2)고등법원지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 제주지역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의 성과를 보아 설치여부를 검토한다.

(3)서울민·형사지방법원 통합과 관련하여 ;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을 통합한다.

(4)행정소송의 심급구조와 관련하여 ; 가)행정소송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고, 나)행정소송사건의 제1심 사물관할은 단독관할과 합의관할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다)행정소송사건의 상소심구조는 일반 민·형사사건과 동일하게 하고, 라)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치절차로 한다.

### 나. 국민의 인권을 더욱 수호하기 위한 건의

(1)구속제도와 관련하여 ;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되 다만, 판사의 피의자신문은 임의적인 것으로 한다. (2)불구속제판의 원칙과 관련하여 ; 기소전 보석제도를 도입한다.



다. 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한 건의

(1)판사의 임용제도 및 부판사제도와 관련하여 ; 가)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판사임용자격을 7년 이상의 법조경력... (2)법원에 대한 근무평정과 관련하여 ; 법원에 대한 근무평정제도를 도입하되, 다만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3)제1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판사임용자격을 강화할 전제로 하여 ; 가)민사사건에 관하여는, 소가에 의한 합의·단독의 구별을 폐지하여 모두 단독사건으로 하고, 다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은 재정절차를 통하여 합의부에서 처리하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대법원규칙 등으로 재정기준을 마련하며, 나)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사물관할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의 범위를 조정하여 합의사건의 범위를 축소한다.

(4)민사항소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판사임용자격을 강화할 전제로 하여 ; 가)민사항소심이 사후심이 되도록 항소이유를 법정하되 사실오인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나)항소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며, 다)항소심의 심판범위를 항소이유서에 적시한 항소이유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라)무자력한 항소인을 위하여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제도를 대폭 활성화한다.

(5)남상고의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 과거의 상고허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실심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전제하에, 무익한 남상고를 거를 수 있는 여과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대법관을 일부 증원하는 것도 고려해 본다.

(6)특허소송의 심급구조와 관련하여 ; 사실심을 고등법원에서 관할하게 하고,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한다.

(7)사법보좌관제도와 관련하여 ; 가)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하고, 나)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는 판사의 본질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야에 관하여 판사에 대한 이의절차를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8)원로법조인의 활용과 관련하여 ; 원로법조인력을 간이한 상설법원의 판사로 활용한다.

라. 사법권의 독립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건의

(1)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과 관련하여 ; 정부가 법원의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예산안에 부기하며, 국회가 법원의 세출예산액을 증액할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명기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둔다.

(2)대법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관련하여 ; 현행 헌법의 범위 내에서는, 대법원이 법원의 조직, 인사, 재판절차, 동기, 호적 등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로

규정한다.

(3)판사의 직급과 관련하여 ; 가)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 직급의 모든 판사에 대하여 단일호봉제(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승진연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판사에게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상당하는 수준의 처우를 적절히 보장하는 내용의 호봉제)를 채택하고, 나)고등법원 판사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순환보직을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며, 다)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의 순환보직을 실시한다.

(4)법관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 법원조직법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성격은 자문기구로 하며, 위원수는 11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5)법관회의와 관련하여 ; 법원조직법에 법관회의의 설치근거를 두고, 법관회의의 성격은 자문기구로 하여, 전국규모의 법관회의는 두지 아니한다.

(6)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방식과 관련하여 ; 가)현행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방식에 의할 경우 대법원판결 등에 있어서 임명권자의 영향력 행사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관추천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이나 국회청문회 절차의 의무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앞으로 대법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여주고, 나)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시켜 조속히 구성하여 임명제정에 앞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며, 다만 그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한다.

(7)법관의 외부기관 파견제한과 관련하여 ; 법원조직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의 외부기관 파견근무를 허용하며, 정치적인 목적이나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는 법관의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원칙적인 규정을 법원조직법에 두도록 한다.

마. 법률문화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건의

(1)사법연구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 가칭 '사법연구원'을 설치하되, 사법연수원, 한국법학원, 대학교 등 다른 외부연구기관과의 협조관계도 고려하여 업무내용을 결정한다.

(2)전문법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 서울지역에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설치한다.

바.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1)사법연수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법조인력의 양성문제 (2)동기·호적청의 설치문제 등은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그 도입을 우선 유보한다.

사. 시기상조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한 건의

(1)법원경찰대의 신설 (2)지역별 법관임용제도 (3)법원모욕에 대한 제재의 강화 (4)서울시내 지원 등 합의를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등은 시기상조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검찰, 증거없이 김삼석씨 15년·김은주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18일 결심공판, 피고인들의 "조작사건" 주장에 대한 판결 주목돼

김삼석·김은주씨 남매에 대한 결심공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재판장 김형식) 심리로 18일 10시에 311회 법정에서 열렸다.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되었던 김씨남매는 6개월이 되는 2월 28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변호인, 인권단체 등이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성고문 등 가혹행위와 프락치에 의한 합점수사로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의 재일공작조직인 한통련 의장 광동의 등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삼석·김은주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8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검찰은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저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기욱 변호사들은 변론요지서에서 "본결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다가가고 있는 현재

국보법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위헌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보법의 사망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였다(2면 참조).

또한 변호인들은 "검찰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한통련은 과거 김영삼대통령이 프락치에 의한 합점수사로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변호인들은 "자백이 외의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헌법 제12조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은주씨는 "오빠인 김삼석씨를 수사하기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삼석씨는 최후진술에서 "문민시대에도 고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안기부는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

다"고 말했다.

김은주씨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은 배인오씨도 똑같은 피해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고통후에 다가올 통일의 기쁨을 깨닫게 되었으며,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논고에 앞서 '민자당 발간 정책참고자료, 한겨레신문, 말, 국보법 공청회 자료집, 범민족대회 자료집' 등의 자료수집에 대하여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을 위한 한통련은 "김정권에 대한 '반정부단체'도 더더욱

강조했다. '반국가단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자백이 외의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헌법 제12조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은주씨는 "오빠인 김삼석씨를 수사하기 위한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삼석씨는 최후진술에서 "문민시대에도 고문으로 양심적인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안기부는 이제는 일본이나 미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

양심수 군면제 대상자 명단 발표해야

국방부 64%, 병무청 30%로 달라

국방부에서 지난 17일 시국관련자의 64%이상이 군면제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병무청에서는 29.7%라고 밝혀 그 비율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명단공개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심수 군면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에 따르면 "18일 병무청에 문의하여, 국방부의 발표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계건형의 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지 못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다"며 5명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정부 1년"

일시:2월 21일(월) 오후4-6시, 장소: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522-9811)

- 발제:1.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곽노현 교수 2.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교수 3.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 박원순변호사

·토론: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장명국 석남노동연 구원장/남규선 민가협 총무/이양원 변호사/민자당·민주당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과정은 교섭중



변론요지서(52쪽이나 부분 발췌함)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 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1)피고인 김삼석은 93.9.8. 정오경 피고인 집에서(중략) 안기부 수사관 10여명에 의해 구속영장도 없이 구타당하면서 불법체포, 연행되었습니다.  
(중략) 남산 안기부내로 연행되자 체육복을 입게 하고, 3-4일간은 잠을 거의 재우지 않으면서 수없이 몸을 구타하면서, "북한에 언제 갔다왔느냐", "일본에서 북한의 누구와 만났느냐", "국내연계조직을 대라"는 등 위협을 하면서 구타와 기합(원산폭격, 서서 무릎조그리기등) 기타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유도신문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중략) 9.10자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내용을 읽어보겠다는 요청을 수사책임자에게 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중략) 피고인이 불법연행된지 일주일정도 지난 9.15.경 화장실에서 160번 명찰을 단 수사관이 다가와 치솔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중략)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그당시 임신 8개월째인 부인을 연행조사하겠다고 협박을 계속 하였으며(중략) 위와같은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피고인은 자해를 할 생각으로 9.20. 변호인 접견시 갑자기 일어나 벽에 강하게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며(중략) 피고인 김삼석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허위자백을 하게 된데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다른 대항 방법이 없어서 자해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2)김은주 피고인은 93.9.8. 정오경 고속버스터미널 근처에서 영장없이 불법체포된 후, 햇빛없는 지하실에서 전혀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를 강행하였으며, (중략) 머리를 잡아당겨 벽에 치고 뺨을 때리는 일을 수없이 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했으며, 변호인 접견후 수사관들이 변호인과의 대화내용을 다 진술하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관들이 교대로 추궁하였습니다.  
조사받는 도중 "이거 안되겠구만, 다른 방으로 데려가 야지, 옷 벗어야겠구만,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볼래" 하는 등 폭언과 성적 모욕을 심하게 당했으며,(중략)  
(3)(중략) (4)또한 (중략)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93.9.10. 발부되었으며, 93. 9.10. 19시경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피고인들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93.9.8. 정오경에 불법체포, 연행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은 최소한 2일 7시간(약55시간) 동안 불법체포, 구금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나. 안기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안기부는 93.9.24. 피고인들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재일 북한대남공작조직연계 간첩 김삼석·김은주 보도자료'를 언론기관들에 배포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형법 제126조 소정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어느곳에도 피고인들이 형법상 또는 국가보안법상 "간첩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기부는 피고인들이 마치 "간첩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도록 함으로써(중략) 피고인들의 명예를 극도로 훼손하였습니다.  
다. 안기부의 "프락치공작" 행위

(1)"남누리영상"(진보적인 영화운동단체)의 대표인 배인오씨가 1993년초에 피고인들과 알게 되어 가까워졌는데(중략) 수사과정에서 김은주 피고인이 배인오씨가 안기부의 프락치라는 확신을 가진 중요한 이유를 몇가지 들면,  
첫째, 연행되기 전까지 배인오씨와 여러차례 만났는데, 피고인들을 1년이상 미행했다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배인오씨의 이름이나 배인오씨에 대하여 전혀 말하지 않는 점  
둘째, 자백을 강요받을 때 배인오의 부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해도 수사관이 배인오씨의 다른 인물물 대라며 추궁한 점  
셋째, 김은주 피고인과 배인오씨와 한총련 관계자와(중략) 만난 일이 있는데(중략) 한총련 관계자의 사진만 보여주고 배인오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넷째, 배인오씨가 간곡하게 한총련에 전해줄 것을 부탁한 북한관련 소재자 2권  
다섯째, 체포연행될 당시 배인오씨의 부탁으로 나가게 된 상황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안기부가 배인오씨를 프락치로 활용하여 피고인들에게 합정수사를 하였다고 생각하며, 안기부의 고도의 술책에 의해 김은주 피고인이 체포·연행 당시 북한관련 책자를 소지하게 하고 그 행위가 일본사람과 재일동교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중략) 재일동포와 국내인 사이의 활동과 교류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또한 이 사건 중인 박상희의 진술에 의하면(중략) 92.6.말에 배인오가 "어디 가야 된다. 그러나 거기는 가기 싫다. 이내창 열사가 왜 죽었는지 아니? 이내창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안기부원들과 함께 5일동안 부산 등지를 돌아다녔으며, (중략) 그 기간중에 현금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등을 침해함(중략)

3. 북한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민족공동체임(중략)  
나.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으로 북한은 국보법 제2조 소정의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음(중략)  
다. '남북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표되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음(중략)  
라. 대법원 판결의 모순(중략)  
마. 따라서(중략)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4. 한총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한총련의 전신 한민통의 결성 경위(중략)  
나. 한민통의 활동내용  
(1)박정희정권 반대투쟁시기(중략)  
(2)전두환정권 반대투쟁시기(중략)  
다. 한총련의 출범과 활동

(1)노태우정권에 반대한 시기(중략)  
(2)김영삼정권을 지지하고 활동한 시기(중략)  
다. 한총련의 지령  
1. 우리는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 활동한다.(중략)  
2. 우리는 군부독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중략)  
3. 우리는 민족분단의 비극사에 중지부를 찍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 분투한다.(중략)  
4. 우리는 반전·반핵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비동맹중립화를 정착(중략) 노력한다.(중략)  
5. 우리는 재일동포의 민족적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해외동포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중략)  
6. 우리는 자주·민주·평화 이념에 입각하여 국제연대운동을 더욱 강화한다(중략) 1989년 2월 12일  
라. 한총련은 더이상 반정부단체나 반국가단체가 아님(중략) 과거의 정권이 '반정부단체'와 '반국가단체'를 혼동하여 한민통과 한총련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대법원 판결로 그렇게 판시한 것이 있으나, 한총련은 결코 이제는 김영삼정권에 대한 '반정부단체'도 아니며 더욱이 '반국가단체'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중략)

5. 개별적 공소사실 부분  
가. 피고인 김삼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첫째, '반핵평화' 제3.4호, 민자당 '정책참고자료', '평화공존시 군의 위상에 대한 국민의식', '국내신문의 핵관련 동향', '소요진압작전', '국보법공정회 자료집', '국내신문의 군사관련 동향', '자주적 민주군대로의 전환', '평화의 길', '범민족대회 자료'등 국가기밀을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피고인이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했다는 것이고, 둘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광동의 또는 이철,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 이좌영, 권용부와 와다나베 아즈코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회합하고, 이좌영, 권용부로부터 위와같은 점을 알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편의제공 하였으며, 이적동조 및 통신, 특수집행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였다는 부분  
(1)(중략)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령(지시나 명령)을 어떤 반국가단체로부터 받았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거의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또한 피고인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중략)국보법 제4조 1항 2호 나목 소정의 '국가기밀'이란 "소위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정보로서 '기밀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정보자료"를 의미하며, '기밀로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그 정보의 내용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누설한 자와 그 정보와의 관계,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의 난이도, 그 정보가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유용성 내지는 중요성 정도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93년 10월 25일 서울형사지법 제25부 판결)  
(중략) 그러나, 피고인이 탐지, 수집했다고 하는 '국가기밀'은 (중략) '기밀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첫째, 공소사실에 국가기밀이라고 적시된 방대한 내용중 그 어느것도 대한민국 관계당국이 '기밀'로서 분류하여 놓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둘째, 김삼석피고인이 공동집필한 '청년과 군대'의 내용이나 (중략) '자주적 민주군대로의 전환' 등도 어느관계당국이 '기밀' 또는 '군사상 기밀'로 분류하여 놓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더욱이 민자당 '정책참고자료', '평화공존시 군의 위상에 대한 국민의식'(서울대 교수 논문), '국보법개폐 공청회 자료집', '평화의 길', '범민족대회 자료집'등은 어느누가 보아도 그 내용이 '기밀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3)김삼석 피고인은 위와같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정보자료들을 (중략) '군사문제 연구자'로서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들이라고 생각하여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중략)  
다. 피고인 김삼석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중략) 회합하고, (중략) 금품을 수수하거나 편의제공하였다는 점 (중략) 또한 피고인은 93. 5. 초순경 이좌영씨의 소개로 한이철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있으나, 안기부의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처럼 '조평통 참사로 있는 이철'이라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범의나 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마땅히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중략)

6. 맺음말  
바로 엊그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어제 우리나라 정부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조건부로 중단하며,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을 개시한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야흐로 남북관계는 분열과 반목의 시대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되어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남북통일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곧 마련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국보법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위헌법률입니다.  
국보법은 지난 40여년간 정권안보를 위해 수많은 민주애국 인사들을 차가운 감방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게 했던 최대의 악법입니다.  
이 악법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남북합의서 채택 등과 더불어 더욱 분출하는 통일열망에 의해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남북한 동포와 해외동포 더 나아가 이 사건 관련 한총련 관계자들에게 있어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지상과제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안일을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해 애써온 젊은 청년들입니다.  
현명하신 재판부께서는 이제 그 생명이 다해 무너져내리는 이 반통일적 악법에 대하여 기존의 냉전과 반목의 잣대를 떠나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의 잣대로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가보안법 사망선고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진보와 전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입장에서 피고인들에게 마땅히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형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21일 항소심 끝나,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김삼석 재판에 관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25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은 황씨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90년 9월 북한 서재필 초대소에

서 남한에는 1천여개의 핵이 배치돼 있다는 발언을 국가기밀누설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황씨의 말은 의신과 국내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밝힌 것이고 정보의 내용도 핵문제 전문가가 아닌 황씨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어서 국가기밀로서의 사실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원심에서 재야운동권 동향이나 재야 인사의 신원정보를 누설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

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와 변호인이 '북에서 받은 미화 25만달러는 공작금이 아닌 장길산 원작료이며, 황씨가 대변인으로 일한 범민련 해외본부는 이적단체가 아니고, 황씨가 북한

에 대해 쓴 기행문들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려는 것'이라는 등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2월 28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삼석씨 남매의 경우 군사 및 핵관련 신문스크랩이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탐지·수집죄'인지, 한동련이 반국가단체인지, 안기부의 고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공 판 안 내◆

- ◇22일(화)·허탁, 국보법, 319호 10시, 선고  
·이상욱, 국보법, 423호 3시, 속행
- ◇23일(수)·김옥기, 국보법, 418호 10시, 선고
- ◇25일(금)·이종수, 군무이탈, 303호 10시, 6회  
·김주옥, 집시법, 317호 11시, 6회  
·신학철, 국보법, 422호 3시, 속행

◇93년 12월 29일 최 장관이 인권단체에 보낸 해명서(중략) 인터뷰 도중 기자와 민주주의의 성취도에 관해 얘기를 나누던 중 안기부에 누가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상문제라면 안기부가 다룰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이어서 사상문제라면 잠을 안 재워도 되느냐고 물어 안된다는 뜻으로 "물론이지"라고 대답한 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중략) 저는 '말'지가 소재목으로 뽑은 '사상범은 잠 안재우는 고문해도 돼'라는 말은 결코 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94년 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답변(속기록 중에서) 유인태의원:(중략)말지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문이 없어야 한다는 소신 피력을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만 우선 그 사실여부가 그러한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중략)

최 내무부장관:(중략)저는 물고문도 당한 사람입니다.(중략) 이런 아픔이 있는 저로서는 제가 내무부장관에 있는 동안에는 고문을 없앨 것입니다. 단 저신이 말지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제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서류에 한해서 기사화한다는 전제하에서...그 다음에는 off로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 저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되겠다는 것을 큰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 최내무부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 큰 교훈 얻어" 실천내용은 없어  
 19일 국회본회의 유인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지난 2월 19일 임시국회에서 말지 인터뷰에서 한 "사상범은 잠은 안재워도 된다"는 발언의 진위여부를 묻는 유인태 민주당의원에 질의에 대해 "표현이 잘못되었다. 말을 아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얻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등 8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28일 \*공개사과, 구체적인 인권보장 계획 마련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즉각 구속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의 요구한 바 있다.

### 최형우 내무부장관 발언 부분 발췌

◇말지 1월호 인터뷰 (중략)-그러면 사상문제로 잡혀 들어간 사람은 잠을 안 재워도 됩니까. "물론이지. 그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문제...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사상문제로 잡혀온 사람은 안기부에서 잠 안 재우는 고문을 해도 되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했지요. "국가를 전복하자는 것은 안되지. 국민들만 사람에게 물어봐도 한 사람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얘기하지."

##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 토론회(지상중계)

###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홍성우변호사, 이하 '민변') 주최로 "인권추진에서 본 김영삼정부 1년"이란 토론회가 2월 21일(월) 오후 4시에 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 대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3명의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지난 1년간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 전반 특히 다양한 인권관련 법규의 개정과 실시를 검토한 후 "비록 지난 1년간의 김영삼정부하에서 인권상황이 현상적으로 나아진 듯 하지만 본질적으로 개선된 점은 별로 없다"는 결론을 맺고 3시간이 넘게 걸린 대토론회의 막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노현교수(방송통신대)는 "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 홍준형교수(아주대)는 "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약20분 가량의 발제를 하였고, 이어서 강수립 민주당 인권위원장, 남규선 민가협 총무, 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및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은 발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각자가 본 김영삼정부의 인권상황에 대한 비평을 하였다.

주가지수는 650에서 930, 인권은? 판 교수는 발제에서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와 '법과 질서 강화를 통한 국가기강 확립'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인권'이란 단어가 실증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 즉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

의 본질은 약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정의내린 판 교수는 김영삼정부 아래서 주가지수가 650에서 930으로 올라갔지만 인권지수가 과연 그렇게 증가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유적으로 인권상황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판 교수는 또한 신한국의 구호에는 경제만이 있을 뿐 인권이 빠져있기에 처음부터 체계적이며 정책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없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도 김영삼정부 아래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은 별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문민정부'의 본래 의미가 왜곡, 퇴색되어 문민시대가 민중이 아닌 문민엘리트라는 새로운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로 전락하고 있다고 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을 비판하였다.

개혁은 법제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홍 교수는 "선택과 배제의 개혁,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국가보안법 개혁, 안기부법 개정, 정보공개법 제정, 행정절차법, 공무원 노동 3권 인정 입법, 사회복지입법, 환경보전 및 산업안전 관련법률 개선 등을 비롯한 지난 1년간 논의되었던 주요 법규를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홍교수는 김영삼정부의 개혁을 둘러싼 인치(人治)와 법치(法治)는 쟁을 언급하면서 참된 개혁의 핵심은 '조치'가 아닌 '제도화' 특히 법

제도의 개편이 시작이자 마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또 홍 교수는 현정부가 과거 군사정권에 봉사했던 정치적 지배집단 또는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기존의 판토키구를 거의 그대로 승계받은 점과 따라서 개혁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들과 이해관계의 상충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음을 '원조적' 제약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과거 군사정권의 유물인 악법 개혁에 이렇다 할 법정폭이 표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문민정부의 개혁이 일회적 에피소드로 끝나 버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

이제 과거청산은 시민의 힘으로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청산에 대한 발제 서두에서 최근 유행하는 '미래화' '국제화'가 단지 물건을 잘 만들어 외국에 많이 수출하자는 단순한 리임을 비판하면서 최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족적이며 자아도취적인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박 변호사는 나치의 전범에 대한 처리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거청산은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의 문제이자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심제도, 공소시효문제, 특별검사제도, 국제법의 유용성 및 한계 등 과거청산과 관련된 법적 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 선택과 배제의 개혁,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에 대한 평가 홍준형(아주대 교수)

1. 머릿말
- 1) 김영삼정부 1년, 무엇을 했다 2) 문민정부와 개혁
- 3) 법제개혁과 인권
2. 개혁과 법치주의
3. 인권에 관한 법제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1) 문민정부의 법제개혁, 무엇을 볼 것인가
- 2) 법제개혁의 성과, 무엇이 문제인가
- 공안권력의 통제와 인권의 보호/정보의 자유와 알권리의 보호/정치적 권리의 보호/행정관정에 있어 개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노동에 관한 인권의 보호/사회복지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건강한 환경과 안전한 삶에 대한 권리의 보호/사회적 자율성의 신장/사법개혁을 통한 인권의 보호
- 3) 인권에 관한 문민정부의 법제개혁: 평가
4. 인권을 위한 법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5. 맺는 말

### 김영삼 정권의 인권정책: 분석과 전망

박노현(방송통신대 교수)

1. 서론과 개관
2. 인권의 본질: 약자의 권리
3. 김영삼 정권의 인권정책: 분석과 평가
- 1) 과거청산정책
- 2) 반인권악법 폐지정책: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 3) 인권관련기구에 대한 정책
- 4) 인권의식 제고정책: 인권교육 및 홍보방안
4. 맺는 말: 문민정부의 엘리트성을 경계한다



또 박 변호사는 "과거청산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특히 과거청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미를 비롯한 전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대적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이제 과거청산을 더이상 현정부에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민운동이나 인권운동 단체의 투쟁과 압력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시민입법운동, 고소 및 고발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법무부 인권과가 사건 무마 내지 호도하고, 외무부 인권과는 외국 과장하여 선전·홍보만을 치중하는 현 정부의 인권기구의 과행성을 지적하면서 대안으로 정부내에 인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인권청'이나 국회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하거나 법무부에 제대로 된 '국'이라도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첫 토론자인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김영삼정부하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개혁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면서 부분적인 개혁은 있었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아니라 민주당의 압력과 투쟁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남규선 민가협 총무는 최근의 인권 침해 사례로 44년 복역 최장기수인 김선명씨와 안기부에서 고문·합정수사로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삼석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들고 나서, 부당한 재판에 대한 제삼제도가 거의 불가능한 절차상 장애와 부당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마당에 인권문제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은 잔인한 위선이며, 배신이다. 우리 이웃들이 과거의 어두운 상처로 지금도 쓰라림을 당하고 있을 때 과거는 지나간 어제일 수 없다. 그것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현재이며, 그 상처의 치유없는 미래는 우리의 편안과 행복의 보장일 수 없다.**

성들을 지적하였다.

토론문안으로 제출한 이양원 변호사는 정치적 피압박자의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인권이 개선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의 인권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 변호사는 과거 군사정부의 탄압에서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았던 인권운동은 소위 문민정부하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권운동방식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권문제의 최대 해법은 시민 의권의식의 제고라고 말하였다.

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는 김영삼정부하에서 인권상황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인권하루소식'에서 현정부를 '문민정부'가 아니라 '문민적 정부'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소위 문민정부가 군사정권하에서 자행되었던 인권침해를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음은 스스로 군사정부와의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드러낸 증거라고 지적하면서, 그 예로 강기훈사건, 문국진 고문피해사건, 황석영씨 사건, 최근 민정련 회원 구속사태 등을 열거하였다. 또한 국가보안법

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대표는 인권교육이 미래의 열쇠이므로 유치원때부터 인권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국민학생에게는 아동의 권리를, 고등학생에게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경찰관이나 교도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대한 변형이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은 지난 90년과 93년의 감옥생활을 비교하면서 현상적으로 정치범에 대한 대우가 다소 좋아진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반수형자에게는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인권운동의 대상이 소수의 양심수(정치범)에 국한되지 말고 다수인 보통사람과 청소년 등 일반범에게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 또는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기득권 계층이 개혁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정부가 한계이자 모순임을 지적하면서 일하는 사람 즉 민중의 참여가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검사 및 판사가 인권증진과 보호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음은 전제하면서 "사법연수원생이 1주일만 구치소 생활을 하면 인권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면서, 실제로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에게 감옥경험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변의 박인제 변호사는 발제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년간 인권에 부분적이며 제한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인권정책이 부재했고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기에 김영삼 정부 1년에 대해 비판적 회의론이 지배적이었다고 토론회를 평가하였다.

3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진행된 토론회는 주최측인 민변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인권과장, 민자당 인권관련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보다 본격적이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과거청산'의 법적 재문제**

-인권침해사건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박원순(변호사)

1. 서론
- 1)치워지지 않는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 2)우리 현대사와 '과거청산'의 과제
- 3)'과거청산'의 개념과 범주
2. 미해결의 사건으로 가득찬 한국 현대사
3. 과거청산의 법적 도구, 그 유효성과 한계
- 1)개판 2)재심제도 3)시효문제 4)특별검사제도
- 5)국제법상의 근거와 그 이용가능성
4. 김영삼 정부하에서 '과거청산'의 시종
- 1)김영삼 정부하에서 '과거청산' 시발
- 2)또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매몰되는 '과거청산작업'
5. 외국에서의 경험과 사례
- 1)살아오는 역사
- 2)남미등 대규모 유권국에서의 경험과 교훈
6. 결론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홍제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노동자 등 9명연행 확인

소재지 전혀 알리지 않아 22일 밤 10시 현재까지도 소재미확인된 사람도

경찰청은 21일부터 22일 새벽에 걸쳐 노래패 '희망새' 대표 김태일(30), 이창렬(30), 주태봉(29, 거제 대우조선 노조 대의원)씨등 11명을 긴급구속장을 발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고 노래패 '희망새' 사무실을 압수수색, 공연대본, 유인물, 컴퓨터 등 42품목을 압수했다.

경찰청 보안국은 이들에 대한 연행과정에서 긴급구속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행진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새벽 희망새 사무실 압수수색후 연행된 조재현(27)씨는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행선지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당시 사무실에 같이 있던 사람이 전했다.

또한 경찰은 연행된 사람의 가족들이 소재지를 물

라 21일 종일 소재파악을 하다가 22일 오전 이태성(연대), 21일 오후 조용찬(28, 거제 대우조선 노조 대의원), 주태봉(29, 거제 대우조선 노조 대의원)씨 등을 접견도중 경찰 수사 관계자가 이씨를 불러놓고 "자신이 옆에 있는 곳에서 접견을 하라"고 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의 비밀 보장 요구를 무시하기도 하였다.

경찰은 연행된 주태봉, 김창훈(서울지하철노조 대의원) 등은 '노동자 해방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 조직과 관련된 혐의로 연행, 22일 밤중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일·이창렬·조재현(27)씨 등은 어떤 혐의로 어디로 연행되었는지 22일 21시까지 확인되지

않다가 22일 밤 늦게야 기자를 통해서 경찰청 보안3과(장안동 대공분실)에 있으며 '희망새'가 94년 전국순회공연예정인 '아침은 빛나라'의 대본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혀졌다.

노래패 '희망새'(대표 김태일)은 93년 3월 부산에서 창립, 통일과 민족음악을 추구하며 활동해왔다. 이외의 연행자는 임현숙(명지대 4년), 조계은(24세, 노동자)

**'장애우 대학' 6기 개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3월 18일부터 13주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소장 이성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6기 장애우 대학'(학장 김성재)이 3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다. 91년 9월부터 1년에 두차례씩 열리는 '장애우 대학'은 지금까지 5차례 진행되었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250여명에 이른다.

'장애우 대학'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설립초기에 많은 외부강연이 있었지만 장애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힘들었던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 '장애우'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장애인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모색하고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

「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 6월에 4년 집유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된 허탁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자격정지 2년 6개월에 4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자민통 그룹의 활동목표가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90년 11월 처음 발표된 '자민통그룹' 사건은 송갑석(4기 전대협 의장)씨 등이 복역중이고 '자민통'을 구성하고 '수괴'로 발표된 허탁씨는 이 단체가 구성되었다고 하는 시기에 군복무중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조작'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등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개설되었다고 한다.

강의내용은 '장애발생의 원인과 문제점',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과 방향' 등 13개 강좌로 되어 있고, 강사는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원혜영(민주당 의원), 권도용교수(한신대 재활학과)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1기부터 5기까지의 주요 수강생은 대학의 장애인 관련학과나 수화, 점자반 등의 동아리 학생들과 장애인 복지사업가, 종교단체 판관자등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총동문회와 각 기별 동문회 등이 구성되어 있다. 문의처 전화 521-5364

**「인권운동사랑방」 제9차 월례세미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현황과 그 대책**

백두산 만금이나 큰 의무와 밴당이 속 만한 권리 불법취업자라고 그들은 그나마 있는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큰 돈 벌려고 왔다가 손잘리고 발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버려진 외국인 노동자! 진짜 '국제화'·'세계화'는 외국인 노동자도 보편타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강사 :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와 외국인 노동자 1인  
참가비 : 3천원  
\*간단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4일-20일)

편집자주 <>안은 주제어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편수를 나타냅니다. 주요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H.2.15-15): 한국일보 2월 15일자 15면.

#### 인권단체/법률/법조

- 국제사면위, 국가별 인권비교 안해(H.2.15-15)
- <사법개혁안>상고심사제 도입 확정, 司法委, 사법제도 개혁안 대법건의(C.2.17-1)/사법제도개혁안, 인권보장·공정재판·사법권강화, 일부 현심감결여·대법입장 편중 지적도(C.2.17-5)/사법부 예산요구권 확보, 사법제도발전위, 24개 개혁안 확정건의(D.2.17-31)/사법위원의안 내용과 전망, 사법부 독립성에 강한 의지(D.2.17-30)/사법위 확정 개혁안 의미, 인권·공정재판 확립에 중점, 보완장치 반대 의견 수렴등 과제(H.2.17-29)/사법제도 개혁안 주요내용, 행정소송 1심 지방법원서 관할(H.2.17-30)/마무리된 개혁안 내용과 의미, 사법제도 "수술"발판 마련(J.2.17-22)/사설:사법부의 새 과제(J.2.17-3)/사설:사법부의 법률 서비스(D.2.18-3)/서울민형사지법 분리된 사연과 뒷얘기, 5-16군사정부 멋대로 사법부 요리, 영장기간 갖자 눈엣가시 취급(D.2.18-30)/사설:논의 더 필요한 사법위 개혁안(HA.2.18-3)/사설:사법개혁 실천의지 따라야(H.2.18-3)/학계서 내용은 사법개혁안, "사시개선·법조인 증원", 사법위원은 기득권·집단이익 집착(J.2.18-22)/"사법시험 합격자 대폭 늘려야", 학계 '개혁안', 대법관 학자 임용 주장(HA.2.18-18)/사법개선추진단 구성, 대법원(H.2.20-21)
- <구속영장심사>구속영장 심사 대폭 개선,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으면 기각", 서울형사지법(C.2.14-31)/피의자 구속 최대 억제, 서울형사지법(H.2.14-31)/형사재판 "불구속원칙" 엄격 적용, 서울형사지법(D.2.14-30)/불구속원칙 적용의미, "구속은 최후수단" 영장주의 본뜻 살려(D.2.14-30)/구속영장 발부심사 강화, 서울형사지법(HA.2.14-19)/사설:잘못된 "구속 위주" 수사관행(J.2.14-3)/사설:"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HA.2.15-3)
- 사설:의원입법의 풍토를(C.2.14-3)
- 시각:개방시대 "사법"도 변해야 한다(J.2.17-31)
- 정년 채운 법관 10년간 3명뿐, 과중업무에 보수낮아 한창 일할 때 변호사로(HA.2.18-18)
- <검사장회의>불법분규 적극 대처, 전국검사장회의(D.2.18-31)/검찰 노동쟁의 적극조정 나서기로(HA.2.18-18)/검찰 대공수사 강화, 노사분규·불법시위 강력대응(H.2.18-31)/안기부 활동 축소따라 검찰, 대공수사 강화, 노사분규·공직비리 엄단(J.2.17-23)/"대공 수사장화" 대검공안부 조직개편 착수(HA.2.19-14)
- <법률시장개방>법률시장 개방촉구 안팎, 예상보다 빠른 대응세 변호사업계 파란 예고(C.2.14-3)/미, 시장개방 공세 확산, 외국어학원·법률서비스업까지(HA.2.16-1)/미, 법률시장 개방 공식요구, 국무성 공문(C.2.14-1)
- 이땅의 사람들:울산 인권변호사 윤인섭씨, '기름밥' 출

신 노동자 대변인, '현충련' 등 고문받아 합리적 노사 조율(HA.2.16-16)

#### 경찰, 가혹행위

- <연재:경찰과 시민사회> 1: 신뢰받는 공권력; 범법행자 보다 "윤리선생님"(J.2.14-1)/2:日夜철의 대변신; 악명 벗고 친절한 봉사자로(J.2.15-1)/3: 탈법은 그냥 안된다; 존엄엔 "부처" 위반엔 "열라대왕"(J.2.17-1)/4: 영·일의 인권보호; 피의자수사엔 권리부터 설명(J.2.18-1)/5: 日신 엘리트출세 코스; 지방생중 명문대출신 많아(J.2.19-1)
- 경찰조직개편 새 쟁점으로, "국가-지방 2원화...업무 분담", 민주 개정법안 마련 민자선 반대(D.2.14-2)
- 경영기법을 접목 치안품질 높인다, 경찰청, "고객만족" 개념등 도입(J.2.17-23)
- 경관 1인당 담당 주민수 수도권 1,089명, 서울은 463명, 강력사건 발생 수도권 더 많아(C.2.15-28)
- 경찰 "치부고백" 책냈다, 경남경찰청, 백여사례 실어 "반성"(J.2.16-23)
- <독행검사고발>피의자폭행 검사 고발, 서준식씨(HA.2.16-19)/피의자폭행 검사, 서준식씨가 고발(J.2.16-22)/폭행물의 안검사 고발, "인권운동" 서준식씨(H.2.16-31)/피의자폭행 검사 고발, "인권운동 사랑방"(D.2.16-31)
- 강제연행 시민 12시간 불법감금(HA.2.19-15)
- 최대무 '고문발언' 해명(HA.2.20-4)

#### 시민운동

- "20-30대 고발의식 희박", 남녀직장인 7백명 설문, 사회비리·부정부패 고발경험 14%(H.2.17-31)
- "신공합족진법 주민의사 소외" 국회 개정청원 추진, 인천시민협, 서명운동(H.2.17-29)
- 시민 수질검사 봉쇄, 서울시, "앞으론 국가기관에만 의뢰", 알루미늄 검출 따른 보복 인상(J.2.17-21)
- 부동산약관, "소비자에 가장 불리", 消保院, (H.2.17-17)
-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가 마찰, "都開公 일방인상" 주민들 무효청구소송(D.2.18-27)
- 시민운동 총연대기구 결성, 'सान별공조' 탈피 세력화 추진...농업·교육개혁 역점, 경실련·환경운동연합·YMCA 등 참여(HA.2.18-18)
- "보험증 안가져오면 일반수가", 의보서비스 있다 없다, 환불절차 복잡, 말뚝인 "쌈보험시대"(C.2.18-31)

#### 틀쳐벌

- 공소시효 촉박 12·12사태 진상 밝혀질까, 검찰 본격수사 안팎, 최규하씨등 "증립위치"에 기대(D.2.16-15)
- 사진:"삼청교육 피해 배상하라"(HA.2.16-17)

#### 양심수

- 시국관련 1년이상형 선고자 27세 넘으면 징역면제
- 사노맹 재건기도 13명 추가로 검거(J.2.17-23)

#### 여성

- <중군위안부>중군위안부 책임자 처벌 유엔인권위서 본격 거론(D.2.18-2)/"일제위안부" 책임자 처벌론 제기, 유엔인권위, "국제조약 유효"...공식문서 배포(C.2.18-6)
- <남녀평등>남학생에도 성지식 가르쳐야, 차별적 성인식 깨뜨려야 건전한 인격형성 도움(D.2.14-16)/병역가산 점제 남녀평등 위배(H.2.18-21)/중고생 3명중 2명

- "남녀 능력차 없다", 청소년연 2천명 생활·의식조사(J.2.20-17)
- 여성공무원 급증...전체의 26%, 총무처 발표 '93공무원 센서스'(C.2.14-3)
- 인천서 「페미니즘」 영화축제, 여성의 억압된 삶 조명, 여성신장·성폭력등 소재 12편 상영(H.2.16-27)
- 교수 성추문 일본열도 시골, 교토대 야노 노벨상 심사 등 화려한 경력 소유자(HA.2.15-12)

#### 장애인/복지시설/노인

- 모든 건물 휠체어로 의무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강화, 보사부(H.2.14-30)
- 지하철 5-8호선 45개역 장애인 승강시설 설치, 매표소·승강장, 요철 계단·점자 안내판도(C.2.16-29)
- <음성꽃동네>음성꽃동네 원생 10명 사고로 숨져, 1년동안 감출 사실 드러나(HA.2.20-1)/음성꽃동네 원생사망 사건 안팎, 교계·후원자 뜻밖 소식에 충격, 반강제노역도 밝혀져(HA.2.20-14)/"꽃동네", 장애인 목욕물에 화상, 1년간 치료...10명 숨져(C.2.20-19)
- 보육원 장삿속 경영 충격, 근무없는 원장 일가족 교사로 등록(HA.2.20-10)
- 정신요양소 일반인 개방, 강제노역·학대행위 감시, 보사부, 정신병자치료 「사회복귀」에 중점(C.2.18-30)
- 실버시대 "노인의 전화", 첫선, 건강·취업·레저등 다양한 정보제공(H.2.14-12)

#### 산업재해

- 작년 산재사망 2,249명, 손실 4조3천억, 사망자·보상액 최초로 감소(H.2.18-29)/작년 산재손실 4조3천억원, 사망 2천2백49명...첫 감소, 산재율 1.3%...선진국 수준의 2배(D.2.18-30)
- 직업병 유소견자 모두 산재처리 해줘야(D.2.16-19)
- 나의의견:공단지역 접합수출 전문의 두자(D.2.18-19)
- "운전자 업무시간의 사망해도 법정근무일 초과면 산재 인정", 대전고법 판결(D.2.19-29)

#### 노동

- 법적 다툼없는 복직요구자 「제3자」에 해당, 대법원 판결(H.2.16-29)/해고노동자, 복직요구 노조활동 법질차 밝지 않으면 「제3자개입」, 대법원판결(HA.2.16-18)
- 사설:노총-경총, '임금합의' 해서는 안된다(HA.2.18-3)
- 근로기준법 어긋나는 공무원규정 바뀌어야,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보다 되레 적어(HA.2.18-14)
- 자보 김사장등 15명 송치, 부당노동행위(HA.2.19-14)
- 노조 정치활동 허용 검토, 정부 국회답변, 하반기 노동조합법 개정(J.2.20-1)

#### 교육

- 우리농촌 살리자; 벽지학교 통폐합 교육걱정 커간다, 10년간 국민학교 8백여곳 폐교(D.2.14-5)
- "교사자격증 유효기간제" 반대(H.2.16-21)
- "출근부 날인거부" 교사2명 파면, 태릉중, 서울시 교육청, "일시적 전교조 경력단절" 교사들 주장(C.2.17-31)
- 전교조 1천3백35명 복직될듯, 교육부, 활동 계속 뜻비친 15명은 제외(HA.2.19-14)
- 더불어 생각하며; '해직교사 전원복직' 왜 안지키나, 자의적 판단으로 제외(HA.2.20-10)

#### 환경·반핵·군축

- 핵폐기물 전시장 "개점 휴업", "왜지 점점" 50일간 민간인 2명 관람(C.2.15-31)
- 그린피스 4월22일께 내한, 반핵 해상시위 계획(H.2.15-31)
- 전세계 핵개발 어느정도인가, 상임5개국의 16개국 "핵보유 의혹"(H.2.17-7)
- 환경영양평가 엉터리 아닌가, "남대천 양수발전소 건설", 간담회 지상중계(M.2.18-22)
- 산업폐기물 교역 강력 규제, 「미니GR」 바젤협약 비상, 정부, 25일 유엔에 가입서...90일내 효력, 재활용 국내산업계 큰 타격, 고철·폐지등 연6백20만톤 수입(H.2.18-31)
- 환경운동가 워크숍참석 JATAN 구로다씨, "열대림 훼손·환경악화 남의 일 아니죠"(C.2.19-21)
- 프레온 대체품도 환경파괴 논란, "HFC 온난화 유발" 지적...업계 비상한 관심(HA.2.19-8)
- "저방사능 폐기물 서해투기", 중국, 산업쓰레기와 함께 해상 38곳, "앞으론 투기금지 런던협약 준수"(H.2.19-2)
- 고성능재고무기 미 대량 매각계획, 한국-태국등 대상(H.2.15-1)/미, "재고무기" 대량판매 추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개도국 돈으로 군수산업 지원"(HA.2.15-5)

#### 국제

- 아일랜드인들의 독립운동, 신페인당수 방미후 "눈물겨운 투쟁" 관심고조(H.2.14-4)
- 60만 헝가리인 자치요구, 슬로바키아에 "민족갈등", "인구 10%차지...자율권 줘야"(헝가리), "옛제국 재건지의 깔린 반국가행위"(슬로바키아)(C.2.14-4)
- 유엔 평화군, 눈덩이 경비에 발목, 작년에만 36억달러-회원국 비명, 강대국 분담금 미납(D.2.14-4)
- 해외사설:미국은 베트남 발전에 기여를(HA.94.2.14-6)
- 해외사설:쿠바 금수조치 해제 검토할때(HA.2.14-6)
- 독일금속노조 전면파업조짐(J.2.14-7)
- 아시아국 근로자 고성장의 "희생양", 한상태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 밝혀, 외화벌이 급급 노동환경 뒷전, 앞뒤없는 개발로 환경파괴 위험수준(J.2.15-6)
- 미얀마 수지여사 연금 풀리려나, 군정 5년만에 외부인사 면담허용, 수지 "망명 불고려...민주화운동 계속"(H.2.16-7)
- 베트남 난민, 강제송환 움직임, 홍콩등 30국 "단순피난민" 판단, 난민들 거부시위-단식투쟁도(D.2.18-7)
- 개혁중국의 뒤안, 돈이 몰고온 혼란과 범죄 가난한 곳 일수록 정 넘쳐(HA.2.18-9)
- 남아공 백인 "줄루어 학습봄"(HA.2.19-15)
- 4월총선 앞둔 남아공 무엇이 문제인가, 극우 백인단체 - "흑인기득권 세력" 반발, "내전불사" 위협하며 선거 등록도 거부(HA.2.15-5)
- 남아공 최악 정치학살, 14명 사망 2명 부상(J.2.20-5)
- 치아파스주 마야의 후예들, 멕시코 인디오 생존투쟁 5백년, 스페인 지배후 끝없는 탄압에 신음, 문인·학자 참상고발 "순례" 잇따라(J.2.20-13)
- 고르비 칼럼:대유교 최후통첩은 "악수", 사태악화...새로운 희생자·인권침해 우려(C.2.20-6)
- 일본, 수입 미국쌀 살충제 논란, 수송때 부패 해충발생 막으려 농약뿌려, 시민단체 "허용기준치 높다" 자국에 맞는 검역 요구(J.2.20-17)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구역 10조 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여성·노동단체 '86주년 세계여성의 날' 대회준비

3.8 여성의 날 다양한 행사로 여성축제 만들 방침, '여성선언도 채택'

오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장 양규현), '전국업종노동조합협의회'(의장 권영길),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대표 이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이미경) 등이 '3.8 세계여성의 날 86주년기념 공동위원회'를 구성, '한국여성노동자대회', '한국여성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여성의 날 기념 공동위'는 여성들의 고용평등·고용안정, 모성보호·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성의 날 공동위'는 노래, 연극, 춤 등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여성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여성의 날 공동위'는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향한 제7차 한국여성노동자대회'(3월 7일 오후 3시, 고려대학교)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0회 한국여성대회'(3월 27일 오후 12시, 동국대학교)를 각각 열어 3월 한달 동안 여성계가 안고 있는 무급생리휴가 철폐 등을 여론화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인식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에서도 각 지방노동조합, 여성노동자회, 탁아소 단체 등 여성·노동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가 열려 3월 한달동안 여성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일정은 인천-3월 6일, 부산-3월 8일, 광주-3월 9일

부산-3월 13일. '제7차 여성노동자 대회'는 노래경연, 연극배우 김지숙씨의 일하는 여성을 다룬 모노드라마 등이 어지고, '무급 생리휴가안 철폐, 남녀·직종간 임금 차

별 철폐, 여성의 고용확대와 고용안정' 등을 촉구하는 '94년 여성노동자 선언'을 채택하고, '제10차 한국여성대회'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섬유여성노동자들이 정치적 평등권과 임금인상, 노동조합 건설을 요구하며 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기원을 두고 있다.

##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경찰이 21일과 22일 연행한 '노동자해방 투쟁을 위한 사회주의자들'과 노래패 '희망새' 관련자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접견의 비밀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홍계동 대공분실 및 장안동 대공분실등)은 22일 밤 '노해투사' 사건과 '희망새' 단원들을 수사하면서 잠을 2시간 정도밖에 재우지 않고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시 수사관이 접견내용을 기록하는 등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해투사' 관련자로 연행된 김창훈씨를 접견한 변호인에게도 '홍계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대화내용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한편 '홍계동 대공분실'은 23일 김창훈씨를 제외하고는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경찰이 '당연

히' '관행적'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가혹행위를 해 지난 19일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제임하는 동안 고문을 없앨 것"이라는 발언이 무색해지고 있다.

노래패 '희망새'는 94년 전국순회공연계획중인 '아침은 밝아' 공연대본이 북한을 찬양하고 있다는 혐의로 연행되었고, '노해투사' 관련자들은 지난 해 10월 효창공원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유인물을 뿌리는 등 '무장폭력혁명'을 부추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희망새' 관련으로 22일 연행된 조병용(청년문화연구소 회원)씨 등 2명은 22일 밤 8시 석방되었고, 송현직(대구산업대), 도준형(영남의대 본과4년)씨가 이 사건과 관련, '장안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었으며, 정재영(명지대, 군인)씨가 '노해투사' 사건으로 연행되어 기무사에 이첩되어 있다.

## 국제 인권 소식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1)

◇국제인권단체, 한국 인권정책 비난발언 잇달아  
캐네디인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외권·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

지난 1월 31일부터 6주간의 예정으로 시작된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캐네디인권센터 대표는 2월 18일에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 의제안건(Agenda Item) 10 '모든 형태의 구금과 구속'에 관련된 사람의 인권에 관한 문제(Questions of the Human Rights of All Persons Subjected to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에 참석하여 노태우씨의 예를 경우로 들면서 "문민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권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하였다(2면 참조).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대표도 2월 21일 회의에 참석하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적 갈등과 간첩행위라는 냉전시대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예로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내린 NO. 28/1993 결정의 대상인 장외권, 황대권 및 김성만을 지적하였다(2면 참조).

WSCF 대표는 한국정부에 양성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촉구하였다.

### ◇한국정부 대표, '과거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교적 언사로 치장

이석주 한국정부 대표는 2월 21일 인권위원회 의제안건(Agenda Item) 10에 참석하여 불처벌(면책, impunity) 문제와 실무그룹(Working Group) 활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다(3면 참조).

이 대표는 과거 인권침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내보호제도에 큰 위험이 된다고 "법의 지배를 침해하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체의 결의에 찬 행동 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마치 한국에는 '불처벌'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광주학살의 진상규명 및 처벌' '고문기술자들의 처벌' 등의 문제가 이에 해당되고 있어 국내상황과는 별개의 외교적 수사로 일관했다.

또 한국정부 대표는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 때문에 실무그룹의 활동반경이 제약되고 있다"며 실무그룹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는 전날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보고서에 장외권·김성만·황대권씨 등 한 국상황이 들어 있어 외교용어로 '실무그룹'을 비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민간단체 138개 700여명으로 사상최대 국내에서도 정대협, KONUCH 대표단 참석중

50차 인권위원회에는 민간단체들이 138개 민간단체에서 700여명이 참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신대대책협의회 신혜수 대의협력위원장, 김원웅 민주당 국회의원, KONUCH 대표로 이대훈씨 등이 참석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이 대회기관동안 별도의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2월 21일에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와 국제우회화(IFOR)가 공동주관으로 '일본군위안부(정신대)' 문제 설명회가 있었다.

### 아·태지역 인권워크숍 제3차 회의 6월 서울, 유엔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권워크숍 3차회의가 6월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인권담당 정부관계자와 인권전문가 및 민간단체들이 참석하고, 인권사부국에서 초청한 연사들의 강연과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회의에서는 특정국가의 인권상황은 토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로 인권증진을 위한 국내 및 지역차원의 각종 방안이 토의된다.

제1차 회의는 90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회의는 93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렸다.

### □2월 18일 로버트 케네디인권센터 발언문

(전략)작년에 문민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비엔나 세계 인권대회에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운동을 이끌었던, 잘 알려진 한 인권운동가는 본국에서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비엔나에서 돌아온 몇주 후, 보안요원(주: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은 그의 변호사가 합법적인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사무실에서 그를 강제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전에 정치적 장기수들이 쓴 팜플렛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0월에 그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년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80여명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활동가, 교수, 학생들 중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위원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대해 주요장어로서 인식한 국가보안법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신중한 시도"를 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있는, 한국의 대통령과의 회의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전 정권하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에 기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100여명 이상의 사건을 재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로버트케네디 인권센터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민정부가 행한 중요한 인권옹호적 조치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것이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의 계

**2월 24일(목) 바로 오늘!**

**「인권운동사랑방」 제9차 월례세미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현황과 그 대책**

백두산 판공이나 큰 의무와 배당이 속 만한 권력 불법취업자라고 그들은 그나마 있는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큰 돈 벌려고 왔다가 손찰리고 발부러지기 십상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버려진 외국인 노동자! 진짜 '국제화' '세계화'는 외국인 노동자도 보편타당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월 24일(목) 오후 6시 30분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장사 : 박석윤(노동정책연구소)와 외국인 노동자 1인 참가비 : 3천원  
\*간단한 식사가 제공됩니다.



속적 사용을 허락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사용은 자국민에게 합법적인 다당제 선거에의 참여를 아직도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서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이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것이 문서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들의 권리, 특히 그중에서도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주고 받고 개인적 자유와 신체적 보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권리들을 침해하는 속에서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구금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법률로 사람들은 무한정 구금되고, 공권력이 남용되는 조건에서 신문받으며,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이 부정됩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많은 형태를 취하고 여러 이름으로 출현하고 있지만, 공권력의 남용을 위한 속임수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 법률들은 위협적이고 무섭고 위협적인 것입니다; 이 법률들은 모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그리고 정치·경제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위원회에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국제인권문서에 잘 명시되어 있듯이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위원회에서 특히 공공질서(Public order) 및 이와 관련된 국가안보의 관심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고, 공공질서 조항을 이해적으로 적용하는데 합법성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본권을 향유하는데 그러한 법률이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고 분별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하의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를 착수토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월 21일 세계기독교학생연맹(WSCF) 발언문

(전략) 우리는 버마의 군부집단(Military junta)에 의해 조성된 부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에서 계속 구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악법조항이 존재하고 오용됨으로써 이러한 법에 종속된 사람들은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버마에서 일어났던 두번의 평화시위 이후에 발생했듯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요구를 용감하게 주장하는 학생은 누구나 즉각 자동적으로 군부에 의해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에서 해방된 나라에서도 학생과 사람들에게 이러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학생들과 학생운동 활동가에게 적용되고 있는 한국이 바로 그 예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제정한 공식통계에 따르면 1993년 1월부터 8월까지 국가보안법에 의해 11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한국민간인권단체 공동대책위원회(KONUCH)에 따르면 1994년 2월 1일 현재 264명의 양심수가 감옥에 있으며 이 가운데 80퍼센트가 넘는 220명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의 양심수가 학생 및 학생운동 활동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속의 이유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적 갈등과 간첩행위라는 냉전시대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내린 No. 28/1993 결정의 대상인 장의권, 황대권 및 김성만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정부가

- 1) 바로 앞에서 거론한 세명에 대해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계속해서 제기한 요청에 응답하고,
- 2)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며, 그리고
- 3)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를 촉구합니다.

(이하 생략)

□2월 21일 한국정부 대표 발언문

(전략) 의장,

저희 대표단은 인권위원회가 불처벌(면책, Impunity)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Program of Action)은 "국가에 고문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자들을 불처벌하는 입법을 폐기하고 그러한 침해를 소추해야 하며 그범으로써 법의 지배에 균간한 초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보고자와 인권위원회 산하의 실무그룹(Working Group)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파생될 위험한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불처벌은 국내의 인권보호제도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보장제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를 준수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투신이 없이, 또한 법의 지배를 침해하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체의 결의에 찬 행동 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장, 최근에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의 활동은 정부와 민간단체(NGO)로부터 기대 이상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정보에 대한 제한된 접근 때문에 실무그룹의 활동반경이 제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무그룹은 수임사항(Mandate)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신중의 원칙(Principle of discretion)이 도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대표단은 실무그룹이 정보원(Information sources)과 진상조사(fact-finding) 기능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실무그룹이 '실무그룹은 법정(Court of appeal)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증거들을 다시 검토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듯이, 저희 대표단은 실무그룹이 반대편의 절차만을 끝이론대로 이용하여 신속하게 내린 결정들이 수임사항을 수행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의장, 한국정부는 실무그룹과 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자의 역할을 지지합니다. 유엔 인권센터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특별보고자와 실무그룹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저희 대표단은 재원부족으로 실무그룹의 회의가 취소되어야 하거나 최근에 임명된 특별보고자의 활동이 제한되는 사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단은 특별보고자와 실무그룹의 사업을 위해서 재정이 추가로 배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벌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정부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담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

24일 여의도 여성백인회관에서 생활보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의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법의 현황과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전국 자원활동단체협의회」(대표 학과 4년)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은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생, 사회복지관련 단체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지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관련법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장전'의 성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상자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상자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의 권리는 없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이 규정되어 있어 모법의 성격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대상자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하위법규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국가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하게 되어 법률의 실효성이 사실상 소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각종 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또 윤 교수는 법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문제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입금, 정부 이외의 자의 수입금 등으로 사업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의 재원을 사실상 민간에 의존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법자체를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비복지성의 개정방향으로 \*운영·관리지 중심의 현행법에서 대상자의 권리중심으로 법의 목적을 규정, \*법집행에 필요한 교육·연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

모든 과정에서 대상자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수는 입법과정에서 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의원들도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률의 내용을 거의 모를 정도로 들러리를 서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

###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 「내외통신」, 「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제 PC통신동우회 「희망터」만 문제삼아 구속

경찰은 23일 김일성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컴퓨터통신망에 올린 사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씨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남대 의학과)씨 등은 컴퓨터통신망인 데이콤 사회비평동우회 「희망터」에 김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이를 이씨가 회장으로 있는 「희망터」에 올리고, 노래구단 「희망새」가 94년 전국순회공연 계획중인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인 시집 '붉은 산 검은 피'(오봉욱 지음)의 일부를 역시 「희망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다며 입법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복지단체 등이 청원등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서용 보사전문위원(민주당)은 시민단체를 비롯한 복지단체가 당당하게 자기목소리를 입법과정에 전달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이들의 전문역량이 각 사안에 대한 현실적인 개혁노력에 나서야 입법과정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있는 것으로 23일 변호인의 접견결과 밝혀졌다.

또 '아침은 빛나라'의 공연대본 제작자인 조재현(경성대 철학과 휴학)씨는 통신망인 「희망터」에 '시집 붉은 산 검은 피'를 올려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같이 경찰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내외통신에서 김 주석의 신년사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컴퓨터통신망에 올린 것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문민적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사례로 꼽혀온 '이중기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좌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이달의 주제 - 행형>  
미결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분리되고, ... 별도 대우를 받는다  
<인권B규약 10조 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장애인단체 "ESCAP에 보고만을 의식한 요식행위" 반발

정부가 최근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가운데 핵심사안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사부 산하의 기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사부는 지난 15일 장애인단체 관계자, 정부 및 학계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된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관련 정책의 입안·평가·조정 기능을 가진 민간합동의 국가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서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무조정 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사부 산하의 일개 심의기관이 대행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2년마다 1회씩 보고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장애인연맹」(대표 송영욱)은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장애인 복지청 신설'과 '장애인복지 10년위원회'가 꺾전에 생생하다"며, "정부가 주도하여 채택한 10년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가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사부 장관에게 장애인 관련 정책을 건의하게 되어 있는데, 91년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단 두차례 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은 92년 4월 제48차 ESCAP(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아·태 장애인 10년'이 선포되고, 같은 해 12월 '아·태 장애인 10년'의 성공적 개시를 위한 ESCAP회의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각국은 2년마다 장애인 권리의 진전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 정신대 다룬 '소리없는 만가' 일본공연 모금액 3월 1일 '나눔의 집'에 전달 예정

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을 다룬 '소리없는 만가'를 공연한 극단 '한두레'(대표 정연도)가 3월 1일 오후 1시 조계사 내 조항가든에서 '불교인권위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집행위원장 박준호)에 '소리없는 만가'의 일본순회공연에서 '조선의 정신대 할머니를 생각하는 모임' 등에서 모금한 금액 등을 전달한다.

극단 '한두레'의 마승락 씨는 "일본순회공연중 일본인들이 모아준 성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정신대 할머니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나눔의 집'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극단 '한두레'는 '소리없는 만가'를 경희대, 외대 등 전국 19개 대학에서 공연하였고 일본의 정신대

관련단체에서 초청해 일본 13개 지역에서 공연되었다.

### "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김시수 부장판사)는 25일 교통단속 의경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송태일 피고인(42)에게 무죄를 선고, 경찰이 국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단속 의경의 부당한 강제연행을 막기 위해 경관을 밀친 것을 사회통념상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히려 의경이 욕설을 하는 등 무리하게 단속했으며 불법사실이 없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범칙금을 부과해 이에 항의한 것은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송태일 피고인은 지난해 5월 통일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의경이 욕설을 하는 등 과잉단속을 하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강제연행하려는 경관을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됐었다.

### ◇ 바로잡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1호(2월 24일(목)자 1면 '3·8' 여성대회 기사중 '한국여성노동자대회'는 3월 7일이 아니라 3월 5일(토)이므로 바로잡습니다.

## 단체탐방 11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로는 아름답다!'는 글귀속에 '프로' 서 여성이 일하고 있다. 향수냄새가 넘칠 듯한 안락한 사무실, 담당하다 못해 뽀내는 자세로 아름다운 울동으로 일하는 여성! 그런 여성들은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 누가 우리에게 그런 여성을 찾아보기를 강요하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아름다운 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진짜 모습을 찾아 가본다. 서울에서도 자동차와 굴뚝과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가 가장 가득한 구로동 한구석에 '여성복지회관'이라는 작은 건물이 있다. '튼튼이 어린이방'이라는 자그마한 간판이 걸려있는 현관을 들어서면 작은 신발들이 신발장에 가득하고 노랫소리가 콩나물 키재기 하듯 경쾌하게 들려온다. 2층에 올라서면 미니스커트에 핸드폰을 들고 미소짓는 여성이 아니라, 책상마다 스웨터에 청바지를 걸친 사람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일에 열중하고 있다.

원회가 있다. '일하는 여성'은 91년 5월부터 각 지역의 회보를 통합하여 격월로 공동발간하고 있는 잡지이다. 회원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동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회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나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고용문제이다. 여성취업의 성격은 들어가서도 힘들지만 일단 들어가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해온 섬유, 봉제, 신발, 가발 등의 업종은 산업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사양산업화 되었고 그래서 여성들은 점점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으로, 서비스산업의 최말단으로 내몰려 왔으며 임시직 노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지역실태조사에 기반하여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과 연대한 특별위원회의 조직, 대정부정책방안 제출, 여론화 작업등을 해왔다.

둘째, 직업병과 모성보호문제이다. 90년에 '직업병과 모성보호'를 주제로 사례발표회를 가졌고, 특히 모성보호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과 출산휴가 90일을 보장받는 것에 주력하여 현재 어느정도 결실을 보고 있다.

셋째, 탁아소문제이다. 이 부분은 여성들의 장기적 취업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실한 문제이나 국가나 기업의 노력이 아주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 회원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노동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성노동자회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을 크게 나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고용문제이다. 여성취업의 성격은 들어가서도 힘들지만 일단 들어가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주로 종사해온 섬유, 봉제, 신발, 가발 등의 업종은 산업구조조정으로 말미암아 사양산업화 되었고 그래서 여성들은 점점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으로, 서비스산업의 최말단으로 내몰려 왔으며 임시직 노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지역실태조사에 기반하여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과 연대한 특별위원회의 조직, 대정부정책방안 제출, 여론화 작업등을 해왔다.

둘째, 직업병과 모성보호문제이다. 90년에 '직업병과 모성보호'를 주제로 사례발표회를 가졌고, 특히 모성보호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과 출산휴가 90일을 보장받는 것에 주력하여 현재 어느정도 결실을 보고 있다.

셋째, 탁아소문제이다. 이 부분은 여성들의 장기적 취업목표를 이루기 위해 절실한 문제이나 국가나 기업의 노력이 아주 부족한 것이 현실이

다. 여성노동자회는 현재 자체 4개 지역에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탁아소의 확대를 꾀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영·육아보육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의제기로 직장탁아소 설치 규정을 강화시킨 바 있으며 현재 제조업, 사무직 노조와 연대하여 '직장탁아소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을 꾸리고 있다.

87, 88년 노동자대투쟁의 과정속에서 그 가족들의 조직화, 특히 남성노동자의 부인들의 조직화된 모습은 많은 감동을 준 바 있다. 그속에서 각 지역 부인들의 조직화 사업의 중요성을 느꼈고 여성복지회관을 통한 교육과 조직화 활동이 일정정도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노동조합이 자기 자신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가 하나의 아쉬움이기도 하다.

현재 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향한 제 7차 한국여성노동자대회'를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준비중에 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위해 작년 아시아·태평양 NGO회의에 초청된 바 있는 이영순 대표가 한국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회가 지금까지 해온일은 여성만의 일도 아니었고 그러기에 여러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서 같이 걸어온 길이 있었다. 문제의식에 심지를 꽂고 불을 붙이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자 같이 걸어온 길은 이 땅의 민주사회 건설과 여성의 권익향상이 맞붙어 있음을 알려온 길이다.

### ◆ 알 림 ◆

- 김삼석·김은주 1심 선고공판  
·2월 28일(월) 오전 10시30분 서울형사지법 319호
- 「양심선언 2호」-양심선언 군인전경지원대책위원회발행  
·주요내용:아직도 이런 일이(영등포교도소 폭행사건 일지)/기획시리즈(1)-양심선언과 병사들의 인권현실 등
- 성폭력 위기센터 '지킴이' 공개모집  
·자격:전문대학 재학생 이상 남·녀  
·모집인원:남-30명, 여-60명  
·원서접수:3월 1일-31일(이력서 1통, 재학증명서 1통, 우편으로만 접수)  
·접수처:(137-600)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지킴이 담당자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좌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 인권하루소식

94년 3월

(제13호 - 제134호)



<이달의 주제 - 여성>  
 세계인권대회는 은폐된 것이든  
 공공연한 것이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근절을 촉구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씨 7년, 김은주씨 집행유예 선고  
**한통련은 반국가단체로 인정, 한겨레·말지 국가기밀적용은 무죄**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김황식)는 지난날 28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 탐지·수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김삼석·김은주씨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삼석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군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군사문제나 핵문제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해온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 한통련 관계자를 만나 관계를 맺어온 이후에 대해서는 국가기밀 수집·탐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다”며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실정법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반성의 빛이 없으며, 이 정도에서 이른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은 접근이 용이한 국보법폐지 공청회

자료집이나 민자당 정책자료집은 이미 검사가 공소 취소하여 기각하였으며, 군사관련이나 핵관련으로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김은주씨에 대해서는 “피

고인이 비행기안에서 읽기 위하여 구입한 한겨레신문과 말지는 목적수행을 위한 의도에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가기밀 탐지·수집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 「한국노인의 전화」 3일 창립 노인관련 종합정보 상담·제공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홍보활동으로 노인의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하는 「한국 노인의 전화」가 3일 오후 2시 서울 홍제4동 사무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회장단 등을 선출한다.

「한국 노인의 전화」는 취업, 노인시설, 건강, 재혼과 성 등 종합적인 정보를 상담 등을 통해 제공하고 국내외 노인관련 단체 및 시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진하며 노인관계 시설·법 등 노인현황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한다.

지난 해 12월 부터 94년 2월 26일까지의 상담건은 236건으로 그 중 노인의 취업과 관련된 것이 78건으로 33%, 건강문제가 28건으로 12.8%, 재혼과 성에 관한 문제가 14건으로 5.9%, 가족문제(학대, 갈등)가 8건으로 3.3%의 순서를 보였다. 이중 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한 경우는 171건으로 72.5%를 차지하였다(전화 : 722-8007 팩스 : 722-9187).

###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지난 22일 천리안 통신동우회 「희망터」에 북한 김

일성 주석의 신년사 등을 게재하고 노래극단 「희망새」에서 공연준비중인 「아침은 빛나라」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김태일(희망새 대표)씨 등 6명이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된 「희망새」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연준비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예술창작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규제행위”라고 비난하고, “불합리한 공윤법과 음반법의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새」는 또 다른 성명에서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 「붉은 산 검은 피」가 종로서적, 교보문고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각색하여 공연준비중인 창작행위를 문제삼는 것은 창작행위를 자체를 사전에 규제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희망터」에 올린 김주석 신년사는 「내외통신」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빨치산의 딸 지현이를 돕읍시다”

한국전쟁중 빨치산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0년의 옥살이 끝에 석방된 고 김병주씨의 장녀인 김지현(29)씨가 결핵성 부골증으로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김지현을 살리는 모임」(대표 윤희보등)에 따르면 김지현씨는 지난 해 결핵성 부골증으로 갈비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으나 올해 다시 결핵이 재발, 척추근처로 화농이 번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으며, 김씨가 현재 입원 중인 한양대 병원측에서도 “화농부위를 제거하는 수술과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 말하고 있다. 「김지현을 살리는 모임」은 “의지할 친척 한 사람 없이 병들어 누워있는 지현씨의 처지는 분단이 낳은 비극”이기 때문에 “김병주씨와 같이 활동했던 장기수들이 우선 지현씨를 돕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며, 김씨를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민족애로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 연락처:745-1852/3(불교인권위원회)
- 계좌번호:제일은행 128-20-303720 예금주 박용모(진관)

<인권하루소식> 2월호 총목차/2-3면  
 5대 일간지(2월 21-27일) 인권관련 기사색인/4-5면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97호-112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2/1	97	1	김기용 순경 다시 피고인석에, 대법원 '과기환송' 고법으로 되돌려 "살인에 대한 증거가 없다"/원진직업병 단체 하나로, 29일 '원직협' 발족/"언론의 인권침해 구제", '바른언론 시민연합' 창립/"교도소장에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양심선언 박석진 일경, 지난 19일 영등포교도소			
		2,3	「인권하루소식」 1월분 총목차(78호-96호)			
2/2	98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중점, 「여연」 정기총회, 여성의 권익향상 위해/40년 감옥살이 안학삼씨 석방요구, 국제엠네스티, 양심수 선정·전세계에 호소/인천 당직변호사제 실시, 인천지방변호사회/KONUCH 대표단, 세계인권대회 후속회의 참가, 2-3일 방콕/영등포 교도소 인권유린 항의집회, 오늘 12시 교도소 앞/			
		2-7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주·월간지 기사색인(1월-2월호)			
2/3	99	1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열려, 1월 31일-3월 11일, 제네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각될 듯/"인사 안했다고 징벌방에", '소장사과·징벌해제' 농성중, 2일 영등포교도소 앞/"국제화는 정신대문제 올바른 해결로부터", 2일 105차 수요시위/"언론" 인권침해 적극대처, 2일 '바른언론' 창립대회/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임수경·김광석씨등 출연, 22차 목요집회, 3일 2시			
		2/3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PHARA) 사무국장 에블린 발래세라도,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특정한 인권조직 만들수 있다"/국제인권단신, 국제엠네스티, 미국내 사형집행 중단요구			
2/4	100	1	"재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			
		2	지령 100호 특집/"<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3	지령 100호 특집/만화로 본 <인권하루소식>			
2/5	101	1	'군 위안부' 책임자 처벌되어야, 정대협 등 '7일 일본 검찰에 고소·고발'/'모성보호 확대' 구체화 요구, 여성계, 무급생리휴가 폐지도/황석영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알기 위해 방북'			
		2	단체탐방 10/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 유가족협의회, "젊은 영혼들의 일깨움과 아픔을 압제에 저항하는 용기로 승화시킨 '한울살'			
2/8	102	1	폭력검사 형사처벌 약속 지켜야, 안강민 검찰부장 작년 11월 6일 "폭행 등...정계는 물론 형사 입건", 법무부 지난 3일 전지6주 부상입힌 안희권 검사 3개월 감봉처분에 그쳐/노태훈씨, 경찰의 불법체포·감금등 손해배상 청구/성희롱 변호사 대한변협 징계위에 회부, 서울지방변호사회/양심선언 박석진씨 집행유예			
		2	국제인권소식/"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 추진중, 일본 오가카 인권단체들/유엔 인구녀상 9명 수 상/사회적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남아시아 대학생 인권실기교육, 지난해 12월 10-20일, 네 팔에서/북한정부, AI '인권보고서'에 답신/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안건			
		3/4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1일-6일)			
2/15	103	1/2	일본검찰 전범행위자 처벌요구 무시, 7일 '위안부' 할머니 고소장 접수거부...피고발인 불특정등 이유로, 14일 유엔인권위도 중군위안부 문제 정식으로 다룰 예정/기업부담 줄이기 위해 작어진 산재보험, '산재환자 치료 어렵게 해', '전노협', '인의협'등 산재환자 치료제한 사례접수/외국인 노동자 7일 농성해제, '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2/3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2/16	104	1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서대표 "이번 사건을 통해 가혹행위에 대한 감시운동의 모범을 보일 터"/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 행사를 1.17%에 그쳐, 92년 10월-93년 8월 사이 850건중 10건/폭력남편 살해 이순심씨 살인혐의로 기소			
		2-4	고발장(안희권검사)/인터뷰-민중의교훈원프로그램 집행위원장 조세 라모스 호르타; "유엔이 진정한 인권을보호를 위한 장이 되도록 민간단체 노력 필요"			
2/17	105	1	경찰, 광주지역 민정련 회원 13명 연행, 작년 7월 12일 이후 12차에 걸쳐 88명연행, 민정련 회원 10% 해당, "문민경찰, 민정련과 '범외와의 전쟁' 벌이고 있다"/국방부, 양심수 군문제 해결 방안 제시, 1년이상의 형 선고 및 27세 이상 면제, 해당자 30%			
		2	국제인권소식/94년방콕 아태지역 인권단체회의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 공대위 유일한 사전준비 등 적극적 활동 펼쳐/유엔 북경여성대회 소식(2), 유엔, 북경여성대회에 제출할 나라별 보고서 작성요령 발표/"사회변화를 위한 여성교육, 국제회의, 캐나다 오타와 대학, 올해 8월 13-17일/필리핀 인권단체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인권선언문 작성, 의회체택을 요구중/민중의교훈원 프로그램 참석 이성훈씨 귀국, 2월 26일 '국제동향 월레브리핑'에서특별보고			

「인권하루소식」 2월분 총목차(97호-112호)

월일	호	면	기	사	제	목
2/18	106	1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되 태도 바뀌, "비전향장기수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주민접촉 취소했다"/"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민가협, 「고 김남주 시인, 추모 목요집회」서 주장			
		2/3	광주고법 강병설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강태중 일경 최후진술 제지에 항의하자 "임시금지", 즉결심판에선 "다음 공판에 최후진술 보장"/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석방촉구 서명 벌이 기로/MBC '시사매거진 2580' 신설, 인권유린등 다룰 방침/사법제도 발전위원회 건의문			
2/19	107	1	검찰, 증거없이 김삼석씨 15년·김은주씨 8년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18일 결심공판, 피고인 등의 "조작사건" 주장에 대한 판결이 주목돼/양심수 군문제 대상자 명단 발표해야, 국방부 64%, 병무청 30%로 달라/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2/3	변론요지서,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2/22	108	1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해석 황석영 6년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21일 항소심 끝나,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김삼석 재판에 관심/최내무장관, 고문용인 발언 "표현이 잘못되었다" 시인, "말을 아껴야 된다는...큰 교훈 얻어" 실천내용은 없어, 19일 국회본회의 유인태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3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 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2/23	109	1	홍계동 대공분실 변호사 접견방해, 부산 노래패 '희망새' 등 9명 연행 확인, 소켓 전혀 알리지 않아 22일 밤 10시 현재까지도 소제미학인 된 사람도/장애우 대학' 6기 신설,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3월 18일부터 13주/반국가단체 구성주도자에 징역 2년6월에 4년 징유			
		2/3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2/24	110	1	여성·노동단체 '86주년 세계여성의 날' 대회준비, 3·8 여성의 날, 다양한 행사로 여성축제 만들 방침, '여성선언'도 채택/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등			
		2/3	국제인권소식/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1)-국제인권단체, 한국 인권정책 비난발언 잇달아, 케네디 인권센터,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등, "장의군·김성만·황대권 등을 예로 국보법 폐지 촉구/한국정부 대표, '과거 인권침해자 처벌은 법의 지배를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 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교적 연사로 치장/2월 18일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 발언문, 2월 21일 세계기독교학생연맹 발언문, 2월 21일 한국정부 대표 발언문/아·태 지역 인권위크숍 제3차 회의, 6월 서울, 유엔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개최			
2/25	111	1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시급, 정부 주도 입법은 사회요구 제대로 못답아 관련단체의 적극 참여 필요/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 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 '희망터', pc에 김주식 신년사 전제, pc통신동우회 '희망터'만 문제삼아 구속			
2/26	112	1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DML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장애인단체 "ESCAP에 보고만을 의식한 요식행위" 반발/ 정신대 다룬 '소리없는 만가' 일본공연 모금액, 3월 1일 '나눔의 집'에 전달예정/"경찰의 인격무시 행위 공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의경폭행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선고/바로잡습니다			
		2	단체탐방 11/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먼저 일어나 준비하고 함께하는 진정한 프로 '여성노동자'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세요

늘어나는 송신비때문에 부득이 1월부터 구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기 위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권하루소식>은 송신비를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태입니다.

1월부터 <인권하루소식>은 우편으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함께 고민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위 분들께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 구독료는 월 1만원-3만원입니다.  
 구독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편지자주 < > 안은 주제어 ( ) 안의 영문은 신문명, 숫자는 월·일을 나타내며, 다음의 숫자는 면수를 나타냅니다.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입니다. 예 (H.2.21:9): 한국일보 2월 21일자 9면.

#### 인권일반/제도/법조/공안·수사기구/고문·가혹행위/피의자

·월요초대석; 개혁안건의한 '사법제도 발전위' 현승중위원장, "국민 사법적 보호확대에 역점" (H.2.21:9)  
·민변 '김영삼정부 인권성적' 토론회, "일관된 정책없는 낙제 수준", '문민 원조적 한계' 악법개폐 목록부담(HA.2.22:16)

·'쇠고랑' 문화, 장명수칼럼(H.2.24:5)  
·문민정부 1년, 사법부 '몸뚱이' 안간힘, 재산과문 상처되고 자체개혁 한창, 검찰권독립 '성역없는 수사' 과제로 (D.2.25:5)

·악법철폐 제도개혁 촉구, 전국연합 성명(HA.2.25:19)

<법정구속 강화> 재판운영 엄격하게 한다, 불구속피고도 법정대도따라 실행선고, 대법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 화위해" (H.2.22:30)/ 피고인 법정구속 활성화, 대법예규 시달, 법정시풍조 방지... 형량도 현실화(C.2.22:30)/ 법정구속 강화된다,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HA.2.22:19)

<비리공직자재판> 풀려나는 '비리공직자', 이종구씨 항소심서 집유, 새정부 구속16명중 10명 석방(D.2.26:31)/ 비리공직자 '파주기선고', 항소심재판 '정치적 고려' 인상, '자수' 사실 폭넓게 참작, '收賂' 최소 5년형, 무석(D.2.26:2)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옥살이 매년 2백여명(H.2.26:31)/ 매년 2백여명 '억울한 옥살이', 법무부 국회제출자료(C.2.26:30)/ 2백28일 '억울한 옥살이', 진범 밝혀졌으나 재판강행 뒤늦게 석방, 경관 독직폭행사건(HA.2.27:15)/ '김순경살인' 진범 장기15년 단기7년 구형(D.2.25:31)

·검찰 이례적 증거보강 지시 관심, 자백변복 대비 '원칙' 충실, 단독범행 불가 판단 공범수사 순서 고심(HA.2.23:19)/ 탁씨사건 계기로 본 임의동행 판례, "48시간내 영장못받으면 석방", 연행 거부한 피의자 경관 때려도 '방해죄' 안돼 (J.2.23:3)

·변호사수 늘려 서비스 개선율(J.2.24:31)

·국제범죄 전담검사 지정, 법무부 행정계획(HA.2.27:14)  
·해의도피 공소시효 정지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내년 시행... 부정부패 근절대책(HA.2.26:15)/ 주목끄는 '해의도피 공소시효 정지제도', 고위공직자 등 도주방지 겨냥, 인권침해 우려 들어 일부선 신중론(HA.2.26:14)

<법관·검사인사> 법관 4백67명 인사명단, 검사 3백17명 인사명단(HA.2.25:17, D.2.25:29)

·경찰치부 모은 '민주터널' 폐년 조성된 경남경찰청장, "선진경찰 향한 '고백성사'", 거듭나기 위해 지난 과오 솔직히 공개(J.2.21:17)

·경찰점문 "눈가리고 아웅식" 면허증취도 열광확인도 안해(D.2.21:27)

·사건 피의자 불안한 입장 이용, '경관의 변호사알선' 단속, 서울경찰청 산하경찰서에 지시, 식사비·수고료명목 금품수수, 알선청탁한 사무장등도 처벌(H.2.25:31)

<연재:경찰과 시민사회-가서는 선진국실태... 우리의 현실> <6>민경 공조 범죄막는다, 영·싱가포르 '이웃감시체계' 성공(J.2.21:1)/ <7>런던청장 연봉 총리 두배, 50년대까지 혼탁... 봉급올리자 깨끗, 부패는 '그물감시' (J.2.22:1)/ <8>건수올리기 단속 안한다, 교통위반 미리 경고... 타격대격 없어(J.2.24:1)/ <9>수사도 국제화... 외국어 능숙, 인터폴 '한국경관 영어 안통해 애로' (J.2.25:1)/ <10>군법하지 않는 서비스기관, 파출소없는 영국 세일즈식 순찰, 일 수시로 여론조사... 개선에 반영(J.2.26:1)

·경찰 외국어교육 바람, 서울청 영·일어 무료강좌 개설(D.2.26:29)

·'안기부 소년법 프락치망 운영', 부경총련 불잡힌 10대 진술통행 주장(HA.2.23:19)

·방송위 93년 심의, 인권침해·간접선전 갈수록 심해진다, 피의자 얼굴방영등 92년의 4배나(J.2.21:12)

#### 양심수/표현·집회·결사의 자유등/물처벌

<강기훈> 전국과수 김형영씨 문서감정원을 개업(C.2.22:31)

<황석영> 보안법위반 황석영씨 항소심서 6년형(H.2.22:31)/ 황석영씨 항소심 6년선고(HA.2.22:19)/ 황석영씨 6년형, 기밀누설부분 무죄 1심보다 2년 줄어(J.2.22:22)/ 5차례 방북 황석영씨 징역 6년 선고(C.2.22:30)

<노해투사> '노해투사' 12명 구속, 기관지 발행... 노동혁명 선동(C.2.23:31)/ '노해투사' 12명 구속, 보안법 위반혐의... '희망새' 극단도 조사(HA.2.23:19)/ 노동자폭력혁명 선동, '노해투사' 12명 적발(D.2.23:31)/ 경찰, 변호인 구속 자절전 청취, '노해투사' 사건, 비밀보장 무시에 항의 퇴장소동(HA.2.24:19)

<희망새극단> PC통신 게시판 통해 김일성찬양 시동 유포 4명 구속(D.2.24:30)/ 작품비밀 보안법구속 부당, 희망새극단 자유집회 비난(HA.2.26:15)/ 더불어 생각하며, '희망새'에 절망을 주지마라, 시 인용에 국보법 유포가미, 창작행위 규제 언제까지(HA.2.27:10)

·'표현의 자유' 개념이 바뀐다, 통신발달로 '일방통해' 대신 '대화형' 요구(HA.2.26:9)

·정치영화 '증발' 무삭제 방영을(D.2.26:19)

<광주항쟁> 5·18 진상규명등 촉구, 광주항쟁 관련단체(HA.2.22:18)/ 5·18 후속조치 관련단체·시민뜻 모아야, 김대통령 광주순시(HA.2.23:1)/ '5·18' 명예회복차원 후속조치, 김대통령 광주전남순시(D.2.23:2)/ 민족예술상 단체상 수상 극단 토박이의 '모란꽃', '묵은 아픔' 일깨우는 사이코 드라마, 광주항쟁 참여 여인 정신상처 치유과정 그려(HA.2.24:11)

#### 시민운동/시민권의

·'무리한 교통단속 저항 공무집행방해 아니다', 항소심서 무죄선고(HA.2.26:15)/ 무리한 교통단속 항의 경관밀친 시민에 무죄(H.2.26:27)/ 경관 황포맞서 시민 법정승리, 변호사없이 20개월 투쟁 항소심서 '무죄' 받아내, 교통위반 시비 강제연행 '의경폭행했다' 허위조서(D.2.26:31)

<일조권> '일조권침해 시공사가 배상', 아파트 동간 거리 짧아, 입주민들에 10억 주라, 서울지법 판결(D.2.24:31)/ 일조권침해 12억배상 판결, '아파트 동간거리 짧아 주민피해', 서울지법, 시공건설회사에(H.2.24:31)/ '환경권은 기본권' 첫 판결, 인천 아파트주민 2백69명 승소, 동사이 일조권 피해보상(C.2.24:30)/ 사설; 햇볕이라는 재산(D.2.25:3)

·소보원 억울한 피해 소송지원, 3월 정부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건의, 비용대납 판결종료후 지급, 시행위해 공익변호사 모집(J.2.23:28)

·무료로 판정된 '거래 약관', 아파트 입주 기한 넘길 땐 통보없이 해약등(HA.2.27:8)

#### 여성/아동/노인/장애인/복지/정대협

·세계여성정상회담, 정치참여 확대 다각 모색, '의식할당제 성차별개선 큰 역할' (C.2.22:19)

<여협회집> 이연숙 여협12대 회장, '성차별 철폐위해 여성계 단결을' (H.2.25:23)/ 초대석; '여성계 권익다지기 최우선', 새여협회장 뽑힌 TV토론 사회자 이연숙씨(D.2.24:16)

·여성노동자들 권익 향상대회(C.2.25:21)

·'생리휴가 사용하자', 여성·노동단체 각지서 캠페인 잇따라(HA.2.24:10)

·상속폭행 남편 살해 이례적 3년 선고, 서울지법 '정삼참작'... 구형은 7년(J.2.26:23)

·미군에 성폭행피해자 국가상대 손해청구소(C.2.22:31)

·아파트·종교시설등 탁아시설치 자유화, 행정쇄신위(H.2.27:2)

<장애인> 장애자 명예-가난 이중의 짐, 저소득층가정 생활고 시달려, 복지등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돼야(HA.2.24:14)/ 농아학교 교육과행 교사 안일·옥설난무(HA.2.24:14)/ 장애인에 일자리줘 자립심 키우자(D.2.25:19)/ 장애인자동차 표지 가족까지 확대발급(D.2.26:31)

<꽃동네> '꽃동네 장애인사망' 경위 은폐여부조사(H.2.21:31)/ 꽃동네 '비극적 사건' 불구 지속적 관심을, 불우한 이웃 돌보는 봉사정신 이어지길(HA.2.22:14)/ 꽃동네 장애자 사망 '고의은폐'는 아닌듯, '치료가능 판단... 안알려' 해명, 경찰 단속사건 결론속 '검시방해' 적용(H.2.22:29)

·의보 '대수술', '부담 고르게... 불편 없게' 전면 존질, 의료보장 개혁위 집중점검(C.2.23:29)

·응급환자 거부 의사 처벌강화, 보사부 시행령,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응급실 인권-시설기준 명시, 종합병원 전문의 상시근무 의무화(D.2.25:31)

#### 노동/산재/외국인노동자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많다, 대전 2천3백여업체 조사, 25개사 2백48명(H.2.21:27)

·초과근로 근로자 주평균 3일, 노동연구원 근로실태 보고서, 전기가스-운수창고-광업 특히 많아(C.2.23:29)

·'공무원 임금인상률 정부 절반축소 발표', KDI노조 주장(H.2.25:31)

·식대보조비도 임금 퇴직금에 산정돼야, 대법판결(D.2.26:31)

<노동법개정> 대통령 노동관계법 개정백지화면 전노대 '총력 투쟁전개' (HA.2.26:2)/ 사설; 멀리 내쳐버린 노동법 개정작업(HA.2.27:3)

·10만근로자 발암물질에 노출, 산업안전공단 조사, 염색·섬유·석면 취급업체 대부분, 유해물질 허가 없이 사용, 보호장구 안쓰고 작업도(J.2.25:23)

·기아차, 직업병 노동자 축소, 건강검진때 난청 유소견자 많자 검사표 변조(HA.2.25:19)/ 기아차 직업병 노동자 축소 파문, 소음난청 유소견 인정기준 모호, 건강보호 위해 초기청력 손실로 확정 실시해야(HA.2.26:13)

<노조전임 산재인정> 노조활동중 얻은 병 업무상재해로 인정, 대법판결(D.2.24:31)/ '노조전임자 재해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대법판결(H.2.24:30)/ 노조전담자 질병 업무상재해 해당, 대법, 원고패소 원심개(J.2.23:22)

·직업병 검진기관 실태조사(HA.2.27:14)

·외국인력 허용 현실과 안맞는다(J.2.22:31)/ 외국인산재 소급보상키로, 시도경제협,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 적용(H.2.22:9)

#### 환경/반핵/군축/평화

·'반핵의 달' 대규모 행사, 그린피스호 4월 첫 방한계기, 환경연, 원전주변 조사·핵사진전등 열어(H.2.23:17)

·환경처-민간단체 '정책협' 구성(H.2.25:29)

·한국 해외벌채 곳곳 마찰, 가이아나·솔로몬군도 환경파괴 원주민과 잇단 충돌(HA.2.23:8)

·'세계환경정보도 온라인시대', YMCA, 국제전산망 4월 설치, 2억원 투입... '유엔개발회의' 지원받아(H.2.27:22)

·군부대 오-폐수 무단방류, 민주의원 지적, 73% 정화 안된채 4대강 오염(C.2.22:2)



<이달의 주제 - 여성>  
 세계인권대회는 은폐된 것이든  
 공공연한 것이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근절을 촉구한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가평군 두밀리 분교 폐교에 지역주민들 반발거세

학생들 여전히 분교로 등교하여 자원교사와 학습중

농촌지역 국민학교 폐쇄 잇달아... 농촌항폐화 부추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 폐교문제가 신학기 개학후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두밀리 주민들은 「두밀분교 폐교 반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지난 2월 21일 가평군청 앞에서 100여명이 폐교반대시위를 한데 이어 2월 28일에는 150여명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생관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두밀리 분교에 다니는 25명의 학생들은 3월 2일 본교인 상색국민학교로 등교를 거부하고, 두밀분교에 등교하여 2명의 자원교사와 자체학습을 하고 있다.

두밀리 주민들에 따르면 "올해 상색국교 신입생은 2명인데 두밀분교는 6명이며, 다른 분교보다 학생수가 많은 두밀분교가 폐교된 데에는 상색국교가 분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폐교결정을 하였음에도 12월에야 주민들에게 통고하였다"며 폐교결정과정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두밀리 주민들은 지난 2월 28일 조순형 국회교육위원장과 교육부 의무교육과장 등과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도 교육감, 의무교육과장, 군 교육청장, 두밀분교 폐교와 관련한 교육부 관리, 안전회 국회의

원(지역구) 등과 조만간에 간담회를 갖는다'는 데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두밀리 주민들은 3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입학할 6명의 아이들은 입학식도 치르지 못했다"며 "두밀리 주민들은 더 이상의 정부지원도 필요없으니 이제 남은 것만이라도 빼앗아가지 말고, 두밀분교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농촌지역의 국민학교가 경제적 단선논리로 폐쇄되고 있어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살기를 회피하는 터에 자녀교육문제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농촌종합대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서는 다른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국제 엠네스티는 오는 3월 9일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29쪽 분량의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2월 17일과 22일 '노해투사', '희망새', '민정련'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 3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경찰이 이들을 수사하는 동안 가혹행위, 변호사와의 접견방해 등이 염려된다고 3월 1일 '긴급구원활동'(URGENT ACTION)을 통해 밝혔다.

엠네스티는 또 경찰당국이 "평화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실천한 것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또 엠네스티는 \*혐의사실이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국제기준에 따라 석방할 것, \*피구금자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변호사나 친척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촉구할 것,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상기시키고, 이번의 대량

의 구속이 이 범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항의 편지를 대통령, 법무부 장관 등 앞으로 보낼 것을 촉구했다.

## 일본전쟁책임 공식사죄·대책수립 요구

태평양 유족회-한·일 정상회담에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공동대표 양순임등)는 2일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일 전후처리 촉구대회'를 갖고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제가 할취고 간 핏자국이 3·1운동 75주년이 되는 오늘 군속, 군대위안부, 노무자 등 태평양전쟁 희생자 등에게 무거운 고통으로 남아있다"며, "65년의 한·일 조약은 희생당사자들의 인권은 철저히 배제된 채 맺어진 조약이고 국제인권규약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 조약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공식사죄와 대책 발표, \*군대위안부, 노무자 등의 명단인수와 생사확인, \*강제 공탁금과 강제 저축금의 반환,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배상 등을 요구했다.

### 알림

- 배금자 변호사 사무실 이전  
 주소:(137-070)서초구 서초동 1699-3 신한국빌딩 601호  
 전화:594-1700 팩스:594-1702 (전화·팩스는 전과 동일)
- 한국노인의 전화 대표선출(722/3-8007)  
 대표 : 이성우(전 보건사회연구원장)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독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 국제 인권 소식

### 아시아 선교대회 서울에서 열려

4월 25일-5월 2일-인권·개발등 여러분야  
 아시아교회협의회(CCA)가 주최하는 '아시아선교대회'(Asia Mission Conference)가 4월 25일-5월 2일에 1주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총회에 앞서 최근 아시아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고 총회의 주 의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 대회는 선교 등 교회와 관련된 직접적 이슈 외에도 인권, 개발, 여성 등 사회전반의 문제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다(한교협 인권위원회는 해외 특히 아시아의 인권에 관심을 가진 국내 인권운동가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1959년 창설된 아시아교회협의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단체로 현재 아시아 16개국에서 116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다.

### 성차별, 인권, 개발등에 관한 워크숍

방콕의 민간운동단체인 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ment (ACFOD)는 1994년 3월 22에서 4월 5일까지 2주동안 "Human Values : Resource Development Training Workshop"을 연다. 이 워크숍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 사이의 연대와 이해를 높이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아시아 차원의 현실인식과 전망을 공유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아시아 각국의 노동, 농민, 도시빈민,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중견활동가 약 20-30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에도 2-3명의 참가를 기대하고 있다.

## 법무부, 행정법 대폭적인 손질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

법무부는 행정법 개정을 올해 법무행정 쇄신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현행 행정법이 일본의 감옥법을 답습하고 있어 재소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가 많았다면서 \*재소자의 처우 \*서신왕래 \*도서반입 \*징벌제도 등을 현시대에 맞게 대폭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행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 교정국 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자료수집단계라서 개정안의 방향이 명확히 나와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어떻든지 정기국회까지는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인권단체들의 의견수렴계획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입법예고 기간에 수

이 워크숍에서는 인간중심의 가치(Human Values)

에서 전지구적 변화와 아시아의 현실, 성차별문제, 환경과 인권, 참여적 문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행방식은 현장체험(exposure), 강의, 토론 등으로 이루어지며 참가자들이 단지 듣기만 하는 수업식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학습방법론을 사용한다(참석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ACFOD(FAX : 662-374-0464) 또는 천정배 변호사(전화:588-9274/6)에게 연락을 하기 바람).

## AI, 실종·정치적 살인종식 캠페인

콜롬비아를 첫 대상국가로 선정

국제엠네스티(AI)는 올해 3월 16일부터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캠페인을 전개해나가는 데 그 첫 대상 국가로 콜롬비아를 선정하였다. 국제 엠네스티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종"과 정치적 살인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캠페인을 벌여왔는데 특정 국가를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에서는 1970년 이후부터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 유형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데 정치적 수인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반면 비사법 처형과 "실종"으로 인한 희생자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1986년 이래 약 2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지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했다. 최근 몇년동안 살해당한 사람들 중 대부분이 성인 남자였으며 연간 살인률이 약 4%씩 증가하고 있다. 1992

년 살인사건은 총 28,237건이었으며 이중 102건은 4명 이상의 인명이 살해된 대량학살로 기록되었다. 대통령 인권보좌관에 따르면 정치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살인이 전체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난 5년동안 매월 평균 10명이 정치적 폭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들중 5명 정도는 암살되고 4명은 무장세력간의 갈등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나머지 1명은 '사회정화작업'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1978년부터 1992년 사이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비밀경찰에 의해 감금당한 후 "실종"되었다고 추산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이 감금 후 곧 죽음을 당했거나 비밀리에 처형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우려한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캠페인 동안 다양한 홍보활동, 콜롬비아 정부와 군부수자에게 보내는 편지쓰기운동, 서명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운동가, 노조활동가, 남녀 어린이 등 인권침해 희생자들이 관련된 14개의 사례에 대하여 서명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주요 촉구사항이다.

1. 국제엠네스티는 콜롬비아 정부가 인권침해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이상 특혜가 아닌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 국제엠네스티는 콜롬비아 정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종"과 비사법 처형 사건에 관해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규명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촉구한다.
3. 국제엠네스티는 콜롬비아내의 무장반대집단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말것을 촉구한다.

집된 의견을 첨부하여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나와 있는 행정법에 대한 여러 단체나 연구자들의 의견이 너무 서구적인 기준에 치우쳐 있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 '성희롱 항의' 시위 - 서울대 성희롱 대책위

'서울대 성희롱 사건 대책위'는 2일 오전 서울대 입학식이 열리는 서울대 종합체육관에서 지난 해 8월 있었던 자연대 신 아무개 교수의 우 아무개 조교에 대한 성희롱 사실을,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추행교수가 있는 서울대에서 배울 것은 성추행 뿐'이라는 피켓을 들고 알렸다. 또 신 아무개 교수의 이변학기 수업배정에 항의하기도 하였다.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엄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가정민주주의는 평화·민주주의·평등의 기초”

대한YWCA연합회 '사회변화와 가정의 역할' 토론회

「대한 YWCA연합회」(회장대행 주선애)는 3일 오후 대한 YWCA연합회 강당에서 '사회변화와 가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유엔이 정한 '가정의 해'를 맞아 진행된 것으로 발제자들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내에서의 민주주의 훈련과 평등한 가족관계의 형성, 모성 보호 정책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김중희씨(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는 교육의 측면에서 발제를 통해 가정의 휴식과 재충전 그리고 사회질서의 규범을 배우고 실천하는 도량임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부모들도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족구성원간의 평등한 분위기 조성, 일류병과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법훈련 등을 가정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고용의 측면에서 발제를 한 장성자씨(한국여성개발원수석연구원)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가족규모가 축소되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며, 이를 가족으로서의 복귀라는 전통적 이데올로기로는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된다며, 변화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평등을 가족내에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은경씨(이화여대 인류학강사)는 여성과 남성, 노인과 어린이 등의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를 들며 가족구성원들이 사회의 변동에 따라 어떻게

역할이 변해왔는지를 발표했다. 박씨는 남·녀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인정을 받던 원시공산제 사회, 산업혁명이후 여성의 지위 약화 등을 예시하며,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가내노동이 생산활동의 절대 필요요소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 노인과 어린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서로, 특히 자라나는 아동에게 훈련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 미군 또 택시기사 수감채워 강제연행 2일 동두천 택시기사 항의, 사과 받아내

동두천 택시회사 운전기사 40여명이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세시간 동안 동두천시 동두천영업소에 차를 세워놓고 미군 헌병이 동료 택시기사를 강제연행한데 항의하여 농성을 벌였다.

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이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주한미군 2사단 '캠프케이시' 영내택시 승차장에서 택시기사 김지호씨(29)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차를 앞으로 댔을, 승차장 질서단속을 하던 미군 헌병을 치러 한 혐의로 미군이 오인하여 수감이 채워진 채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들은 미군 당국이 수감까지 채워 김씨를 연행한 것은 미군의 횡포라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미군 당국이 임의로 수감을 채워 연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농성을 풀었다.

김씨는 연행된지 3시간만에 풀려나왔다.

### 국내 인권단체 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이번 기회에 각 인권단체를 소개하는 국문·영문 겸용의 단체편람을 만들고자 합니다. 양심수,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노동 등 각각 인권문제를 다루는 단체의 이름, 설립목적, 주요활동, 대표, 실무진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영문자료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권운동 사랑방』 자료실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독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 주·월간지 기사색인

편집자주:이번 주·월간 기사색인은 2월중에 도착한 주·월간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잡지명 약어용례:『월간 신동아』:〈신동아〉, 『월간 조선』:〈조선〉, 『월간 말』:〈말〉, 『사회평론』:〈길〉, 『시사저널』:〈시사〉, 『법률신문』:〈법률〉, 『여성신문』:〈여성〉, 『법정신문』:〈법정〉, 『기자협회보』:〈기자〉, 『연론노보』:〈연론〉, 『내일신문』:〈내일〉, 『새누리신문』:〈새누리〉, 『전교조신문』:〈전교조〉, 『국제인권보』:〈국제〉 용례:〈새누리.2.26·10〉:『새누리신문』 2월26일자 10면

### 인권 일반, 제도, 법조, 수사공안기구

- 민변 주관, 김영삼정부 인권정책 1년 토론회, 국가 경쟁력 강화에 밀린 인권 현실 비판, 개혁 일회적이지 않도록 법제화 시급 <새누리.2.26·10>
- 93년도 한국 인권 현저히 개선, 미국무성의 각국 인권 보고서중 한국부분 <법률.2.14·1>
- 미인권보고서중 한국인론부분, 기자들 지위상승 노력 '자체검열' 심화, 북한보도 정부 간첩통제 여전 <기자.2.17·2>
- 사실:문민정부 1년의 법치현실 <법률.2.28·2>
- 기획특집-법 또하나의 장벽:통일시대의 국보법, 남북 합의서 채택,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와 국제화기조 반영해야,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거론/노동자현실 외면한 노동법, 법적 규제 불가능하면 제2의 노동자 대투쟁 기다려야 하는 현실/여전히 뿌리깊은 '연좌제', 분단아래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내일.2.9.6·9>
- 민교협 평가 교수단의 정책 평가서:김영삼 개혁 1년을 평가한다, 중속적 정치·외교, 재벌 중심의 반개혁적 신경계, 농민을 몰아내는 신농정, 변화를 거부하는 관재교육, 냉전체제로 복귀, 반자주적 통일정책 등 <길.3월.60>
- 연구논단:자유민주헌법과 형사법제정, 금융실명제위반을 제형화하는 것은 위헌 문제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야, 개정된 안기부법의 '특정정치인 관양시 5년형 처벌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 <법률.2.17·7>
- 영장 실질 심사제, 기소전 보석제 도입, 법원 피의자 보호에 적극 개입, 인권 옹호 위한 전향적인 조치 <국제.2.15·2>
- 형사재판도 집중심리제 실시 <법률.2.14·2>
- 사법제도발전위 24개 사법개혁안 건의, 상고제한, 부판사제신설, 1심형소 지법서 관할 등 <법률.2.21·1>
- 사법권 독립 확보 지향, 대법원 을 상반기중 입법 제도개선 작업 마무리키로, 사법위 확정 개혁안 총결산 <법정.2.21·1>
- 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 개혁의 지향목표는 국민의 신뢰회복 <법정.2.21·8>
- 논단:심급구조의 개선과 사법제도발전 <법률.2.21·14>
- 대법원 예규 '바람직한 재판 운영방안', 사법행정의 우위를 천명 <법률.2.24·1>
- 법무 서비스 국제개방 눈앞에, 막연히 '불가' 주장만 하다가는 쌀개방때의 무방위 재연 <법률.2.7·1>
- 법령 정보전산화시스템 구축, 법제처, 기업및 일반인도 이용 가능 <법률.2.14·2>
- 법관, 검사 모두 7백84명 인사이동 <법률.2.28·2>
- 서울 변호, 당직변호사제 다시 활기 <법률.2.17·3>

- 변협, 변호사 등록 실질 심사제 추진, 비리 관련 퇴직 판검사 등록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2.14·1>
-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 발족 1년, 21세기 검찰상 구현위한 연구 활발 <법률.2.24·2>
- 검사의 무조건 상소 개선한다, 각청 공소 심의위 실질 운용, 형식적 관행 탈피 <법률.2.7·3>
- 국가안전기획부의 국제경쟁력 <말.3월.58>
- 파출소 '점수 평가제'에 속앉는다, 범죄검거 독려이유로 시행, '경찰독립 시급' <내일.2.23·23>

- 양심수, 고문·가혹 수사, 피의자, 감옥, 불처벌 이 땅의 사람들:44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44년간 6번 면회, 철저히 외부와 차단돼 <새누리.2.5·5>
- 비전향 장기수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 추진본부, 통일원의 조건부 송환에 이의 제기, 즉각 이뤄져야 <새누리.2.5·6>
- 국제적십자사 총재에게 편지보낸 김영태노인, 장기수로 33년 동안 묶여 지낸 후 막노동으로 생계꾸리며, '편지공개로 가족 소식 알고 싶어' <내일.2.16·18>
- 국제법 사례연구:자유외지에 따른 인민군병사의 송환과 국제법 <법률.2.28·15>
- 기획특집:문민시대가 서러운 사람들, 고문·가혹행위 사라지지 않아, 시위전력 여전히 발목잡아, 개혁에서 소외된 사람 없어야 <내일.2.23·7>
- 타계한 김남주 시인의 삶과 문학, 비타협주의로 80년대 관동 <시사.2.24·97>
- 엠네스티 본지 최진섭 기자 석방 요구,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수감중인 7명을 양심수로 선정, 즉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촉구 <말.3월.76>
- 3·1절 가석방동 8백35명 실시, 장기수형자 23명, 외부 통근자 1백9명등 <법률.2.28·3>
- 피고인 포송, 수감 문제 재판 받아, 이달부터 법정관행 달라진다 <국제.2.15·1>
- 법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또다시 집유, 석방 <법률.2.14·3>

### 여성

- 세계 여성 건강회의의 참관기, 여성 건강권은 인권의 일부, 여성의 몸 통제하는 모든 구조에 도전하자 결의 <여성.2.25·6>
- 출산 휴가 60일서 84일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전환 <국제.2.15·4>
- 정무2실 업무 보고, '평등의 소리'전화 개설, 여성 정책에 반영, 가정의 해 기념 '평등한 부부'선정, 시상 <여성.2.18·4>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이경숙, 정강자, 이금라씨 선출, 지역여성운동 활성화에 박차가할 터, 전문경력기초한 구체적 여성운동 기대 <여성.2.18·5>
- '여성장관 수난' 또 시작되나, 편견에 가득찬 한 월간지의 비웃기 기사의 사회언어 분석, '기죽이기'에 동원된 성차별 언어, 힘주고 용기북돋우는 참된 '말'을 기대 <여성.2.18·9>
- 사무직 여성 87% 성희롱 경험, 여성민우회 설문 조사, 응답패설, 불쾌한 신체접촉 순 <전교조.2.7·9>
- '한국판 보비트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김부남, 김보은, 이형자, 이순실등 잇따른 아내 구타, 성폭행문제, 여성이여 이제 말하자 <내일.2.9·26>
- 보비트 사건, 남성 수난인가 여성수난인가 <말.3.92>



·「보비트사건」 보도 필 보여줬나, 「가정폭력」 심각성  
홍미위주 접근해서야 <기자.2.3.4>  
·「성희롱」 사회문제로 대두, 변호사 여직원 면접사건  
계기로, 현행법상 형사 처벌조항 전무 상태, 보완 시  
급 <법정.2.21.3> / 변호사가 직원 채용시 성희롱, 서  
울면회, 대한변협에 징계요청해 <법률.2.14.2> / 면접  
도중 성희롱당한 여대생 '가해자 처벌' 개가, 치밀한  
수사 작업으로 또다른 피해 사실 밝혀내 <여성.2.25.  
5>  
·강간죄 법해석 확대경향, '항거불능상태'에서 '동의없  
는 강제'도 강간 인정 <법정.2.21.4>  
·<정신대>군위안부 가해자, 형사처벌 고발장 접수 거부  
돼, '역사적 심판, 전쟁 범죄 처벌 제도 정착이 목적'  
정대협 밝혀 <여성.2.25.4>

장애인

·정신병환자의 인권, 흉악범보다 더한 사회적 냉대, 격  
리보다 애정, 사랑 베풀어야 <국제.2.15.3>  
·마약 사범에 치료감호제 적극 활용, 단속 일변도서 탈  
피, 기소유예 폭 넓혀 <법률.2.7.5>  
·장애인 계간지 '열린 지평' 만드는 주부들, 밝고 따뜻  
한 장애우 이야기 담을 터 <여성.2.18.15>

노동

·대법원 판결례: 농성기간중의 행위에 대해 노조원들에  
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간 합의를 한 경우  
면책범위는 농성기간중 행위뿐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  
을 가지는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한 것으로  
보야 한다 <법률.2.17.8>  
·전국구속·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해고  
노동자 복직과 병역 특례문제 해결 위한 공청회, 복직  
집행 강제위한 특별기구 구성제안, 병역 특례기간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야 <새누리.2.19.6>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대통령에게 호소문 남  
겨 사회고발, 자살, 과로사 등 잇달아 <내일.2.9.21>  
·한국에 썩트는 '몬드라곤', '노사일체' 노동자 협동조  
합 20여곳, 공동체 실험 한창 <시사.2.24.28>  
·국제화 물결, 신중 노사문제 숙출, 외국인 투자 기업  
국내법 관행과 충돌, 비밀보호 조항등 신설해 노조 긴  
장 <내일.3.2.22>  
·인터뷰: 남재희 노동부장관, '언론이 나를 도깨비로 만  
들었다', 긴급조정권은 최후 순간까지 아껴야 <시  
사.3.3.26>

환경

·지난 2월4일 한국반핵운동 연합의회 결성, 21세기  
평화로운 환경조성에 앞장, 환경단체·지역주민 단체  
한자리에, 국내외 연대 매개, NGO 협약을 기본으로 한  
'탈핵'을 최우선 과제로 <새누리.2.19.7> / 연대피하  
는 환경단체들, 환경영소주의에 위기감, 50여 단체 연  
합기구 구성키로, 독자 활동 하면서 국가적 사건 공동  
대응, 환경저도 연합체 탄생 반겨 <시사.2.10.46>  
·아시아, 자칫하면 '쓰레기 식민지', 선진국들 수출 길  
막히자 새 시장 뚫기 혈안,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규  
제 협약 빨리 마련해야' <시사.2.24.52>  
·환경정책 진단: 낙동강 식수 파동의 주범은 김영삼 대  
통령이었다 <길.3월.88>  
·전국 학교 식수 비상, 5천여교 수질 검사 안된 지하수

로 식수 사용, 일부교 '청색증' 일으키는 질산성질소  
등 검출 <전교조.2.7.4>  
·일조권 침해에 12억 배상 판결 <법률.2.28.5>

외국인노동자

·새누리 광장: 인간의 노동 불법화할 수 없어, 외국인  
노동자 문제 교회가 앞장설 때 <새누리.2.19.6>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 노동부 3년전 피해에도 소급  
적용 <국제.2.15.4>  
·외국인 범죄, 불법채류·취업이 주원인, 형사정책연구  
소 분석 <법률.2.28.3>

북한/남북관계/통일

·충격적인 현지보고: 남한 정부가 거부해버린 북한 탈출  
발목공 3백명의 러시아 유랑, '귀순하면 정착금 준다'  
는 뼈라를 믿고 목숨건 탈출 감행, 우리 대사관은 망  
명 신청 거부, 탈북인 3백여명이 최하층 생활로 연명  
<조선.3월.142>  
·변호사의 법정 투쟁기: 한영숙씨는 북한으로 가라? 답  
당변호사가 쓴 북한 국적의 중국교포 한영숙씨의 국적  
회복 투쟁기, 한국정부는 사실상 그녀를 북한으로 들  
아가라고 명령 <조선.3월.268>  
·개정 북한 형사소송법 上 <법률.2.7.12>, 中 <2.14.12>, 下 <2.17.12>

국제/군축·평화

·WOC국제문제위원회: '무기거래 및 생산문제에 관한 지침  
서' 회원국 교회에 발송,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기사  
용 절대 반대 <새누리.2.5.4>  
·여성단체, 평화통일 연대회의 등, 미사일 배치계획 철  
회 촉구 성명서 발표 <새누리.2.19.1>  
·시사해설: 패트리엇 미사일 한국배치, 한반도 위기설  
로 미 국방예산 유지 <내일.2.9.13>  
·탈냉전후 무기수출 혈안된 미국, 작년 3백40억달러로  
사상 최고, 지역분쟁에서 무력사용 초래 <내일.2.9.29>  
·긴급진단: 한반도 둘러싼 전쟁 가능성과 미국의 입장,  
한반도 종속화로 반대세력 억제 노력, 미국에 의한 무  
력 충돌 억제등 가능성 있어, 전면적 반대만이 비극  
막아 <내일.2.23.30>  
·긴급진단: 북한핵 소동의 배후 미 CIA와 군수 자본, 핵  
사찰 전격 수용이후, 북한핵 소동 감상법 <말.3월.32>  
·'북한핵' 어떻게 봐야 하나, 70년대 남한의 핵개발 추  
진배경과 거의 같아, MBC노조 리영희교수 초청강연  
<기자.2.24.4>  
·긴급특집: 북한핵, 위기는 사라졌는가-북한은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는다/미국의 대북한 정책 갈등구조의 내막  
/핵사찰 수용, 새로운 시작일뿐 <신동아.3월.184>  
·김대중, 존 던 대담: 아시아 민주주의가 21세기 좌우한  
다 <신동아.3월.242>  
·한일 관계, 새로운 접근 필요하다 <신동아.3월.216>  
·아-태 평화 재단이 국제학술토론회를 가진 후 정식 출  
범, 탈냉전시대에 통일은 필연, 내부변혁에는 경제가  
효과적 <내일.2.9.23>  
·일본 정치인들 '책의 전쟁', 오자와의 '보통국가론'에  
하시모토 '경제대국론' 맞서 <시사.2.24.54>  
·다니엘 벨 칼럼: 미·중·러·유럽의 신4강 체제와 일본의  
소외 <조선.3월.583>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원진직업병 환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일 10명 또 다시 직업병 판정 지금까지 335명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병 의료기관 치료소출

지난 해 5월 16일 이후 가  
동이 완전히 중단되었던  
원진레이온 출신 노동자들  
의 직업병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진행성 질  
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은 퇴사한지 23년만에 병  
세가 나타나 직업병 판정  
을 받은 사람이 있을 정도  
로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직업  
병은 불시에 찾아오고 있  
어 1만 3천여명에 이르는  
원진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센터 설립,  
잠재적 직업병 환자를 받  
아들이지 않으려는 민간은  
물론이고 정부투자기관 등  
의 인식전환과 그 대책수  
립이 절실하다.

### 3일 직업병 또 '발생'

지난 1월 15일 10명이 직  
업병 판정을 받는데 이어  
또다시 3월 3일 임재숙씨  
(38)등 8명의 원진레이온  
출신 노동자들이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특히 박상  
춘씨(46)등 5명은 지난 해  
6월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무중  
독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  
로 진행성 질병의 위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직업병 발병 '꾸준히' 증가

지금까지 직업병으로 공  
식인정된 사람은 모두 335  
명으로 88년 14명, 90년

34명, 92년 96명, 93년 110  
명, 94년 3월 3일 현재 18  
명이 해마다 직업병 판정  
을 받아 지속적으로 발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88  
년 이전에는 주로 퇴직 노  
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89년부터는 그 당시 현업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앞으로 폐업으  
로 퇴직한 노동자들이 비  
교적 많은 것으로 보인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무차별 발생

이번에 직업병으로 인정  
받은 사람중 근무기간 4년  
이 2명, 9년-12년이 5명,  
14년-17년이 3명으로 이황  
화탄소에 노출된 기간에  
상관없이 증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퇴직후 직업병 판정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보면 1  
년이 6명, 2년-3년이 3명,  
15년이 1명으로 언제든지  
불시에 발생할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1명을 제외한 9명  
이 첫번째 검진에서 직업  
병 판정을 받지 못하고 8  
개월-2년이 지난후 다시  
재검에서 직업병 판정을  
받아 이들이 이 기간동안  
에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  
하고 병이 진행되었던 것  
으로 보인다.

'원진법안' 산'은 직원칙이 임원  
한편 지난 해 11월 9일 노

사정 3자합의에 의해 마련  
된 원진노동자들의 치료문  
제 등을 중요한 업무로 출  
발한 '재단법인'의 이사중 4  
명이 원진레이온의 관리은  
행이었던 산업은행 직원의  
가족 등으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은행은  
'원진비대위' 위원장은 이  
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고  
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법인의 설립목적이 실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원진 비대위'에 따르  
면 '원진법안' 운영에서  
'비대위'등 원진노동자들  
이 운영에서 배제되어 '노  
사정 3자합의'에 따라 지

급받게 되어 있는 직업병  
환자로 인정된 사람 43명  
에 대한 민사배상이 아직  
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치료도 소출

그 동안 경희대 병원을  
비롯한 각 병원들은 원진  
직업병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  
길 것을 종용하고 있어 일  
단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  
라들이 '직업병 치료센터'  
가 설립되기 전에 최소한  
의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  
할 위험에 처해 있어 이들  
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다.

'산재종합병원설립' 필요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  
원장 박인도)는 성명을 통  
해 "원진레이온 노동자들  
의 취업대책 수립, 원진법  
안 임원에 비대위의 참여  
보장, 산재종합병원설립계  
획서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알림

#### □함께 가는 길 94년 신년호-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발간

주요내용:일하며 생각하며-지나치게 격려합시다/만나보  
았습니다-우리네 재정국장 최선희씨/아동교육-어린이 성  
폭행 예방교육/활동총괄-94년 수련회 및 제9회 정기총회

#### 국내 인권단체 편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국내 인권단체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각 인권단체에 대해서 잘 몰라 연  
락처를 묻는 초보적인 것에서 부터 무엇을 하는 단  
체냐 하는 등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이번 기회에 각 인권단체  
를 소개하는 국문·영문 겸용의 단체편람을 만들고  
자 합니다.

양심수,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노동 등 각각  
인권문제를 다루는 단체의 이름, 설립목적, 주요활  
동, 대표, 실무진 등을 소개하는 자료를 보내주십시  
오. 영문자료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권운동 사랑방』 자료실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좌번호:계월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 경찰, 학원사찰·프락치 공작기도

4일 한총련 밝혀  
불합한 경찰도 사실시인

서울경찰청이 김영삼 정부 출범후에도 학원사찰을 계속해온 사실이 4일 한양대에서 학생들에게 불합한 경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로써 지난 2월말 부산에서 안기부에 운용된 소년 프락치가 폭로된 데 이어 학원사찰, 프락치공작의 악습이 여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임시의장 김현준, 부산대총학생회장)은 4일 오후 3시 한양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양대내에서 사찰활동을 벌이던 서울경찰청 보안2과 소속 강형세 경장(45)을 불합아 경찰이 5개월 전부터 「한총련 전담반」을 운영해 왔으며, 전담반은 수배자 동향 파악, 학생들의 쌀 개방 반대 시위 사전 파악 등의 사찰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한총련 전담반」이 학원내에 프락치공작을 기도했음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경장이 자술서, 반성문 등의 내용을 시인함에 따라 확인되었다.

강경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학생회관 쓰레기장에서 한총련 관련 인쇄물 2, 3종을 수거한 뒤 대운동장을 지나가다 이곳에서 야침운동을 하던 한양대 총학생회 간부 10여명에 의해 불합려, 서울시경찰청내에 「한총련 전담반」 구성된 사실과 이들의 명단공개, 학원사찰의 방법, 프락치 공작기도 등의 내용이 담긴 자술서와 반성문을 쓰고 4일 오후 4시경 풀려났다.

강경장은 「자술서」에서 프락치 공작기도사실에 대하여 「도덕적인 관념에서 양심에 가책을 느끼며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 확신합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총련은 이와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이 5개월전부터 「한총련 전담반」을 운영하며 벌이고 있는 학원사찰행위는 개강을 전후해 고조되는 쌀수입개방저지 학내 분위기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현정부의 숨은 의도」라고 말한 뒤 서울경찰청장 즉각 사과, 관련자 직위해제, 「한총련 전담반」 공개 해체 등을 촉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경찰청에 위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4일 역대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았다고 밝히며, 그동안 한국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가협」은 또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마져 국가보안법 철폐를 「희망」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더 이상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4일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 간첩활동 그리고 국가기밀 등을 모호하고도 폭넓게 규정하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협약과 국제적인 인권규준들에 합치시키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I 한국지부」는 성명에서 92년 「국제인권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에 가장 중요한 장애물로 유엔 인권위원회가 인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용하며, 국가보안법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

한 제한조항들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 등에 의한 제한의 범주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여성인신매매·전쟁피해문제 회의 3월 9일-15일 동경에서 「여성인권모의법정」도 열여

아시아 지역 각나라 여성들이 여성인신매매와 전쟁피해로서의 아시아 여성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오는 3월 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동안 일본 동경에서 열린다.

지난 91년 구성된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법률가, 여성운동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아시아 여성인권 모의법정」이 진행된다.

또 95년 북경에서 열릴 「세계여성대회」 참가 논의, 아시아 지역의 여성인신매매와 전쟁피해 여성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는 워크샵이 열린다. 이외에도 일본의 흥동가인 신주꾸를 비롯, 아시아 여성이 주노동자들의 현장을 방문하고, 전쟁범죄 희생자를 위한 촛불추모제와 거리행진도 계획되어 있다.

한국측에서는 「모의법정」의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이우정 의원(민주당)을 비롯하여 김복동씨(정신대피해자), 김현자씨(미군에 의한 희생자), 이번 회의의 한국측 책임자인 이에자씨(KNCC 여성국장) 등이 참가한다.

### 알림

-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향한 제7차 여성노동자 대회
  - 주최 : 3·8 세계여성의 날 86주년 기념 공동위원회
  - 일시 : 94년 3월 5일(토) 오후 3시-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강당
- ▷ 1부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 대회사 : 김유미(병노련 위원장) / 기념사 : 양규현(전노협 의장)
- ▷ 2부 : 3·8 여성의 날 기념 신곡발표 / 모노드라마 「일하는 여성」-김지숙(연극배우) / 「병원노동자의 하루」(병원노련) / 노래공연(사무금융노련, 병원노련, 전문노련 노래패)
- 각 지방 3·8 여성의 날 기념 행사일정
  - 인천 : 6일 오후 2시 / 부평4동 성당
  - 마산 : 8일 오후 6시 30분 / 가톨릭 여성회관
  - 광주 : 9일 오후 6시 30분 / YWCA 강당
  - 부산 : 13일 오후 2시 / 부산대학교 효원회관

### 단체탐방 12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오랫만에 잘된 한국영화를 본 사람들은 항상 「한」을 이야기한다. 「정말 잘된 영화야! 외국사람들은 「한」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절대 이해못할걸! 슬픔, 분노... 어떤 언어로도 표현이 잘 안되잖아!」 이렇게 「한」을 꺼내고 사는 우리들만, 「한의 치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는가? 그것은 항상 거적에 달린채로 음지에서 썩고 떨어야만 하는 것일까? 치유를 거절하는 음지의 「한」에 대해 팔을 걷어부친 사람들을 찾아가 본다. 40여년을 쉬쉬하다가 어느날 마스크에 방방거리다가 슬그머니 우리의 관심밖으로 사라져간 이름, 정신대! 그 역사적 상처와 현재의 피해자들을 돌보고 정의의 이름으로 역사에 새 간판을 달고자하는 「정대협」은 <여성평화의 집>에 위치하고 있다. 조그마한 지하 구석방에서 간사 2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창문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다리가 웬지 무심해 보인다.

그간 「정대협」이 해온 일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살펴본다. 자료발굴사업도 그저 그렇고, 열심히 매달려 연구하는 학자도 별로 없고, 국회에서의 대정부요구도 미미하고, 정부는 배상 안받아도 괜찮다고 하고, 한마디로 뒷집지고 팔짱 낀 자세다.

이는 오히려 일본의 자세와 반대되는 경향인데, 일본정부는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이지만, 정신대 문제에 대해 조상들의 잘못을 밝히자는 운동이 일본열도의 이 마을 저 마을 작은 단위까지 확산되는 크고 작은 흐름이 존재한다.

중·고생의 수학여행이나 노조자치모임, 교사모임 등이 우리나라에 와서 피해사태답사와 그에 대한 교육을 「정대협」에 요청하는 일도 있고, 일본 사회당에서도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에 진상규명 등의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사국인 우리 정부의 반응이 없어 무색해진 일도 있다. 이런 점이 일본의 극히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느낌이 든다. 「우리」의 경우 「과거는 물어버리지」는 정서가 지배하고 있는데다가, 정신대 문제를 「성」과 연결된 「수치

심」으로 왜곡시키는 태도 등이 문제의 발전을 어렵게 했고, 뉴스의 솜씨가 됐을 당시에는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에서 정신대 문제 강연회나

### 「정신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배상 「정대협」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죄담회를 앞다투어 개론했지만 그런 관심이 사회전반적으로 후퇴했고,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 등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대협」이 걸어온 길은 다음과 같다.

종교계(교회여성연합회등), 연구모임(정신대연구회등), 사회운동조직(여성운동연합등)이 결합하여 19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만들었다. 조직구성은 최고의결기구인 대표자회의를 필두로 공동대표 3인(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실행위원회(13명), 총무 1명과 상근간사 2명으로 되어 있다. 「정대협」이 첫발을 내디딘 90년에는 정신대 문제가 밝혀지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해였고,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과 더불어 신고센터가 개설되어 많은 사례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대협」이 내건 목표는 7개항으로 「정신대 문제 진상규명, 일본정부의 범죄인정,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추모비 건립,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배상, 역사교과서에 기록하고 가르치는 것, 전범을 처벌하는 것이다.

91년에는 일본정부의 범죄성이 여실히 폭로되었고 92년에는 일본정부의 1차 공식보고서가 발표되고, UN 제소, 아시아 연대회의 결성,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 모금 국민운동본부 출범, 정부의 생활보호조치법안 시행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93년엔 일본정부의 2차보고서가 나왔고 「정대협」은 책임자 처벌요구를 목표에 추가했다. 94년 현재에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 얼버무리려는 일본정부에 대해 「전쟁범죄」를 인정하게 하고 국제법에 따른 법적 배상을 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런 활동을 크게 나눠보면,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활동, 홍보와 출판활동, 국제연대 활동, 일본정부에 대한 활동, 한국정부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 피해자를 위한 지원활동 등인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진상규명활동은 올해 총독부 관련 자료발굴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

일 계획이나 국내 학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쉬운 형편이다. 출판활동은 정대협 활동 소식이 격월간으로, 정신대 자료집이 4집까지 나온 바 있으며, 올해도 2권의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 중 주목할 부분은 국제연대 활동인데 오히려 국내에서의 정신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보다 더 활발하다. 세계적 정서가 「한 국가가 이런 일을 제도적으로 입안하고 국가공권력으로 강제시행했다」는 데 대해 놀라움과 분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아시아연대(필리핀, 타이, 일본, 타일랜드, 홍콩, 인도네시아), 북미연대(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시카고, 캐나다)와 일본에 3개 단체가 정신대 문제에 공동참여하고 있다. 국제활동을 통해서 북한과의 연대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바 있다.

「정대협」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하루는 정신대 할머니들과의 전화통화와 만남, 자료정리 등으로 채워지고, 일주일은 「수요시위」를 준비하는 채워진다. 92년 미야자와 일본수상의 방한 때부터 시작되어 이제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수요시위는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굳어졌다.

앞에서도 정신대 문제에 대해 실종된 「우리」의 노력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정대협」이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역사를 바로 알고자 하고,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 민족자존과 민족정기의 회복이라는 것을 자기 일의 중심에 두고 생활하자는 것이다.

정신대 문제 진상규명,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 책임자 처벌, 국제법에 의한 배상 - 「정대협」이 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하지 않을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정신대 문제 다룰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유산

### 4일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교묘한 방해 이중기준 드러내

### 자국문제 언급 봉쇄하려고 정신대 등 희생양 삼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작년 8월 '소수자의 차별방지 및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이하 소위원회)의 결의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노예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안이 미국의 교묘한 방해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로 다시 보내져 1년뒤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권위원회 산하에 '현대형 노예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을 설치하여 정신대 문제 등을 다루려는 안건도 영국, 프랑스 등이 예 산문제로 반대해 내년에 다시 상정되어야 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3월 4일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결과, 해결책까지 제시할 임무를 지닌 3년기한의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를 임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대 등의 문제를 직접

다룰 수 있는 특별보고자 임명은 제동이 걸렸지만 이 주제의 특별보고자의 임무중 정신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소위원회에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에 관한 연구를 저지시키기 위해 소위원회가 다루는 연구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주제를 추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절차상의 이유를 내세웠다.

미국이 이번에 자국문제가 단지 국제사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정신대 문제 등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을 막아 버린 것은 미국 인권외교의 이중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이란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인도적'인 명분을 내세우며 군사작전을 펼쳤던 것을 주로 의미하여, 직접적인 의미는 소말리아, 이라크 등에 '인도적 개입'을 주도했던 미국이 '상처받은 영광'을 혼자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많아 미국이 인권침해국으로서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리고, 국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미리 췌

## 임금차별 철폐, 지방의회 여성 20%진출 등 결의 세계여성의 날 기념 7차 여성노동자 대회

86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생산직, 사무직 여성노동자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7차 여성노동자 대회"가 3월 5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고려대학교에서 열렸다.

'3.8 세계여성의 날 86주년 기념 공동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회에서는 1부 김유미씨(병노련 위원장)의 대회사 등에 이어, 2부 문화행사에서는 <94 여성노동자 선언>을 채택하였다. 문화행사에서는 연극

기를 박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한편 정신대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오는 7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여성 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38차 회의에서도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배우 김지숙씨가 공연한 '일하는 여성', 병원노련 노동자들이 '병원노동자의 하루'라는 시낭송, 여성의 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7차 여성노동자 대회"가 보여 참여한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발표된 <94여성노동자 선언>은 임금차별 철폐,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 채택, 유급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보장, 지방의회 여성 의석의 20%채취 등을 94년의 주요과제로 제기하였다.(2면참조).

### ◆ 공 판 안 내 ◆

- 3월 8일(화)
  - 10시, 양규식, 유가증권위조등, 421호, 1회
- 3월 9일(수)
  - 2시, 김관식, 폭력행위등, 424호, 1회
- 3월 10일(목)
  - 10시, 한주석, 특가법(뇌물)등, 302호, 선고
  - 10시, 서진현, 강도살인등, 319호, 선고
  - 11시, 정낙훈, 국가보안법, 311호, 2회
  - 3시, 이동근, 폭력행위등, 422호, 속행
- 3월 11일(금)
  - 10시, 김수곤의 2인, 변호사법위반등, 321호, 1회
  - 10시, 배정수, 업무상횡령, 424호, 1회
  - 11시, 심우식의 1인, 배임수재등, 318호, 속행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좌번호:계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 94년 여성노동자 선언

오늘 우리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이 땅 일천만 노동자의 단결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논리로 현 정부는 기업에게 각종 규제완화의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반개혁적인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월차, 생리휴가 폐지와 변형근로시간제 실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특별구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기도와 임금동결 정책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우리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노동자간의 차별.경쟁을 심화시키는 임시직.용역노동의 확대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복지,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일부 기업주만 살찌게하는 정부정책을 거부한다. 또한 노동운동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여 노동운동을 각계 사회운동과 분리시키려는 정부정책을 단연코 거부한다(중략).

이제 우리는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7차 한국여성노동자대회를 통해 남녀차별철폐와 여성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차별을 철폐하고, 정치적 사회적 평등실현과 민주사회의 건설을 위해 단결 전진한다.
1. 남녀간, 업종간, 직종간, 학력간, 지역간 임금차별을 철폐시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하자.

1. 이 사회에 만연된 성차별 관행과 여성의 상품화를 척결하고 성차별의 뿌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바른 남녀평등 교육의 실시를 정착시켜 나가자.

1. 불법적인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파견법 제정과 비정규직 고용확대를 반대한다.

1.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부터 20% 여성고용할당제를 실시하라.

1. 여성의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라.

1. 장시간노동, 주야교대근무, 위험.유해한 작업환경, 저임금, 고용불평등의 해소없이 여성노동자들의 모성파괴로 귀결될 유급생리휴가의 무급화를 저지하자.

1. 산전후휴가 90일, 임신중 정기검진휴가, 유급유산휴가, 유급육아휴직제의 남성으로의 확대적용을 쟁취하고 모성보호비용을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1. 남녀노동자 150명이상 사업장과 학교에 보육시설 설치의 의무화, 지역보육시설의 확대와 정부지원의 확대를 쟁취하자.

1. 변형근로시간제, 월차휴가폐지등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노조활동의 자유보장을 위한 노사관계 악법개정을 쟁취하자.

1. 노동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조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자.

1. 국제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인 ILO 조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0.9%에 그친 지방의회 여성의석을 20%로 쟁취하자.

우리는 위의 과제들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994. 3. 5

3.8 세계여성의 날 86주년 기념 공동위원회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IS) 부소장 마크 톰슨

국제인권봉사회(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IS)는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관련 전문인권지원단체이다. 이 인터뷰는 원래 IS의 소장 아드레앙 졸라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스위스 ITV 방송국측에서 50차 인권위의 중간상황을 묻는 인터뷰를 신청했기 때문에 부소장인 톰슨과 대화를 나누는 수밖에 없었다. 이 사례에서도 IS에 유엔인권기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문성과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IS는 유엔 인권기구에 대해서 대다수 정부대표들보다 더 정통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유럽언론에서도 IS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 인터뷰는 2월 28일 오전 11시 IS 사무실에서 가졌다. 대담 : 이대훈)

### ◎ IS 즉 국제인권봉사회는 어떤 단체인가?

--IS는 1984년 여러 국제단체의 합의로 탄생했다. 그들이 목표로 했던 것은 여러 국제인권보호제도에 민간단체들이 보다 손쉽게 접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네바에서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문단체였다. 때문에 IS의 중요결정은 여러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국제집행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IS의 주요활동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에 대한 정기적 분석과 동향보고, 국제인권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인권관련 정보자료 제공, 제네바 유엔본부 방문자 안내 등이다. 현재 활동은 유엔인권위와 인권소위에 집중해 있지만 조만간 안보리의 의제가 인권에 대해서 갖는 연관성도 계속 제기하고 모니터링 계획이다. 유엔인권회의에 관해서는 정기적으로 Human Rights Monitor지를 통해서 동향과 분석을 전달하고 있다.

### ◎ 자신에 대해서도 소개해 달라. 위스키출신이라고 들었어(웃음).

--그렇다, 스코트랜드 출신이다. 92년 8월부터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국제엠네스티와 국제대학봉사회(International University Service)에서 일했다. 한국에는 한번도 못갔다(마크 톰슨, Mark Thomson씨는 현재 만37세의 서글서글한 인상의 사람이며 한국인권운동가들과도 몇번 만나 얼굴을 익혔던 사람이다. IS에서는 주로 교육프로그램과 NGO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 ◎ IS와 유엔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2범주 협의자격\*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자격을 갖고 공식적으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에 참가하는 민간단체이다. 비록 우리 사무실이 유엔 인터센타 코앞에 있지만(웃음), 우리는 유엔과는 완전히 별개인 독립된 민간단체이다. 위치상의 잇점과 다년간 축적된 인권기구에 대한 경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유엔산하의 기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일 뿐이다.

### ◎ IS는 인권위 회의중에 구두발언이나 서면발언을 하지 않던데...

--보통 구두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단 다른 단체에서 언급하지 않는 중요사항이나 유엔에 대한 민간단체의 접근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취한다. 구두발언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구두발언의 중요성을 낮게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도록 권하고 싶어서이다. 민간단체의 유엔활동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는데 구두발언자 가운데는 일시적 효과가 집중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취지는 다른 단체



들을 지원하자는 것이지 대표하거나 앞장서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IS의 역할이 인권단체들과 유엔 사이의 다리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다른 국제단체와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나?

--경제적 권리를 인권의 중요 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개발단체들 (development NGOs)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경제적 권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온 문제이지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인권단체들도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쏟기를 기대한다. 환경단체들과도 협력하고 싶지만 현재로는 역량의 한계다.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대한 IS의 평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회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무질서하게 조직된 대규모회의가 인권증진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NGO들은 제대로 준비할 수도 없었고 체계적으로 참여하기도 불가능했다. 결의문의 내용도 이중적이거나 혼선이 많이 있다. 그 정도에서 멈춘 것이 다행이다. 비엔나에서 있었던 NGO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비엔나대회의 성과는 결의문이나 회의 자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비엔나대회 전후로 진행된 지역적 국가별 NGO연대성이 더욱 중요하게 보인다. 대표적인 예가 여성단체협의체(Women's Caucus)와 아태지역의 인권단체 연락기구(<인권하루소식> 89호 1월20일자 참조), 그리고 한국의 KONUCH(인권단체공동대위)라고 생각된다. KONUCH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

◎ 인권위 회기에 맞추어 진행되는 인턴교육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먼저 이번 교육과정에 한국 인권단체 활동가가 처음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무척 반갑게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은 IS가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다. 사실 IS를 유엔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기 보다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보여주었으면 한다. 인턴교육과정은 보통 연 2회 즉 인권위원회 회기와 인권소위 회기에 이루어 지는데, 인턴들은 매일 매일 각 회의의 전과정을 역할분담해 모니터링하며 전 자료를 수집해서 공동으로 분석한다. 참고자료까지 합하면 이들이 습득해야 하는 내용은 하루에 수백페이지에 달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10시까지의 아침모임에서 공유하고 분석하고 서로 질문한다. 나라별 인권상황 발표시간도 있다. 진행과 전문교육은 줄라 소장이 맡으며, 수시로 특별보고자나 인권위원회 의장, 유엔인권센터 소장 등 국제인권분야의 중요 인사들을 초청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회기가 끝나고는 일주일동안 공동평가를 함으로서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데 기여토록 한다. 앞으로 모니터링과 실제 활동(로비,연대 등)을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이 교육과정에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장소영씨가 참여하고 있다).

◎ 다른 교육프로그램이나 지원프로그램은 없나?

--사실, 제네바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대한 비판이 있다. 그래서 최근 현지에서 직접 진행되는 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는 올해 9월 말 일본에서 개최되는 「여성문제와 국제인권제도에 관한 워크

샵」이 그 첫 시도이다. 이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현지 인권단체와 IS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지만 어디까지나 주최는 현지단체이다. 사실, 제네바에 와서 유엔을 상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미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의 단체들은 제네바까지 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 유엔제도는 복잡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없이 올 경우 실망하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현지에서 진행되는 수준은 교육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

◎ 일본까지 오는 길에 한국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가능성은?

--매우 좋은 생각이고 적극 추진하고 싶다. 현지 교육의 취지는 IS의 활동이 아니라 그 나라 인권단체들의 공동의 필요에 IS의 지원을 결합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런 프로그램의 결과로 그 인권단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인권제도를 이용케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KONUCH와 같은 전국적 연대기구가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먼저 한국 인권운동의 요구와 목표를 확인하고 교육주제를 확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KONUCH의 자료와 활동을 보면, 아마도 국가보안법, 자의적 구금, 고문, 불처벌(면책, Impunity)등의 인권분야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한다. 이럴 경우, 프로그램은 2-3일정도의 집중코스로서, ①한국인권운동의 관심 주제 발표 ②주요 국제인권제도의 의의와 활용방안 설명(IS) ③사례연구 ④한국의 국제인권운동 사례 발표와 분석 ⑤향후 전략 모색 등이 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IS는 국가안보 관계 법률과 과거 범죄의 불처벌 문제 그리고 자의적 구금에 관한 국제적 전문가를 초청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별도의 사전학습자료를 준비하거나 자료목록을 제공할 것이며, 재정확보도 공동으로 노력하면 힘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동시통역을 위한 예산도 교육의 질을 위해 중요하다. KONUCH에서 3월중으로 가결정이 난다면 올해 안에 즉 10월초에 개최할 수 있다고 본다.

◎ 제네바 물가가 아주 비싸던데(웃음) IS 재정은 어떻게 조달하는가?

--구미의 재정단체에 신청해서 조달한다. 인턴교육과정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반응이 좋아 어렵지 않은데, 재정단체에서 IS가 제네바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IS를 1세계 단체로 보기 때문에 기본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이번 50차 유엔인권위에 대한 중간평가는?

--그것은 줄라 소장의 역할이다. 보통 회기가 끝나야 우리의 소감을 말한다. 다음으로 미루자.

\* 2범주 협의자격 :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민간단체들에 대해서 3가지 범주의 협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데, 1범주는 전문가 협의자격을 말하고 2범주는 특정분야 협의자격, 3범주는 유엔기구의 필요에 따라 협의대상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한국의 민간단체로서 유엔 협의자격을 직접 혹은 상부조직을 통해 행사하고 있는 단체는 교회기관을 제외하고는 없다.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시민들이 직접 재판감시한다

### 여성의 전화 등 시민단체 이순심씨 재판 공동방청단 모집중 재판모니터, 석방촉구 서명·탄원서 제출 등

23년간 남편의 구타를 참아오던 지난 1월 17일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40)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공동방청단(가칭)이 구성되고 있다. 현재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씨는 지난 1월 31일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첫재판은 3월말이나 4월초에 열릴 예정이다.

반영시킬 방청단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가능하다.

문의처는 「한국여성의 전화」: 269-2964

### 정든 학교, 울타리 너머로만 쳐다봐 두밀리 분교 폐교 등교거부 자체학습 "25명의 아이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하다"

지난 2월까지 아담하고 깨끗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넓은 운동장에서 뛰놀수 있었던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분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를 이제는 울타리 너머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가 2월 28일자로 가평군 교육청이 두밀리 분교를 폐교시킨후 정문에 빨간 도장으로 봉합까지 해놓았기 때문이다.

농사철을 맞아 들에 나가 일해야 할 '엄마선생님'들에게 비좁은 마을회관에서 용기종기 모였어야 배우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가평군 교육청에서 '엄마선생님'들에게 '무인가 교습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받았다.

두밀리의 한 주민은 "교육예산을 줄이기 위해 폐교한 학교를 포기하면 수익원이 들어가는 마을 길 포장도 속히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며, "두밀리 주민에게는 탁트인 포장도로보다 아이들의 배움의 터전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두밀리 분교에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3월 2일부터 상석국민학교로 가야하는 25명의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

농사철을 맞아 들에 나가 일해야 할 '엄마선생님'들에게 비좁은 마을회관에서 용기종기 모였어야 배우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가평군 교육청에서 '엄마선생님'들에게 '무인가 교습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경고장까지 받았다. 두밀리 주민들은 바쁜 농사일 때문에 계속 가르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을 찾고 있다. 매주 2-3회 오전시간에 국민학교 한학급 규모의 수업을 맡아할 사람을

### 알림

□시민과 변호사 2호(94년 3월호)-서울지방법원변호사회 발간

- 주요내용 : 권두시론-철야수사와 시민의 인권감각(문인구)
- 시민의 소리-변호사에 대한 몇가지 의문(김민배), 법의 비전문가로서의 서글픔(함광란), 변호사와 소득신고(이국영) 등 11편
- 긴급집단-일진 다이아몬드 사건을 해부한다(판결원문 및 초역, 좌담회)
- 법조기자 칼럼-서초별곡(이상호), 명예나 그랜저냐(이재열)-법원방청기-또 다른 삶의 모습(서용미)
- 인권-무료법률상담소,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정종섭), 당직변호사 수행소감(강정원)등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좌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 엠네스티 '새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국제 엠네스티는 9일 '신 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한국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별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구금되어 있는 여러명의 양심수가 존재,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보고, \*국가보안법과 이법의 적용을 받은 200여명이 넘는 수인의 존재, \*과거에 불공정 재판과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양심수 사건을 다시 검토하지 않았다는 예 등을 들며 "군부배경없이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본질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집권 일년을 마쳤다"고 평가하였다.

권리보장, \*사형제도의 폐지와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모두 29쪽으로 되어 있는데 \*양심수를 구금하는 데 이용된 법률과 양심수의 사례, \*양심수와 정치적 수인의 장기적 구금사례, \*정치적 수인들이 당국에 의해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를 받은 최근의 예,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최근 정보, \*국제적 규준에 부합하도록 인권보호장치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 여성의 날 성명

한국노총은 8일 세계여성의 날 기념성명에서 "최근 정부가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을 통해 여성의 모성보호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방침을 만들어 여성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총은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무급생리휴가 방침의 즉각 철회, \*남녀고용평등법의 효력강화, \*국·공립 탁아소와 중소기업체의 공동탁아시설 확대 설치 등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했다.

#### ◆ 알 림 ◆

□국회노동위 등분투 사건과 부당노동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응기있는 시민의 삶' 시상식

- 일시 : 3월 9일 2시-6시
-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최 : 전혜투 지원대책위원회
- 사회:김동완 목사(전혜투 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
- 초청인:김말룡 민주당 의원, 한국자동차보험 노조위원장, 국회노동위원장, 국회윤리위원장, 동부그룹 회장, 서울지방노동청장
- 약정질:박원순 변호사, 조희연 교수, 박창일 신부, 김주연 기자협회장,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배석범 전국건설연맹 위원장

### 무료법률상담소 운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권리침해를 받고도 함이 부족하여 권리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건관련 서류를 챙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 무료법률상담소에 찾아가면 무료로 법률상담 및 원조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이 어렵고 법을 잘 몰라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사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법률원조를 요청한 사건 등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상담이 변호사회 서초별관(522-9100)과 서울시청 시정종합정보센터(731-6710) 두곳에서 이루어진다.

93년 한해동안 서초별관

에서 5598건, 시정종합정보센터에서 7540건 등 모두 13,138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전화상담에는 응하지 않고 직접상담만 가능하다. 당직변호사제도도 무료상담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데 기소전의 사건에 한하며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 남북대화 진전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8일 북한 외교부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 내 일각에서 최근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남북대화의 성공적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편집자주:AI 보고서의 목차. 엠네스티의 보고서가 한국 인권문제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 않다(// 표시 뒤의 사람 이름은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만 기록한 것)

1. 머리말
2. 양심수와 정치적 수인
  - 1)국가보안법:주요한 인권침해//반국가단체 성원이라는 혐의로 구속-사노맹 그룹, 사과원 사건; 당국의 허가없이 방북(시도)한 사람의 구속-박동수-정인근, 황석영; '간첩'과 '국가기밀'(불명확한 개념)-김낙중, 이근희/북한찬양 혐의의 구속;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보고서를 내지 못한 구속-조무하, 송해석
  - 2)3자개입//단병호등
  - 3)사회안전법:석방된 정치적 수인에 대한 제한//이중환, 임수경
  - 4)'전향'제도//김선명, 안학섭, 김성만
  - 5)군·경 양심선언//박석진, 고대성, 이동익, 조정희
3.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재검토 실패
  - 1)70년-80년대에 구속된 장기수//유정식, 조상록, 김태홍, 김성만, 황대권,
  - 2)40년 넘게 복역하고 있는 양심수//안학섭, 김선명
  - 3)강기훈:정치적 재판
4. 고문과 가혹행위
  - 1)계속되는 고문과 가혹행위//김삼석-김은주
  - 2)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구금자의 보호제도 부족//김삼석-김은주, 황주석, 노태훈, 사노맹 그룹, 최진섭
  - 3)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의 부족//노태훈, 홍성담, 박노해, 문국진
  - 4)인권보장을 위해 당국이 취한 조치
5. 사형제도
6.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 부록:한국에 관한 엠네스티의 보고서 목록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 제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 남북한, '남북합의서' 외면한 채 국제무대에서 서로 비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제안되고,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로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알라 라소씨가 선출되었다(관련기사 3면 참조).

유엔인권위원회 회의를 모니터하고 있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장소영씨에 의하면, 라소 고등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 초청연설에서 "모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의 삼자공동체를 강조했다고 전해왔다.

3월 11일 폐회를 앞두고 있는 인권위 회의가 마무리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남북한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서로간에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92년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무색케 하고 있다(관련기사 2면 참조).

남북합의서 6조에서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자'고 밝혀음에도, 3월 7일 남한 대표가 먼저 북한의 '고문, 강제실종, 세뇌'등을 은폐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 이유로 폐

쇄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다음날 북한 대표도 남한의 장기수 문제와 국

가보안법을 거론하며, 현 정부가 군사정권과 다름없다고 비난하였다.

##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전혜투, 작년 4월 7일부터 11개월째 농성중  
5,200여 해고자 '문민'정부 1년간 270여명만 복직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해고되어, 소위 '문민'정부에서 복직의 날을 기다리며 11개월째 농성하는 이들이 있다.

작년 4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37명의 단식으로 농성을 시작한 '전국구속·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전혜투, 위원장 조준호)는 5월 31일 여의도 민주당사로 장소를 옮겨 농성을 1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

전혜투 상황실 관계자에 따르면 "남재회 노동장관이 취임한 이래 복직된 노동자는 한명도 없다"면서 "지금까지 복직한 사람은 5,200여명의 해고자중 27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동안 참을만큼 참았다"며,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경전퇴진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독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또한 '문민'정부 1년동안 법원에서 해고무효판결을 받은 105명도 거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전혜투 소속 노동자들은 3월 7일부터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구 경동산업과 인천의 영창약기등의 공장앞에서는 텐트농성도 벌이고 있다.

또한 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에서 해고자의 복직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노대, 현총련, 조선노협에 설명회도 벌이고 있다.

#### 사과원관련 문용천 집유 "반국가단체 아니다"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찬씨가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항소4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으며, 국보법 7조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이 와같은 판결을 내렸다.

#### ◆ 알 림 ◆

- 민가협 목요집회-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 10(목) 2시, 탑골공원 앞
  - 일본관련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김은주씨와 사노맹사건으로 구속된 전경희씨 어머니가 국보법 피해사례, 폐지 이의등 발표
- '평화의 일꾼, 3월호-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 주요내용 : 조시-김남주 형님 영전에(김진경)/산행기-동지를 찾아 나서야 등
- '한국여성민중목회자 그들의 사역과 삶' 출판기념회
  - 여성민중목회 실태조사보고서
  - 일시 : 3월 11일(금) 오후 2시
  - 장소 : 기독교회관 강당 2층
  - 회비 : 1만원(출간도서 증정)
  - 주최 :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국제 인권 소식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인권위원회 소식(1)은 2월 24일자 참조>

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 결과보고

인권연락기구 사무국 캐나다 Internet에 두기로

한국인권단체공대위(KONUCH)의 이대훈씨가 지난 2.17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고 3월 3일 귀국하였다. 공대위에서는 인권단체들간의 세계연락기구 회의(NLC회의)와 이번 50차 인권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씨를 파견하였고, 그에 따른 1차 보고모임을 지난 8일 가졌다. 공대위는 자세한 내용을 두 차례의 보도자료로 준비하고 있다.

비엔나인권대회의 성과중의 하나인 이번 NLC회의는 2월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제네바 유엔본부 신관 23호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 각 지역과 부문(중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구미, 원주민, 여성, 난민, 장애우 등)에서 인권운동을 대표하는 총 29명이 참석하였다.

비엔나대회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연락기구회의에서는, 인권운동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연락을 위한 공동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과 국제무대에 남측(비선진국)의 인권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시 한번 합의하였다. NLC회의는 전원의 동의로 과도적인 인권연락기구(NILC)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그 사무국을 우선 캐나다의 국제인권단체인 Internet에 두기로 함과 동시에 앞으로 1년동안 지역과 부문의 내적 연락 및 협의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인권운동단체들은 역사상 처음 남측의 주도로 초보적인 세계연락체제를 구성한 셈이며, 앞으로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선진국 정부들의 인권외교와 다른 분명한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가보안법 조사단 파견키로

3월 8일에 있었던 공대위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50차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과 관계된 내용으로 이미 알려진 3개 국제단체의 국가보안법 거론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특별보고자(각 인권주체에 대한 전문가)의 보고 내용과 미국정부대표의 발언중에 '사상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내용이 특별히 주목할 만하다고 한다. 공대위는 비엔나대회 이후 다른 국가보안법사건들과 함께 그 활동이 꽤 알려진 덕분에 홍보 및 여론활동을 전개하는데 매우 유리했으며, 다시 한번 다른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공대위에 대한 기대와 호감을 확인했다고 한다. 아울러, 공대위와 연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면위와 버금가는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법률가협회(ICJ)에서는 올해 국가보안법에 따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한국에 보낼 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유럽기자들은 UN의 주요 회의인 인권위원회에

한국 언론사에서 단 한 명의 기자도 참석하지 않은 점이 매우 의아스럽다는 반응이었다. 미국의 케네디인권센터와 국제사면위 등은 「인권하루소식」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에서 4번째 거론돼

3월 2일 중남미정의평화봉사회, 민선정부에 존중하는 옛 법제와 권력기구의 예로 국보법 거론

3월 2일 유엔인권위에서는, 케네디인권센터, 국제고문방지연합과 국제기독교학생연맹(발언문 <인권하루소식> 2월 24일자 참조)에 이어 4번째로 국제인권단체인 중남미정의평화봉사회(SERPAJ)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거론하여 관심을 모았다. 의제 12(나라별 인권상황)에서 발표된 이 발언은, 많은 나라에서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선정부로 바뀌고 있지만 옛 법제와 권력기구가 잔존하고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묵인의 관행(impunity) 때문에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한국과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 사례의 하나로 언급되었다. SERPAJ는 중남미 10여국에 지부를 갖고 있는 종합적인 인권운동단체이며, 우루과이의 지부장 리카르도 창갈라 박사가 발언하였다.

미국대표 '표현의 자유' 강조, 시가나 취지상 미 국무성의 국보법 폐지발언과 연관

한국 국보법에 관해 케네디인권센터 등 3개 단체가 발언했던 '고문, 자의적 구금, 표현의 자유, 부당한 재판'등을 다루는 의제 10 토의에서 미국대표가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강조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정부의 민간인대표(public member)인 허만 슈와츠 교수는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어떤 민주주의도 지탱할 수 없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민주주의의 꽃이다... 다수가 아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낼 기회를 꼭 가져야 한다. 그들은 새로운 다수를 형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정부의 이 발언이 있는 후 많은 인권단체들이 발언문 사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물론 미국대표의 거의 대부분의 인권에 관한 발언은 정치적 목표(이 경우에는 주로 중국을 겨냥)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미 국무성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시기와 그 내용상 취지가 연관성이 있으며, 또 한국정부의 국가보안법 옹호주장과 불일치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국제무대에서 부끄러운 남북한 인권공방

남한, "고문, 세뇌 등 인권침해 은폐" 비난 북한, "장기수, 국가보안법 문제" 비난

나라별 인권상황을 다루는 의제 12번의 토의과정에서, 지난 3월 7일 남한정부가 먼저 북한인권을 거론하며 공세를 취하고, 바로 다음날 북한이 민감하게 반박하는 등 남북갈등을 국제무대에서 연출되었다.

남한정부대표는 5장분량의 긴 내용의 발언을 하였는데, 전체내용의 80%는 일반적인 외교수사로서 일관했으나 뒷부분에 가서 앞부분의 내용이나 어투와는 완전히 다

른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였다. 남한정부대표는 북한이 "자결권"을 이유로 고문, 강제실종, 즉결처형, 세뇌 등 인권침해를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동시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유엔인권위에서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스스로 '인권천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을 비난하였으며, 그 폐쇄성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그 때문에 북한내 인권상황을 다른 어떤 나라도 알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서 다음날 북한정부대표는 유엔현장에 나타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발언(5장 조금 넘는 분량)을 시작하였다.

이어 이번 인권위에서, 특히 의제 12번을 다루면서 일부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발언이 가져오는 부정적 작용을 지적하였다. 그 논거로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인권에 대해서 "재판관"과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전략적"이라는 점이었다. 이후 발언의 상당부분은 인권회의에서 보여준 서방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서방 국가들이 서로 상대국의 인권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관심을 모았다. 서방국가의 인권문제로 실업,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과 범죄 그리고 외국인 배타주의의 확산 등을 예시하면서 빈부간 인권의 이종기준을 지적하였다.

북한정부 역시 후반부에 가서는 현 남한정부가 군사정권과 다름없다면서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한 미국 정부의 말을 인용하여 남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였다.

곧이어, 남북한은 각각 예정된 발언 후에 주어지는 반박권을 행사하였는데, 남한대표는 북한의 국보법 거론에 대해서 국보법이 필요없는 국가안보상황을 바란다고 하면서 북한의 형사법과 재판관행에 대해서 비난하였고, 북한대표는 80년부터의 민주항쟁, 고문, 쿠데타를 열거하면서 현재 남한정부가 이름만 문민정부이지 군사독재와 같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남한대표는 북한에 대하여 "DPRK(북조선인민공화국의 영어약칭)"와 "북한"이란 호칭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다음날 북한대표도 남한(정부를) 가르켜 시종일관 "남한(정권regime)"이라고 표현하였다(외교 관례상 다른 나라의 정확한 국명을 호칭하지 않는 것은 노골적인 결례이다).

남북한 외교무대에서 상호 비난 남북한의사와 특사교환회담 무산

이번 남북한 인권공방의 특징은, 국제무대에서의 남북한간의 상호비방이 재발했다는 점과 상호간 인권문제 거론으로 이른바 '상호비방과 내정간섭 금지'의 구분이 사실상 애매하다는 점(국제인권법의 원리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거론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으로서 내정간섭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남한이 먼저 논란을 시작하여 시기상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 특사교환 실무 접촉과 절묘하게 일치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인권위원회가 열리는 제네바 현지의 해외 인권단체들의 평에 따르면, 남북한 정부는 같은 민족의 불편한 인권문제를 서로 장시간 비난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남한은 먼저 공세를 취했다는 점에서, 북한은 강대국의 정치

적 인권외교(미국의 국가보안법 거론)를 그대로 재인용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통 이 정도의 발언은 현지 대표부의 자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국 정부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남북인권전쟁은, 인권을 핑계로 한 정치권력간의 전형적인 공방 사례로서 최근 미국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며 남북관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된다.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도 인권을 정치에 이용하는 관행은 거세게 비난받았던 바, 실제 인권상황의 개선보다는 이같은 '반사적 합리화'와 정치적 인권외교의 풍조가 확산되는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주: 92년 체결된 남북합의서 1장 3조는 남북한이 서로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상호비방과 중상을 중지하자는 내용이며, 1장 6조는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호세 아얄라 라소 선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제안과 12월 20일 유엔총회의 결의로 신설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소씨가 선출되었다. 인권고등판무관은 인권단체들이 비엔나대회의 거의 유일한 가시적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유엔사무부총장급이다. 이번에 선임된 라소 판무관은 미국주재 대사, 제네바주재 대사 등 외교의 요직을 두루거친 높은 실력을 갖춘 외교관으로서 국제인권제도와 인권법에도 정통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인권상황에도 익숙하고 여러 인권운동단체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의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라소 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원회의 초청연설에서 인권문제를 솔직하고 편견없이 협의하기 위해 모든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모든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데 있다는 점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 삼자공동체를 강조하였다. 이어 라소 판무관은 인권증진을 위해 정부들과 유엔인권기구들,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인권단체들, 그리고 언론간의 협력을 높이는데 우선권을 두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인권고등판무관은 그 기능과 효과를 가늠할 때, 유엔인권센터 등 다른 인권기구들과 어떤 관계 혹은 어떤 권한과 재원을 가지는가가 관건인데, 아직 분명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라소가 선임되기 전 인권단체들은 어떤 인물이 판무관에 선임되는가에 따라 활동과 권한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단체공대위 혹은 인권운동 사랑방으로 문의바랍니다.>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절제·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흥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컴퓨터 통신에 잇단 국가보안법 적용

9일 '현철동' 회장 기무사에 연행·구속돼

영향력 커가는 컴퓨터 통신에 대한 통제로 보여

컴퓨터 통신에 잇달아 국  
거보안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신상의 글이 출판물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법률  
적 논쟁 이외에도 통신에  
대한 사법처리가 최근 사  
용자가 급격히 늘어나 영  
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컴퓨터 통신의 내용을 통  
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작년 12월 7일 김형렬씨  
(당시 '현대철학동호회' 회  
장) 연행, 지난 달 23일 이  
창열씨('희망터' 회장)를 컴  
퓨터 통신망에 '이적표현  
물'을 게재한 혐의로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한  
데 이어, 3월 9일 오전 10시  
'현대철학동우회' 임시의장  
인 김영선씨가 국군기무부  
대에 연행·구속되었다.

김형렬씨의 구속이후 작  
년 12월 중순에 열린 비상  
총회에서 임시의장으로 선  
출된 김씨는 '현대철학동호  
회의 위상' 등의 글을 통신  
망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  
는 것으로 보이거나 김씨를

면회한 김씨의 누나에 의하  
면 기무사는 구체적으로 혐  
의내용을 말하기보다는 '전  
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조사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국군 제602기무부  
대에 연행·구속되었고, 수  
방사 헌병단 유치장에 수  
감중이며, 3군지사 58탄약  
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중  
이었다.

한편 하이텔의 동호회 중  
하나인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에는 김형렬씨의 구  
속에 이어 김영선씨에 대  
한 구속은 "통신을 통해  
진보적인 생각을 교류하고  
공유하려는 젊은이들의 움  
직임을 막으려는 시도"라  
며, 컴퓨터 통신 이용자들  
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 실린 여러 편의 글  
이 올라 있다. 또 한 이용  
자는 "80년대에는 거리와  
교문에서 싸웠다면 90년대  
는 컴퓨터에서 다시 싸움  
을 벌이고 있다"고 개탄하  
기도 했다.

###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월 9일자(119호) 1면의 '사과원 관련  
문용찬 집유' 기사중 '이적단체구성력을 적용해'라는 내  
용은 '사과원이 반국가단체라는 공소장의 내용을 받아들  
이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려'로 바로잡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돕는 이  
적단체로 볼 수는 있으나 검찰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  
를 구분하지 않고 공소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  
습니다.

내외통신사가 공개적인 통  
신망을 통해 올린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를 받아 그  
대로 통신망에 전제한 '희  
망터'의 경우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인 이증기준  
사례로 보여 최근의 컴퓨  
터통신에 대한 검열이 설  
득력을 잃고 있다.

## 여성상담 전문교육 교육생 모집중

여성의 전화 4월 12일부터 매주 2회 20강좌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는 여성문제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하  
고 여성상담원 양성을 위  
해 제21기 '여성상담 전문  
교육'을 여성문제 및 상담  
에 관심이 있는 여성을 대  
상으로 오는 4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일년에  
두차례씩 개설되어 온 '여  
성상담 전문교육'은 올해  
11년째를 맞이하며 그동안  
배출된 교육생은 1천 500  
여명에 이른다. 교육생의  
대부분은 가정주부가 대부  
분으로 모집은 선착순이며  
모집인원은 70명이다.

## 부산, '노동인권협회' 추진

법률상담·의료서비스 제공

부산의 변호사들과 젊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노동  
자들의 인권신장과 의료생  
활개선을 돕기 위한 인권  
단체가 3월말경 발족된다.  
그 동안 지방에는 대구의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의  
모임'(공동대표 정학동 3  
명), 각 지방 여성의 전화  
이외에는 이렇다할 인권단  
체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  
번에 노동자의 건강과 인  
권문제를 다룬 인권단체가  
생기는 것은 고무적인 일  
로 보인다.

'부산지역 노동단체협의  
회' 주도아래 문제인 변호  
사등 한국사회의 여  
성문제를 다룬다. 또 성격  
이론과 상담에 대한 이해  
(정진경), 여성의 전화와 여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좌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 9일 전해투 지원대책위 '돈봉투·토론회'(요약)

### '부정비리 고발하는 사람 보호되어야 한다'

### 사회비리 등에 대한 집단적 감시운동 필요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전해투 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동완) 주최  
로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  
데 열린 '국회노동위 돈봉  
투 사건과 부당노동행위의  
진상을 요구하는 토론회  
'에서 노동위 돈봉투 사  
건과 동부그룹(회장 김준  
기)의 부당노동행위에 대  
한 대처 방안을 토론했다.  
토론회에는 김말룡 의원  
(민주당, 노동위)과 김철호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  
합) 위원장이 초청되었고,  
박원순 변호사, 조희연 교  
수(성공회 신학대), 박석운  
소장(노동정책연구소장)등  
6명이 약정토론자로 참가  
했다.

김말룡 의원이 돈봉투 사  
건을 폭로하기까지의 경과  
를 설명하고, 이어 한국자  
보 노조의 김철호 위원장  
은 93년 5·3합의 이후 93  
년 10월이후부터 동부그룹  
이 노조파괴 책동을 전개  
하고 있다고 소상히 밝히  
고, 노동조합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며 사회단체의 관심  
을 촉구했다.

이어 토론회 나선 박원순  
변호사는 속말로 "불났다  
고 신고해도 신고한 사람  
을 잡아갈 수도 있는 현실"  
에서 김말룡의원 처럼 부  
정을 폭로하는 사람에 대  
한 공정한 처우가 필요하  
며, 부정비리를 폭로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  
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  
사는 국회돈봉투 사건처럼  
비자금을 만드는 등의 부  
정비리가 '관행화'되어 있  
다며 비자금이 존재할 수  
없도록 '비자금 수사를 촉  
구하는 항의'를 조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  
대로 된 사법부, 검찰을 가  
져야 한다고 대법관, 검찰

총장에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선임되는지 등을 감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수는 돈봉투 사  
건은 부패가 고착·관행화  
되어있는 부패정치인, 기  
진상을 요구하는 토론회  
의 검은 교환구조에서 발  
생했다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구조에서 비리가 구  
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양심적인 사람의 폭로 이  
외에는 거의 없으며, 관행  
적으로 묵인되는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적인 인사가  
필요하고 아울러 이를 보  
장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교  
수는 또 돈봉투 사건이 가  
심거리로 문힐 뻔 했다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공  
적으로 확산되는 사회구조  
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또  
김영삼 정권이 구조화 되  
어 있는 부정비리의 한층  
면만을 드러내 정권을 강  
화하는 '통제된 개혁, 통제  
된 민주주의'에서 부정비  
리가 유아무야되고 있다고  
보고, 김영삼 정부가 군부  
정권이 실시했던 민주배  
성장정책을 근본적으로 바  
꾸지 않을 경우 군벌정권,  
대기업정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언 기자회견장은 언  
론이 한국자동차보험노조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잘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  
이 사실임을 밝히고, 동협  
회장 수사에서 국회의원에  
게 자금이 전달된 사실을  
검찰이 알고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부정비리가 얼  
마나 관행화되었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자금  
수사를 촉구하는 범국민적  
인 펀치쓰기 운동 등이 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  
대로 된 사법부, 검찰을 가  
져야 한다고 대법관, 검찰

수 있다며 언론에 대한  
감시운동의 필요성을 지적  
하기도 하였다.

박석운 소장은 자보노조  
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시행되는 데 대해  
우리사회가 노동문제에 여  
전히 부관심하다며, 전형  
적이고 원시적인 노조탄압  
이라고 밝히고, 동부그룹  
의 자보노조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시키기 위  
해 집단적으로 고발하는  
방법을 채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안중원 전국시  
설관리노련 위원장이 중소  
기업에서는 국민들이 설마  
설마할 정도의 공공연한  
폭력과 해고가 날마다 일  
어난다고 밝혔고, 박장일  
신부는 권력분과 엘리트가  
서로 나눠먹는 유착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 통신 늘어나

### 특정 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

최근 컴퓨터의 사용이 대  
중화됨에 따라 20대뿐만  
아니라 30·40대도 많이 이  
용하는 컴퓨터 통신의 동  
호회나 '여론광장' 등에서  
인권을 주제로 토론이 벌  
어지고 있다.

10일 현재 하이텔의 '토  
론의 광장'에는 '한국의 인  
권사각지대를 파헤치자'(2  
월 28일 개설), '서울대 성  
희롱 사건에 대하여'(3월 7  
일 개설), '희망터 사건에  
대하여'(3월 4일 개설) 등  
의 란이 마련되어 통신이  
용자의 의견을 듣고 토론  
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인권사각지대'의  
의장인 고병호씨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정치적인  
찰의 폭력이 현재에도 여  
전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  
원, 요양원 등에서도 인권  
유린 행위가 심해 토론의  
광장을 개설했다"고 밝히  
고 있다.  
'한국의 인권사각지대'에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국  
회노동위에서 한국자동차  
보험 박장광 상무의 증언  
이 거짓임을 증언해 '돈봉  
투 로비사건'이 사회화되  
는 데 기여한 김경호씨  
(32)에 대한 '용기있는 시  
민' 표창도 있었다.

( 1 면에서 계속 )  
중인데 현재 구체적인 단체  
명칭 과 규약에 대한 마무  
리 협의만 남겨놓고 있다.  
'부산노동인권협회'엔 문  
변호사와 노무현 의원, 조  
성래 변호사 등 부산지역  
노동조합 고문변호사를 말  
아온 9명의 변호사와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청년한의사회'와 일반개  
업의 등이 참가, 노동자들  
을 위한 민·형사상의 법률  
상담과 사건수임 및 의로서  
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는 고씨가 교도관의 폭행  
등 구치소에서의 인권침해  
를 지적한 것 이외에도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폭  
력을 비판하는 글 등이 실  
려있다.

'서울대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에는 성희롱의 개  
념과 사례등 16편의 글이  
올라있다. 또 '희망터'사건  
에 대하여'에는 노래극단  
'희망새'의 '아침은 빛나  
라'의 원작인 '검은 산 불  
은 피'의 작자인 오봉옥씨  
의 글, '희망터 사건과 국  
가보안법', '현대철학동호  
회 사건개요', '국가보안법  
폐지로 힘을 모아야'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바른통신을 위  
한 모임'의 '시사·연론',  
'긴 호흡, 강한 걸음'란에  
는 '유급생리휴가 폐지 반  
대', '외국인 노동자와 산  
업재해', '대통령의 국보법  
소신', '국보법이 아직도  
설치고 다닌다?' 등의 글  
이 있다.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PC통신 국보법 적용에 동호인단체 공동대응하기로 10일 '현철동' 성명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 탄압'

지난 9일 통신동호회 '현대철학동호회' 임시회장 김영선씨가 국군 기무부대에 연행·구속된 데 항의하는 성명이 발표되었다.

김씨가 회장으로 있는 '현대철학동호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의 앞날마저 불투명한 국가보안법이 수구세력과 안보지상주의자들에 의해 아직도 표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박탈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 성명은 "새로운 정보매체로 등장한 컴퓨터 통신내에서 진보적인 의견, 이념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목적으로 탄생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의 잇단 구속은 통신인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탄압임이 분명하다"며 컴퓨터통신으로 구속된 김형렬, 이창렬, 김영선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통신관련혐의로 회원이 구속된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외에도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 등은 잇단 컴퓨터 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통신인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공동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여성학 공개강좌 3.31-5.12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주부나 일반시민에 대한 여성학 강좌와 각 단체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교육과정이 꾸준히 개설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상담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제5기 여성학 공개강좌'를 3월 31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설한다. 상담원 예비교육과정이기도 한 여성학 공개강좌는 6주에 걸쳐 이어지는 삶을 위한 시작(최영애), 여성과 일(한명숙),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배금자), 일하는 여성(최영애)등 모두 12강좌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후 상담원이 되고 싶거나 관심이 더 있는 사람은 5월 19일부터 실시되는 6주간의 상담원 본교육과정과, 이어설치되는 8주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하면 전문상담인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명

### ◆ 바로잡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월 10일자(119호)의 사과원 관련기사중 '문영찬'씨를 '백성기'씨로 바로잡습니다. 문영찬씨는 지난 2월 28일 징역 2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또 3월 11일자(120호)의 '바로잡습니다' 중 2월 9일은 3월 10일로 바로잡습니다.

문서를 찾아 진상규명 작업에 동참하고, 정신대 문제가 국회내에서 올바르게 다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국보법 폐지촉구 불교인권위등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한상범등)를 비롯한 6개의 불교계 인권단체들은 10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중령의 일본방문때 정신대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국회내에 정신대 관련특위 등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정대협'에서 이호재, 윤정옥씨등 5명과 이우정, 제정규, 원혜영, 김원용 의원 등이 참가한 이날 모임에서 의원들은 일제당시 정신대 강제동원에 관련된

이며, 연락처는 576-7128. 정대협 정신대특위 설치요구 10일 관심있는 의원과 화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의장 이호재등)는 10일 국회에서 '국회 정신대문제 대책의원 모임'과 회동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 취임의 일본방문때 정신대 문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국회내에 정신대 관련특위 등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였다.

### ◆ 민가협 임시 연락처 ◆

·전화 : 736-6818 / 팩스 : 723-2371  
\*통신장애로 인권단체간에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 ◆ 알 림 ◆

- 원진레이온 직업병 대책과 재취업 완전보장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주최 :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대위(0346-63-3645)  
·일시 : 3월 12일 오후 2시 / 장소 : 종묘공원
- 이영빈 목사·김순환 선생 귀국추진 홍보 위한 기자회견 - 이영빈목사 부부 귀국추진위(393-4662)  
·일시 : 3월 14일(월) 12시 / 장소 : 세실 레스토랑
- 지도력향상 위한 여성간부교육-한국여성민우회  
·일시 : 3월 16일(수)-3월 23일(수)  
·대상 : 노동조합 여성간부 및 여직원회 간부  
·참가비 : 35,000원(숙박비포함) ·전화 : 269-5763

## 단체탐방 13 / 천주교 인권위원회

하님은 당신의 모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고(창세 1.26)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강생으로 모든 사람과 당신 자신을 일치시켰습니다(사목헌장 22항).

위의 글에서와 같이 인간을 하느님과 더불어 완전한 존엄과 행복을 차지할 위대한 존재로 보고, 이러한 인간의 권리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어느 시대 어느상황에서나 실천할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한데서 천주교 인권위의 활동은 시작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약속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회의 아픔과 불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일들이 사회로의 관심을 차단하고 교회를 박해화된 틀안에 가둬두려는 이들에 의해 차단당한 것이 암울한 지난 시절의 역사였다. 이를 깨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었고 87년 이후의 격변기를 맞으면서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가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주교 사회운동협의회와 정의구현 전국연합이 한데 모여 이전 시절에 있었던 정의평화위원회를 계승할 조직으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을 88년 11월 14일 창립하게 되었다. 인권위원회는 이 속에 산하기구로 만들어졌다가 90년부터 대외적으로 천주교 인권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독자적 기구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

시작부터 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갖 시작하는 마당에 임수경 방북, 문규원 신부 방북사건이 터지며 풍풍 열어 불은 공안정국의 바람이 몰아닥쳤다. 이들을 뒷바라지 하기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사무실을 법원과 면회실에 차리다시피 해야 했으며 가는 곳마다 우익단체의 빨갱이 운운하는 플래카드와 욕설과 부딪쳐야 했다. 출발부터 이렇게 단련되기 시작한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다투고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왔다고나 할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과정의 일들을 정리하고 지내을 틈과 인

력이 없었다는 점이다. 황인철 변호사나 이돈명 변호사처럼 인권운동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정의평화위원회의 평신도로써 활약하던 시절부터 해서, 한 일을 밖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일단 하기로 결정한 일은 끝까지 해낸다는

## 인권운동은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며 전국의 신도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고통을 새롭게 고찰하는 씨앗

자세로 일한 것이 남겨져 있는 가장 큰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권위의 조직은 최병모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28인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진 인권위원을 두고 있다. 사무국은 오창래 국장과 최은아 간사가 담당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법률구조사업, 구속자방문 및 지원사업, 연대활동, 조사활동, 교육·홍보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최근에는 군사독재시절 조작성된 일본관련 간첩사건(2-30건)에 관심을 갖고 석방운동과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와 재소자 인권문제도 주요 관심사이다.

법률구조사업에는 임수경, 문규원신부, 서경원의원, 박노해시인등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구성등이 있었지만 이들처럼 크게 알려지고 지원통로가 많은 양심수들에 비추어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 각 지역교구에 문제를 들고 찾아오는 이들에 대한 활동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들 사건을 맡기로 결정이 되면 소위원회를 꾸리고 사안별로 책임을 맡게 된다. 몇가지 예로서 교통사고 혐의를 받은 한 시민의 경우 2년제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군내 수류탄 투척 사건으로 동료살해혐의를 받은 이의 무죄선고나 거제도의 지심도 사건을 인권위원 전원 참여하여 법률자문을 한 일 등을 들 수 있다.

재소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의 비엔나 인권회의 참석시 외국의 감옥을 현장답사하면서 느낀 바가 크다. 지역주민의 봉사과 협력속에 이루어지는 교도소의 재활교육 등을 보면서 감시와 처벌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의 감옥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도 그만큼 커졌다. 연대사업으로는 해외 가톨릭관련단체와 교류하는 일, 국제사면위원회와 펜클럽에 박노해·이강형씨 소식에 관해 전달한 일 등의 해외 활동과 국내활동으로는 국내 각종 사안에 대한 관련 대책위의 활동과 지원을 들 수 있다.

교육·홍보 활동으로는 가톨릭 신문이나 평화신문, 빛두레 등에 천주교 인권위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12월 첫주가 인권주일로 선언된 이후 빛두레에 강연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올해에는 4·5월 중에 독자적 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이다.

현재 주안점을 두고 있는 재일교포 관련 조작성사건 해결을 위해 일본에서 현지조사를(93년 9월) 벌인 바 있으며, 올해에도 지소적으로 조사활동과 재심청구, 석방추진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일을 위해 일본 정의평화협의회와 협력하고 있다. 일본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조작성사건임이 분명함을 더 확실한 바 있었다. 군사정권 시절에 이루어진 일들이지만 소위 '문민적'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들이 당한 고문과 가족의 붕괴, 정신적·물질적 파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해진 고통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다. 과거에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들이 희생되었다면 현재에도 이들의 희생이 필요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인가?

한때 대학연극부의 인기공연 작품이었던 '신부님, 우리들의 신부님'이나 87년 명동성당의 햇빛 가득한 마당과 철탑을 기억해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천주교인권위에 거는 기대는 크기만 하다. 인권운동은 책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현장을 뛰는 이들이 많아 이루어진다는 천주교 인권위의 바램처럼 '주의 길을 닦고 예비 할 의무를 띤' 전국의 신도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의 고통을 함께 고찰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데 천주교 인권위의 땀방울이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크다.

글/인권운동 사랑방, 류은숙



#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대법원, 노중선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기부와 검찰수사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기부가 접견을 제한하였다는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검찰에서의 변호인 접견제한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검찰직권조사를 보아도 증거능력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해 사법부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경종을 울릴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간첩임을 인식하면서 간첩행위를 원조하여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요구된다"며 "노피고인이 김낙중씨의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를 도왔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의 간첩임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조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원심에서 불고지 성립의 정황증거를 간첩방조죄로 잘못 해석했다고 판시하고, 불고지, 회합·편의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불고지 혐의는 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범죄사실에 대

해서는 당시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다른 것이다. 노씨는 지난 92년 김낙중씨가 설립한 평화통일연구회에서 일하면서 김씨에게 통일관련 논문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간첩행위를 도와 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3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93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당시 고법은 간첩죄와 간첩방조죄가 죄질형량이 같을 7년으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3년으로 경감할 수 없다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한편 노씨의 변호인은 14일 간첩방조죄가 무죄판결이 난 이상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하고 구속이 필요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 '고난' 세대에 신경하 목사 통일사업부 신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14일 오후 5시 기독교연합회관에서 평의회를 열고 신경하 목사(서울 우이감리교회)를 새대표로 선출하고 통일사업부를 신설했다. 또 총무에 김성은씨, 회원사업부에 박수미씨, 신설된 통일사업부에는 진광수 목사를 선임했다.

### 정신대 할머니 사망

관련단체 대통령 방일때 '진상규명·배상' 요구해야

1940년 일본 관동군에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던 전금화 할머니가 12일 인척의 2명 남짓한 단칸방에서 의롭게 숨진 것이 12일 오전 9시경 이웃사람에 의해 발견되었다(72세). 전 할머니는 천안에서 태어나 당시 경성부의 일동일관련 논문과 자료 등을 제공하여 간첩행위를 도와 준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93년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나 93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당시 고법은 간첩죄와 간첩방조죄가 죄질형량이 같을 7년으로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3년으로 경감할 수 없다며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한편 노씨의 변호인은 14일 간첩방조죄가 무죄판결이 난 이상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하고 구속이 필요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회」(공동대표 양순임 등)는 김영삼 대통령이 방일 때(3월 24일-26일) 태평양 전쟁 당시의 공탁금 환수 등을 비롯한 일본의 배상과 진상규명 등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65년의 한일 회담으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김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빈소 :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 영결일시 : 3월 18일(7일장) / 장지 : 천안 국립 망향동산

### 인권운동사랑방 제 10차 월례세미나 '제50차 유엔 인권위를 해부한다'

-제50차 인권위원회 분석과 전망

·강사 : 이대훈(KONUCH 집행위원) 장소영(인권운동사랑방)  
·일시 : 3월 24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유엔 인권위에 참석하고 온 이대훈씨와 국제인권봉사센터(IS)에서 인권위를 모니터링하는 인턴과정을 마친 장소영씨로부터 유엔의 인권관련기구와 인권위 소개, 제50차 인권위원회 내용분석 및 자기 회의 전망, 유엔활동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들었습니다.

##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들어 3명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따라 무리한 법적용 우려

컴퓨터동호회인 '현대철학 동호회'의 회장 김형렬씨, 임시회장 김영선씨 등을 잇달아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한데 대한 PC통신 동호인단체간의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현철동' 운영위원 진상호씨(26, 건국대 기계공학4)가 13일 저녁 이대전철역 입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진씨와 같이 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7-8명이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연행했다. 진씨가 동행을 거부하자 경찰은 진씨를 에워싸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신촌파출소로 간다며 연행했다. 그러나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등 15명이 신촌파출소에 알아본 결과 신촌파출소에서는 진씨를 연행한 사실이 없고,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경찰의 강제연행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 강화 등을 천명한 이후 연행된 것이고, 컴퓨터통신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과정에서 진씨 연행등에서와 같이 무리한 강제연행 등의 가능성이 커져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 '정치범 석방' 단식농성 재일단체 대통령 방일때 3.21-24 오사카

일본의 「순유형씨를 지원 하는 모임」 등은 3월 24일 -26일에 김영삼 대통령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 7-8명이 소나타 승용차에 태워 연행했다. 진씨가 동행을 거부하자 경찰은 진씨를 에워싸고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신촌파출소로 간다며 연행했다. 그러나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등 15명이 신촌파출소에 알아본 결과 신촌파출소에서는 진씨를 연행한 사실이 없고,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경찰의 강제연행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에서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 강화 등을 천명한 이후 연행된 것이고, 컴퓨터통신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

전화 : 81-6-715-2651  
팩스 : 81-6-715-2652

### ◆ 민가협 제9차 정기총회 ◆

·일시 : 3월 16일(수) 2시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불통이었던 민가협 전화가 복구(이전과 번호 동일)

### ◆ 공 판 안 내 ◆

□3월 16일(수)  
·10시, 최문실, 국보법, 318호, 1회  
·2시, 노태훈, 국보법, 319호, 2심  
·2시, 장운, 국보법, 311호, 1회  
·2시, 이용철, 국보법, 311호, 1회  
·3시, 박성수, 업무상횡령, 424호, 4회  
□3월 18일(금)  
·2시, 안훈찬의 1인, 국보법, 311호, 1회  
·2시, 배진성, 업무방해, 317호, 7회

일간지 기사색인은 내일 계속

## 주요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3월 13일)

편집자주 <> 안은 주제어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C.3.9-2): 조선일보 3월 9일자 2면

### 인권일반/법/제도/법조

- <앰네스티 한국보고서> "김정권 1년 인권개선 안돼"(C.3.9-2)(D.3.9-2)(HA.3.9-1)(J.3.9-2)(M.3.9-2)(H.3.10-2) / 요지(D.3.10-7)/정부 "시각 편향" 항의(C.3.11-2)
- 컬럼: 좀더 세심한 「법」을 위하여-송진혁(J.3.1-5)
- 글발: 법을 어겨야 살 수 있는 나라-김동자(M.3.2-4)
- 시평: 이젠 「통치권」 시대 아니다-안경환(J.3.3-5)
- 사설: 국제화에 가린 민주화(H.3.11-3)
- 논단: 형평의 제고를 위하여-정운찬(H.3.10-5)
- 한국의 학맥, 법학 7-제3세대; 학문 주체성 자각 "제목소리"(M.3.9-14)
- <국제무역분쟁 전문재판부 신설>(D.3.2-30)/(HA.3.2-18)/(H.3.2-30)/(C.3.2-30)
- 나의 의견: "판사 지방고정배치 바람직"-김병현(D.3.2-19)
- 법조계도 신용카드 결제시대(M.3.10-23)
- 잠깐: 창립10주년 아태법협 이병호(D.3.6-24)
- <재산변동신고>(HA.2.28-2)/(H.2.28-2)/법관·검찰·경찰 재산내역(H.3.1-7)

### 국가보안법

- <미 국무부 부차관보> "보안법 폐지 희망"(M.3.2-1)(J.3.2-2)(HA.3.3-1)(H.3.3-2)(D.3.3-2)(C.3.2-3)
- 사설: "보안법 폐지 희망, 진의는"(H.3.3-3)
- 사설: 미국과 국가보안법(C.3.3-3)
- 미 "보안법 폐지" 요청 발인 파문(J.3.3-5)
- "보안법 폐기" 미 공식입장(D.3.4-2)(J.3.4-2)
- 사설: 미국의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HA.3.4-3)
- "보안법" 문민정부 큰집(HA.3.4-4)
- 대검 공안부, 국내파장 대책 긴급논의(HA.3.4-16)
- 여야, 보안법 개폐작업 착수(HA.3.5-1)
- <정부 입장> "보안법 폐지 불가"(H.3.5-27)(J.3.5-1)(HA.3.5-2)(C.3.5-2)
- 크리스토퍼 미 국무, "보안법 폐지 공식입장" 재확인(HA.3.5-2)
- 한외무, 레이니대사에 항의(H.3.5-2)(C.3.5-2)
- 기자의 눈: 우정어린 과잉충고(H.3.5-2)
- 민자 정책위의장, "내정간섭"등 강경비난(C.3.5-4)
- <유엔 인권위>보안법 거론(HA.3.6-2)(J.3.7-2)(M.3.9-2)/거론 의미(HA.3.6-4)
- 미 국무부 대변인, "보안법 남용가능성"(HA.3.6-2)
- 국보법 "국회논의" 이후의 전망(D.3.6-5)
- 청와대 입장 "보안법은 필요"(D.3.8-4)(H.3.8-4)
- 사설: 세계의 눈이 쏠린 국가보안법(HA.3.9-3)
- 글발: 보안법과 자신감-이경일(M.3.10-4)
- 대통령, "보안법 필요"(D.3.11-2)(C.3.11-1)(HA.3.11-1)
- 개혁대상 0순위 국가보안법(HA.3.11-3)
- <여야영수회담> "보안법 개폐 불가"(D.3.12-1)/대화록(D.3.12-4)(HA.3.12-4)(H.3.12-5)(C.3.12-31)
- 북한, 한국 보안법 철폐 유엔 선전공세(D.3.13-2)
- 사설: 김 대통령의 '보안법' 개정 불가론(HA.3.13-3)



#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각지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행사 열려 "여성인권 보호, 생리휴가 무급화 반대"

올해로 86주년을 맞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  
하여 인천·광주·부산등 각  
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  
렸다.

각 지역에서 열린 3.8 세  
계여성의 날 기념대회 및  
문화행사에서는 여성인권  
보호, 생리휴가 무급화 반  
대와 수입개방 반대에 대  
해 지역 여성단체들의 목  
소리가 높았다.

지난 6일 인천에서 인천  
여성노동자회 등 지역 여  
성단체 주최로 열린 '94  
여성대회'는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노래발  
표와 연극 '절망의 끝' 그  
리고 대동놀이 순서로 이  
어졌다.

8일에는 광주·전남 여성  
문제특별위원회 주최로  
'94 광주 전남 여성대회'  
가 1부 '생리휴가폐지반대  
와 쌀수입개방반대' 결의

대회, 2부 문화공연 순으  
로 치뤄졌다.

같은 날 마산·창원에서  
도 '86주년 기념대회 및 제6  
회 여성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가톨릭여성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  
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극 '내일을 여는 여성',  
노래극 '노래로 본 여성의  
삶' 등이 진행됐다.

13일 부산에서도 여성의  
날 기념식과 함께 '제5회  
여성노래마당'이 부산대 효  
원회관에서 펼쳐졌다. 2부  
문화행사에는 4백여명이  
참석한 속에 생리휴가 무  
급화 반대와 모성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노래극, 쌀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를 알리는 연극 '숫대를  
세우자' 등이 선보였다.

한편 여성단체연합 주관  
으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0회 한국여성대

회'가 오는 27일 정오(본  
행사 2시)에 동국대 중앙  
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 '여성간부교육' 실시 여성민우회 3월16-23일

'지도력향상을 위한 여성  
간부교육'이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한국여성민우  
회'(상임대표 이경숙) 주  
최로 열린다. 노동조합 및  
여직원회의 여성간부를 주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은  
여성지도자들의 자기표현  
훈련, 간부의 가치관, 여성  
간부의 지도력 함양을 위  
해 마련되었다. 특히 19일  
부터 20일까지 1박 2일동  
안에는 '논리적 사고발전  
과 자기표현법'이라는 주  
제로 워크숍을 가진다. 워  
크숍은 주제토론, 사례발  
표, 공동체놀이 등으로 꾸

며진다.

교육과정은 3월 16일 '멋  
있는 여성간부론'(최영희),  
19일-20일 워크숍, 23일  
'교육조직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윤정숙)로 구성된  
다.

88년 처음 실시한 이래  
10년째를 맞는 여성간부교  
육은 모성보호, 여성고용  
문제 등의 구체적 문제를  
다뤄 왔으나, 올해부터는  
여성간부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지도력 향상에 초  
점을 두기로 하였다. 과거  
에 하던 구체적인 문제는  
시의성에 맞는 주제를 골  
라 특강형식으로 보충할  
예정이다.

### 두밀리분교 폐쇄, 학생들 마을회관에서 공부

두밀리분교 문제가 3월 2일  
개학한 이래 보름이 지나  
고 있으나, 주무관서인 가  
평군 교육청에서도 별관심  
을 보이지 않는 등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5명의 두밀리분교 학생들  
은 현재 마을회관에서 엄  
마 선생님께서 배우고  
있다.

### 양심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

16일(오늘) 오후 2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여러분의 따뜻한 발걸음으로  
총회를 빛내 주십시오.

인권운동사랑방 제10차 월례세미나

## '제50차 유엔 인권위를 해부한다'

제50차 인권위원회 분석과 51차 전망

- 강사 : 이대훈(KONUCH 집행위원)  
장소영(인권운동사랑방)
- 일시 : 3월 24일(목) 오후 7시
-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좌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 이영빈 목사 귀국추진 "고난"등 '통일운동 재평가, 명예회복'

79년 서독에서 「조국통일  
해외기독교회」(이하 기통  
회)를 조직하여 북한을 방  
문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  
회'등과 회담하는 등 일찍  
부터 통일운동을 해온 이  
영빈 목사(68)의 통일운동  
의 역정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신경하)  
등 감리교계 중심으로 지  
난 해 10월 조직된 '이영  
빈 목사, 김순환 선생 귀  
국추진위'(대표 김지길, 이  
하 귀국추진위)는 과거 독  
재정권 시절에 '친북한 인  
사'로 낙인이 찍힌 명예를  
회복하고, 감리교단 내부  
의 통일운동의 전기를 만  
들기 위해 이 목사의 귀국  
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귀  
국추진위」는 회견에서 "이  
목사가 「기통회」 등을 조  
직하여 북한을 방문하고  
81년부터 6차례에 걸쳐 해  
외기독교자와 북한과의 모임  
을 주선하여 정부의 기피  
인물이 되어 온 것은 사  
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냉전체제 이후 남북  
간의 화해는 회피할 수 없  
는 민족의 과제"로 되었고  
이 목사를 비롯한 해외의  
통일운동이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귀국추진 이  
유를 밝혔다.

「귀국추진위」는 또 "이  
목사가 91년 회년운동 행  
사에 참가하려 왔다가 김  
포공항에서 강제출국 당한  
적도 있었지만 통일과 화  
해가 대세인 지금 더 이상  
귀국이 허용되지 않을 이  
유가 없다"며 "귀국이 실  
패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귀국추진위」는 4월  
초에 이 목사의 논문 등을  
실은 <통일의 깊은 샘-이  
영빈, 김순환>을 발행하여  
이 목사를 국내에 소개할  
예정이다. 전화 393-4662

##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이 노사관계 안정의 지름길 15일 전해주 시위

「전국구속·수배·해고노  
동자 원상회복투쟁위」(위  
원장 조준호) 소속 해고노  
동자 40여명은 15일 서울지  
방노동청 앞에서 해고노동  
자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시  
위를 벌였다.

「전해주」 윤명선 총무국  
장 등 해고노동자 대표 3명  
은 이날 방곡원 서울지방노  
동청장과 면담을 갖고 "임  
금인상 협상철을 맞아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 없이는  
노사관계의 안정이 불가능  
하다"며 해고노동자의 즉각  
전원복직을 촉구했다.

### ◆ 알 림 ◆

- 정대협 제110차 수요시위  
·일시 : 3월 16일(수) 12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주관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94년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  
·일시 : 3월 17일(목) 오전 10시  
·장소 : 여성평화의 집 2층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전화 279-6891)

### ◆ 바로잡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2호(3월 15일자)의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제일 인권단체 단식농성 예정일은 3월  
19일-21일까지입니다.

## 주요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8일-3월 13일)

편집자주: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C.3.9-2):조선일보 3월 9일자 2면

- 공안·수사기구/고문·가혹수사/피의자/수인
- 대검 93년 범죄백서, 행정법규가 "전과자" (J.3.1-23)
- 검찰이 유해인상 공매처분 (J.3.10-23)
- 검찰, 컴퓨터통신 '이적표현' 단속강화 (HA.3.13-14)
- 기무사 기물누출 수사, 민간인 통화조사 말썽 (C.3.5-29)
- "군사문화 썰기" 나선 경찰 (J.2.28-23)
- 분수대;경찰과 복장 (J.3.1-1)
- 도둑 못지킨 경찰 수사도 "계절음" (J.3.1-22)
- 사진;시위진압훈련 다시 (J.3.3-22)
- 취재일기;만만하게 말단 경찰인가 (J.3.8-22)
- 경찰 비리 정밀사정, 김화남 청장 지시 (HA.3.9-18)
- 범죄신고 목살 댄 엄벌, 김 경찰청장 (H.3.9-30)
- 경찰대 졸업식, 청와대 일정따라 "택일" (D.3.9-31)
- 표주박;사시·행시출신 경찰총경 "조직에 환멸" 사표 (H.3.12-26)
- '경찰과 시민사회' 연재;11-일본은 「하이테크경찰」시대 (J.3.1-1)/12-국제조직 범죄 각국 비상 (J.3.2-1)/13-영·일 예비경찰들 강훈 2년 (J.3.3-1)/14-"민에 더 가까이" 홍보 다양 (J.3.7-1)/15-메추 하루씩 "나도 콜롬보" (J.3.9-1)/16-총리차에도 불법주차 딱지 (J.2.12-1)
- '돈에 눈먼 경관들...' 어음업자 협박 2억5천원 뜯어내 (D.3.4-31)/현직경관 20억 사취 (H.3.8-30) (J.3.8-2) (H.3.8-30)/사기범 협박 갈취 (D.3.13-27) (H.3.13-22)
- 주사위;강도사건 없던 일, 경찰 돈주며 은폐 (J.3.8-23)
- 파출소직원 부고장 판내업소 둘러 (D.3.10-30)/기자의 눈;「윗물」 담은 경찰관 부의금 (D.3.12-2)
- 법원 구치감 화장실없어 (J.3.9-23)/취재일기;인권 외면하는 「법원 구치감」 (J.3.10-5)/사설;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 (J.3.11-3)
- '영장없이 보호실 유치 위법' 대법원 판결 (M.3.12-19) (J.3.12-23) (HA.3.13-15) (H.3.13-23) (C.3.13-18) (D.3.13-27)
- 경찰서안 피의자 음독자살 (M.3.8-18)
- 독자;불법연행등 여전 (C.3.9-13)
- 독자;수감자 접견횟수제한 폐지를 (HA.3.11-14)
- 김순경 살인누명사건 진범 10년선고 (D.3.11-29)

- 국보·집시법사건/양심수/잠기수
- 간첩혐의 김삼석씨 7년 선고 (HA.3.1-19)
- 보안법 위반 구속 PC통신회원 석방 (HA.3.6-10)
- KBS 「다큐멘터리극장」, 최능진 다른 내용 보안법 고발 (HA.3.6-10)
- 독자;농민회원 두명 억울한 구속 (HA.3.8-14)
- 보안법 마구잡이 구속 여전 (HA.3.9-1)
- 사노맹재건기도 20대 3명 영장 (D.3.9-31)
- 독자;극단 「희망세」 구속 표현의 자유 침해 (HA.3.10-14)
- 독자;서경원 전의원 부인이 수감남편에 보내는 편지 (HA.3.12-10)
- 더불어 생각하며;「양심수 전원석방」 국회가 나서라-권오현 (HA.3.13-10)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사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재해석 필요

###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 “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지난해 7월 15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그해 10월 2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노태훈(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변호사는 변론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일 수 없으며, 노태훈 피고인 역시 소지한 것이 이적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현재 북한자료센터에서 누구나 북한에서 나온 자료 등을 볼 수 있으며 MBC, KBS에서 북한관련 방송 또한 누구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덜한 노태훈씨

가 가지고 있던 자료가 유죄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모순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와함께 한달 이상 과천 현대국립미술관에서 열린 '민중미술15년전'에서도 이미 국보법으로 처벌된 작품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버젓이 전시된 것은 모순이 아니냐고 그는 반문했다.

조 변호사는 “얼마전 미국측의 국보법 폐지 발언은 그것이 내정간섭이 아니냐는 것을 떠나 국제적으로 국보법 폐지여론이 높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노태훈(인권운동사랑방 기초실장, 유엔세계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간사)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냉전이 무너진 이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변화된 시점에서 과

거 국보법을 존속시켜 왔던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사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씨는 얼마전 열린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국보법이 문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 민가협 9차 정기총회

####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 다짐

상임의장에 서경순, 감사에 최재호·권치홍씨 선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제9차 정기총회가 16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오현(양심수후원회 회장)씨 사회로 진행된 1부는 △ 93년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 △ 감사보고 △ 규약검토 및 승인 △ 94년 사업계획안 승인 △ 감사선출 △ 상임의장, 공동의장 및 총무 인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감사에는 최재호(최영철씨 아버지), 권치홍(권영목씨 아버지)씨가 선출되었다. 또한 상임의장에 서경순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장, 공동의장에는 서경순씨의 윤혜경 장기수가족협의회장, 권오현, 박용길 청년민주인가족협의회장 등 4명이 인준을 받았다.

노씨는 “가입국인 이상 국제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내법과 동일하게 국제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며 국제인권규약을 판단근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노씨는 대법원에 서도 무죄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는 등 인권운동가로서 국보법의 부당성을 알리나가는 일을 계속 벌이겠다고 말했다.

선거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19호 법정이다.

민가협은 총회결의문에서 “문민정부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감옥에는 3백여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고,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는 44년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오히려 “김영삼정부는 1년동안 2백22명의 양심수를 구속시켰다”고 말했다. 앞으로 민가협은 3백여명의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보법의 완전철폐, 장기수 석방, 조각간첩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장기수 선생님과 이창복 전 국연합 상임의장, 윤성식 4월혁명연구소장, 임현영 민족작가협의회 통일문학위원회 위원장, 안재구(남민전 관련자), 장민조 유가협회장, 이철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 우리나라 최초로 '성희롱' 책 나와

성희롱 당사자 번역 「성희롱공대위」도 자료집 발간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성희롱을 주제로 한 책 2권이 발간된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침묵에서 외침으로>라는 제목으로 자료집을 펴내며, 성희롱사건의 당사자인 우희정씨는 성희롱 관한 외국서적(Sexual Harassment)을 번역하여 「여성사」에서 출판된다(책 제목은 미정).

「성희롱 사건 공대위」 자료집은 우씨가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요약, 담당변호인인 이종걸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와 법률적 검토'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 또 외국의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과 판례 소개,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등이 실려 있다.

처음으로 성희롱 행위를 법정에 세우고 여론화시킨 당사자인 우씨가 번역한 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을 중심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성희롱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 조교는 16일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신 아무개 교수한테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많아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감에서 공개화시켰다”면서, 자신이 “성희롱을 공개화한 것이 처음인지는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우씨는 또 “성희롱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전무하여 담당재판부의 성희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서적을 번역했다”며 출판동기를 밝혔다.

#### 정치적 살해 반대 캠페인 AI 한국지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6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사망한 전금화 할머니를 추모하는 수요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졌다. 시위에서는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등을 시 낭송하고, 전 할머니가 살아온 역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정신대 문제는 민족구원원 모두의 젖은 상처”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다”며,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또 「한국지부」 서울대 예비그룹은 15일 서울대에서 「세계인권선언」 만화비디오를 상영과 콜롬비아의 인권침해 사례 설명회를 가졌다.

우희정씨는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인 우희정씨는 성희롱 관한 외국서적(Sexual Harassment)을 번역하여 「여성사」에서 출판된다(책 제목은 미정).

「성희롱 사건 공대위」 자료집은 우씨가 서울민사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청구 소장 요약, 담당변호인인 이종걸 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의의와 법률적 검토'에서 「성희롱」에 대한 법률적 접근을 시도, 또 외국의 성희롱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과 판례 소개, 여성민우회에서 실시한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등이 실려 있다.

처음으로 성희롱 행위를 법정에 세우고 여론화시킨 당사자인 우씨가 번역한 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희롱을 중심으로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성희롱의 개념을 설명하고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하여 '성희롱'을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 조교는 16일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신 아무개 교수한테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많아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의무감에서 공개화시켰다”면서, 자신이 “성희롱을 공개화한 것이 처음인지는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우씨는 또 “성희롱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 전무하여 담당재판부의 성희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서적을 번역했다”며 출판동기를 밝혔다.

#### 전쟁범죄 시인, 법적책임 정대협 수요시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6일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관으로 지난 12일 사망한 전금화 할머니를 추모하는 수요시위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가졌다. 시위에서는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등을 시 낭송하고, 전 할머니가 살아온 역사가 소개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정신대 문제는 민족구원원 모두의 젖은 상처”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다”며,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정신대 문제는 민족구원원 모두의 젖은 상처”로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관한 처벌은 공소시효와 관계없다”며, 일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였다.

## 국제 인권 소식

### 「검열반대국제센터」, 선거시기 언론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의사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적인 인권단체, 「검열반대 국제센터」(런던 소재)에서는 선거시기 언론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Election Campaign Broadcasts in Transitional Democracy: Problem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Proposed Guidelines)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40여개국 이상에서 진행된 선거와 언론의 활동을 검토하면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의사표현의 자유, 알 권리,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검열반대 국제센터(소장 프란세스 드루저)는 세계인권선언 19조 단체로도 알려져 있는 저명한 인권단체이다.

### 세계인권단체 총람 발간 캐나다 Human Rights Internet

캐나다에 위치한 전문인권자료센터인 Human Rights Internet에서는 전세계 4천 5백여개 인권단체를 망라한 인권단체 총람 Masterlist를 펴냈다.

이 총람에는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주소, 나라별 주제별 알파벳순 색인, 약칭 색인, 원어 단체명 편람이 수록되어 있다. Internet은 현재 세계인권단체연락기구의 연락사무소 역할도 맡고 있다. 총람은 A4 크기 총 280쪽, 가격 US\$35.

### 알림

◇「앤네스티의 한국에 관한 특별보고서」, 완역 ·「신정부하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본문 27쪽 ·앤네스티 한국지부(연락처 : 053-426-2533)

◇박영진 열사 추모제 ·일시 : 3월 17일(목) 오후 7시/장소 : 산돌문화원/연락처 : 764-1684(유가협)

◇월간 「함께 걸음」 3월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인터뷰/근절되지 않은 격리수용/우리모두가 져야 할 십자가-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초기의 특수교육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평가/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과 국가조정위원회 설치의 의미/교육부, 장애우 대학 특별입학 발표, 그 허와 실

◇후원회 소식-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주요내용 : 김남주님을 그리워하며-우리들의 연인, 우리 모두의 아들/출소장기수-민중당체원 이세균님/양심수 가족을 찾아서-오랜 상처 아무는 그날

◇민가협 제9차 총회보고서(총92쪽)-민가협 ·주요내용 : 93년 활동보고 및 94년 사업계획/양심수 명단/전국 구치소·교도소 주소/전국 민가협 주소등

◇한울노동법 강좌 2호-단체협약 유효기간의 효력연장 ·주요내용 : 주요판례 모음/노동법 교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판례해설/노동법 5문5답

### '94년 올해의 여성운동상 수상자 발표 기자회견

17일(오늘) 오전 10시 여성평화의 집(정충동) 2층

역대 여성운동상 수상자:

- 87년 : 권익숙
- 88년 : 맥스텍노동조합
- 89년 : 피코노조, 강정순
- 90년 : 수상자 없음
- 91년 : 임수경
- 92년 : 박영숙, 김학순
- 93년 : 황금주

<인권하루소식>의 구독료는 월 1만에서 3만원입니다. 구독번호: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여연」 94년 여성운동상에 홍미영씨 선정

인천북구 의회 의원 홍씨 “같이 한 사람들이 함께 받는 상”

「한국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이미경, 이하 여연)은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의원인 홍미영씨(38)를 94년 여성운동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여연」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홍씨가 인천시 반석동과 십정동 등 산동네에서 빈민여성운동을 13년간 해오면서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점과 91년 이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의정할

등에 반영하는 등 모범적인 활동을 펴온 점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홍씨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성운동상은 개인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 그동안 같이 애쓴 주민, 실무자와 함께 받는 상으로 알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95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여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배려에서 상을 준 것 같다”며 겸손해했다.

홍씨는 인천의 반석동에서 83년 ‘큰물공부방’을 만든 이후 수도권지역 70여개의 ‘공부방’의 모범을 만들었고, 음란·퇴폐문화 등을 개선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안을 해결하며 주민들의 조직화를 꾀해왔다. 89년에는 ‘인천지역 주민회’를 창립하여 빈민지역에서 탁아사업과 공부방, 도서대여실 등을 운영해왔고, ‘인천여성의 전

화, 창립에도 참여했다.

94년 여성운동상 시상식이 오는 27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3.8 여성의 날 기념 제10차 여성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역대 여성운동상 수상자 87년: 권인숙(부천시 성교문 폭로)

88년: 맥스텍 노조(위장폐업 철폐)

89년: 피코 노조(외국자본철수반대), 강정순(경찰관 강간 폭로)

90년: 수상자 없음

91년: 임수경(통일의 꽃)

92년: 박영숙(여성 국회의원으로 법제정 활동에 기여), 김학순(정신대 문제 최초로 폭로)

93년: 황금순(노조에서 여성문제 해결에 힘씀)

### 인터뷰: 94년 여성운동상 수상자 홍미영씨

\*94년 여성운동상을 받은 소감은?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온 선배 운동가들이 많은데 죄송하다. 이상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생한 실무자들, 지역에서 도와준 분들과 함께 받는 것으로 알겠다.

\*홍미영씨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매년 선정되는 「여연」의 여성운동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내가 선정되리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 95년 지방자치제 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여성의 정치참여에 용기를 주기 위해 나를 선정한 것 같다.

\*13년 동안 인천 지역에서 활동을 해오시면서 힘들었을 텐데요.  
-인천지역에서는 그동안 노동운동 말고는 여성운동은 거의 없었다. 주민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나하나 주위의 일들을 해결하는데 처음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을 오랫동안 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처음에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단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나도 느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혼자만의 불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느끼고 나섰을 뿐이다. 예를 들어 빈민촌에서 전화하러 가는데 20분을 걸어나가야 하는데, 아파트 지역은 수입이 많다는 이유로 눈에 띄게 많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누구하나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학과에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작용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지방의회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이 평소 주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처음에는 이들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생각에서 출마했다. 지역주민의 대표를 선거에 내보내기로 했는데 후보자로 내가 뽑힌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생활의 많은 부분이 행정과 연결되어 있어 행정기구를 잘 활용하면 상당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부가 임명하는 등의 반쪽짜리 지방자치체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언론 등에서 막 출발한 지방자치체의 맹점과 개선방향을 잘 인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자신들과 관계있는 지방의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 활동이 소외된 사람, 여성, 아동의 목소리가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와 지역운동이 지방자치체의 핵심으로 잘 연결되지 않고, 의정활동에 주민들의 관심이 적다. 또 예전에 비해서 빈민운동 등 지역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안타깝다.

\*살아오면서 가장 기뻐했던 일은?  
-지방의회 선거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호응해 준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한 때였다.

##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지킨다”

서울·부산등 6개지역 당직변호사제 실시중

수사단계에서 겪는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당직변호사제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미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수원 등 5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오는 21일에는 인천지역에서 문을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 박상진씨는 “우리나라는 수사초기단계에서 국선변호사 인선제도가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듯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언이나 조서작성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당직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수는 3백50여명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천7백50여명중 20% 정도이다. 당직변호사실을 통해 들어오는 하루 접수건수는 적게는 5-6건에서 많으면 8-9건에 이른다. 지난해 5월 시작단계에는 3명의 당직변호사가 근무하던 것을 사전증거에 따라 4명으로 배치했다고 한다. 93년 5월 1일부터 94년 3월 16일까지 접수된 수는 1천26건이다. 이중 변호사 선임률은 1백68건(2월말 현재)으로 전체 접수건수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접견은 무료이며 선임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비용이 든다.

아직 초기단계로 홍보가 필요하며, 작년 10월 이후로 점차 이용자가 늘어가고 있어 당직변호사제도가 올해 안에는 정착될 것이라고 박씨는 내다보았다(아래 표 참조).

또 당직변호사제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자신의 일이 바쁘지만 돈이 없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

에게 도움을 주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전화나 팩스로 직접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밖의 시간에는 녹음을 해 다음날 처리하고 있다. 이미 경찰서나 구치소 등에 당직변호사제도에 대한 공문이나 선전스티카 등을 보내 홍보가 되어 있고, 경찰측에서도 변호사들에게 우호적이라고 박씨는 전했다.

93년 10월 11일 업무에 들어간 부산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실 역시 김철기변호사의 62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단 토요일은 오후 4시) 2명씩 맡아한다. 3월 15일 현재 총 2백55건으로 93년 1백47건(민사 91, 형사 43, 행정 2, 가사·호적 11), 94년 1백88건(민사 66, 형사 31, 행정 3, 가사·호적 8)이 접수되었다. 이중 변호사로 선임된 경우는 없으며, 대체로 피의자들이 인권침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상담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전수영씨는 말했다.

대전지역은 지난해 4월 시작해 하루 1명의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일을 하고 있다. 접견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광주지역도 같은해 11월 당직변호사제를 시행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 78명의 변호사 중 50% 이상인 43명이 참여해 순번제로 하루씩 근무하고 있으며, 3월 17일 현재 접수건수는 31건이고 이중 변호사 선임으로 연결된 것은 5건이다.

### 각지역 당직변호사 현황실

- 서울 - 전화 : 597-1919  
전송 : 597-2929
- 부산 - 전화 : 051-244-3735/6  
전송 : 051-241-3766
- 수원 - 전화 : 0331-211-8132  
전송 : 0331-213-3139
- 인천 - 전화 : 032-439-9671  
전송 : 032-434-6245
- 대전 - 전화 : 042-256-0452
- 광주 - 전화 : 062-222-0420  
전송 : 062-222-0280

월	건수	월	건수
93.5월	177(44)	93.10월	49(6)
6월	132(27)	11월	69(10)
7월	82(18)	12월	101(12)
8월	72(14)	94.1월	104(15)
9월	54(7)	2월	114(13)
총접수건수 : 954건, 선임건수 : 166건			

##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21일 '이순심 석방 방청인단' 결성

‘이순심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이하 이순심 방청인단)이 「한국여성의 전화」, 「인천여성의 전화」,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수원 YWCA」등 12개 단체와 이순심씨의 이웃사람들이 참여하여 21일 결성식을 가졌다.

‘이순심 방청인단’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감시하여 사법부가 ‘아내구타의 현실’을 알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여성의 전화」 남충지 간사는 “시민들이 직접 방청단에 참가하여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느끼고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에 따르면 아내구타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으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이순심씨 사건외에 91년 남희순씨, 92년 이형자씨 사건등 92년 한해에 신문 보도된 것만 해도 18건에 이른다.

‘이순심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식은 21일 오후 1시 ‘수원가정법률상담소’(전화 0331-48-4999)에서 열린다.

이순심씨(40)는 지난 1월 16일 20여년 동안 상습적으로 자신을 구타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지난 1월 31일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첫 공판은 3월 22일(화) 10시에 수원지방법원 210호에서 열린다.

###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제27차 민가협 목요일집회

매주 목요일 2시에 열리는 민가협 목요일집회가 이번주에는 ‘국가보안법 최대피해자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라는 주제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에서는 북에서 내려온 후 즉시 자수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30년후인 83년 연행되어 45일간 이근안의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된 무기수 함주명씨, 1981년 7명의 가족이 연행되어 40여일간 고문으로 조작된 진도가족 간첩사건의 무기수 박동운씨 등의 가족이 나왔다.

### 알림

- 정신대 피해자 전금화 할머니 영결식
- 일시 : 3월 18일 오후 1시
- 장소 : 용산역광장
- 장지 : 천안 국립망향동산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정부책임 회피

### 18일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소장 박영숙, 이하 정책연구소) 주최로 18일 마포 '정책연구소'에서 열린 '김영삼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평가토론회'에서 과거보다 사회복지정책이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홍식 교수(서울대)는 "사회복지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신경계체계에 포함되어 있다"며 "국가가 기본적인 복지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본에 떠넘김으로써 복지에서도 빈익빈부익부의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연명교수(장지대)는 사회복지를 민간에 떠넘기려는 시도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재정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국방비의 감축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열 실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채택한 몇가지 미흡한 방안조차도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이유로 대부분 97년 이후로 미뤄고 실현가능성이 의심되지, 탁상행정적 대표적 예로 지적하철이용 가능성이 별로 없는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을 들었다.

노인문제연구소의 박재간씨는 계층간·지역간의 소득재분배 문제만이 아니라 노인들을 고려한 세대간 소득재분배 문제에도 관심

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지은희씨(한국여성단체연합)는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5인 이하 사업체근무나 시간제노동을 하고 있어 대표적 복지제도인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모성보호와 여성 노동보장을 위한 대책을 촉구

### 해고자, 출근투쟁·텐트농성 확산 전해투, "임금협상 전 복직해결 전력"

18일로 2백9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이하 전해투)가 임금협상 전에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한다는 각오 아래 지난 7일부터 전국적으로 출근투쟁과 텐트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전해투는 15,16일 노동청 항의방문을 전국 8개 지역에서 가졌다.

18일 현재 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효성중공업 등 전국 30개 사업장에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인천·대구등 5개지역에서 텐트농성에 들어갔다. 17일 인천 영창악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 10명이 구사대 30명과 충돌해 노동자 2명과 회사측 경비1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17일 의료보험조합 앞에서 20명이, 광주에서는 11일부터 대우캐리어 앞에서 텐트농성중이다. 또한 대구에서는 2월22일 대동공업, 3월 9일 동원금속이

했다. 전반적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신경계에 떠밀려 '선언'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와 복지시설 유료화 추진등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텐트농성을 하고 있다. 마산·창원에서 20일 새실산업이 텐트농성에 합류했다. 이밖에도 울산 현대중합목재 전해투 소속 노동자들은 80여일의 텐트농성을 벌인뒤 현재 회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안경호(29) 대외협력부장은 "해고노동자 복직문제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노협·업종회 외와의 지도자 간담회에서 전해투 복직문제를 임무전에 최우선 해결과제로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해투는 4월 16일전까지 전국순회투쟁에 들어가 4월16일에는 전국해고노동자대회를 열고 5월1일 메이데이까지 결사항전의 자세로 전원복직을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 재일한국정치범 석방을 위한 단식투쟁

'김영삼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손유형씨등 재일한국정치범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3일간 단식투쟁'을 오사카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에서 벌이고 있다. 많은 지지·격려바랍니다. (전송:81-6715-2652)

### 정신대 고 전금화씨 장례식

정신대로 끌려가 한평생을 회한 속에 살다간 고 전금화(71) 할머니의 영결식이 18일 오후1시 용산역광장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대표 김종대·양순임) 주최로 치뤄졌다.

영결식에서 유족대표로 참석한 유정현(딸)씨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1백50여명의 호객 속에 진행된 영결식에서 양순임 장례집행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김영삼대통령은 호소카와 수상과 양국회담때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 제반문제 해결의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을 주장했다. 장례식후 지내려던 닭골공원에서의 노제는 장소 허가 취소로 열리지 못했다.

### 일빛출판사 이성우사장 연행 3년전 발행한 책 문제삼아

일빛출판사 이성우 사장과 김병학 영업부장이 18일 오전 10시경 사무실에서 장안동 보안분실로 연행되었다.

보안분실 수사관들은 일빛출판사가 3년전에 발행한 '사회주의자 실천 1,2' '노동자의 정치학' 등이 이적표현물이라며 사무실과 집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관련 서적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갔다.

## 단체탐방 14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해 뜨게 돈을 쓰고 아니, 의지와 무관하게 주머니의 돈을 뺏기고 들어온 것 같은 날 밤이면 손계산을 안해볼 수 없다. 다음달 수입이 생길 때까지 하루 몇개의 토크와 얼마짜리 점심으로 하루를 때워야 하는가 하는 계산이 나오면 한숨이 안나올 수 없다. 그러나 다음 달의 기약이 없을 때의 상황은 어떠한 것일까? 학교준비물을 챙긴다고 손벌린 아이의 얼굴만, 웬지 시름시름해 보이는 부모의 얼굴만 비구름처럼 까맣게 보이면 나는 어디로 숨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나는 해가 뜨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밀물처럼 쏟아져 나와 자신의 생산의 현장으로, 땀흘릴 곳으로, 동료와 어울릴곳으로 전차바퀴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거리에서 그 뒷자락의 먼지속에 숨어야만 하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한 개인의 신세한탄일 수가 없다. 자본주의라는 구조속에서 해고와 고용불안은 노동자의 영원한 고통이고 항상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구조와 맞물려 자신이 소중히 가꾸어 직장과 조직에서 부당하게 쫓겨나 삶의 터전을 잃어야만 하는 결과를 항상 낳는다. 실제로, 5-6공하에서 전국적으로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5,200여명이 해고되었고 93년에도 그 숫자는 3,600여명에 이른다. 이속에서 92년 결성된 해고자들의 조직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전해투의 이름하에 모인 해고노동자들은 단순한 해고자들이 아니며 이들은 해고당할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밀천(?)이 되는 삶의 현장을 제단에 올리고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해 왔던 조합간부 내지는 선진노동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것도 당장 개인의 해고문제 해결이라는데 머물기보다는 해고문제의 근본적 해결내지는 노동운동 탄압을 분쇄하여 노동운동을 강화·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해투의 문제는 당사자인 해고노동자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문제가 된다.

현재 전해투의 조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조준호, 기아자동차해고자), 집행위원장(강중철, 코리아카코마해고자), 총무국, 선전국, 대외협력국이 중앙에서 상근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 및 그룹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남부, 성남, 대전, 광주, 목포, 대구, 경주포항, 울산, 부산, 마산

창원지역과 기아그룹, 한진그룹등의 모임이 활발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들이 투쟁을 해온 상황은 가시밭길, 지옥길, 용암이 끓는 길 등 혼란 비유어를 갖다대어서는 설명될 수가 없다. 그것은 '생활의 불편' 정도를 넘어선 극한상황, 죽음과의 대면을 경험해온 과정이었다. 93년 김영삼 정권이 문민의 이름을 걸고 등장하면서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모든 해고자는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여 온국민의 박수를 받았고 특히나 해고노동자들은 직장으로 돌아갈 설레임속에 하루를 손꼽아가며 기다리는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희망으로 시작했던 93년은 길고도 고통스런 행진의 시작이 되었다. 1차 단식투쟁(4월 7일-23일), 2차 결사 삭발·단식투쟁 38일(9월 11일-10월 18일)에서 보여지듯이 단식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면서 전국의 사업장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외치고 항의하고 사람을 모으고 청와대·노동부·법무부·병무청·경제5단체·국회·민자당·민주당·국정감사장·각 지방노동사무소·그룹본사·단위사업장 동등 문턱이 닳느냐 신발뾰족이 닳느냐를 가릴 것 없는 행진이었다. 같이하던 동지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머리가 부서지고 팔이 부러지는 상황, 고향의 아버님이 자식의 복직을 끊은 상황, 직장해고가 가정에서의 해고, 이혼이나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등 한마디로 기막힌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을 찬찬히 하고 있는 한 해고노동자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힘들어도 항상 웃으려 합니다!", "원칙복적이 힘들다는 사실에 신경쓰기 보다는 노동해방에 대한 사상과 희망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큼니다. 그리고 그것이 버텨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원대책위를 꾸리고 도와 주신 분들의 노력도 큰 힘이 됐고요." 큰 벽면을 메운 상황판에는 텐트농성,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단위 사업장의 이름들이 빼곡히 차있고 전화는 실세없이 숨가쁜 현장을 옮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들은 일화를 소개해보면, 작

년 10월 국회로 행진하던 중에 20여 명이 영등포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보도로 평화행진을 하였으므로 연행될 이유가 없었다. 모두들 금식과 묵비로 버텼다. 세상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번엔 반대로 경찰서 밖으로 가서 내보내려고 경찰들이 난리였다. 경찰 5-6명이 노동자 1명마다에 매달려 들어내는데 경찰서 밖에 지원나온 농성자들은 거꾸로 경찰서 안으로 도로 들여보내려는 싸움이 벌어졌다.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치료비청구와 책임자의 형사입건을 걸고 재판이 계속중이다. 전해투의 절기고 절긴 힘을 보여주는 예이다. 열려진 문은 많지 않다. 그러나 열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한 그 문은 언제든지 열릴 것이다. 해고와 고용불안은 당장의 해당자에게 뿐만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함께 인식하는 속에서 함께 하는 싸움으로 전화되어야 한다는 바람속에 "어이, 힘들내세"라는 굼직한 붓글씨가 환하게 웃는 해고노동자의 머리위로 헤쳐넘겨져 떠오르고 있다.

양심선언 마지막 수배자 이우형씨 구속 90년 안기부·전투경찰 해체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한 이우형 이경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3월 17일 오후 3시경 강원도 강릉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서 체포되어 춘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17일 밤에 성남경찰서로 이첩되었고 18일 밤에 '근무지이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다.

이씨는 90년 8월 15일 부대를 떠난 후 같은해 10월 15일 양심선언을 한 후 양심선언 마지막 수배자로서 지금까지 수배생활을 했다.

열려진 문은 많지 않다. 그러나 열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한 그 문은 언제든지 열릴 것이다.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이순심씨 석방위한 방청인단 결성

### 21일 여성의 전화 등 17개단체 참여 이순심씨 구명운동

#### 가정폭력방지위한 입법운동도 펴기로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이하 이순심방청인단)이 21일 오후 1시 수원 가정법률상담소에서 150여 명이 모여 결성식을 가졌다. 최미정(부실행위위원장,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상담실장)씨 사회로 진행된 결성식은 경과보고, 사건개요 및 변론방향, 이순심씨의 살아온 이야기, 공동결의문 채택 순서로 이어졌다. 「이순심방청인단」은 결의문에서 “첫째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 지는가를 지켜 보며 둘째, 이순심씨 구명 활동 적극 전개하고 셋째,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이순심방청인단」은 23년동안 남편에게 무

자비한 구타를 당하면서도 파출부 일을 하며 세 명의 자녀를 교육시키고 생활을 책임져온 한 성실한 여인이 살인자로 탈바꿈된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매 맞는 아내들을 살린자로 만드는 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여성의 전화」, 「안양 경실련」, 「안양 내일신문 주부모임」, 「수원여성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이순심방청인단」은 이날 각 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단으로 구성하고, 실행위원장은 김경희씨(수원YWCA이사)를 선출하였다. 이순심씨 1차 재판은 2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

원 210호에서 열린다.

## 대구지역 여성단체 첫 여성의 날 기념행사 8개단체 참여 지방의회 진출 결의

3·8세계여성의 날 대구경북지역 첫 여성대회가 19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 '열린공간 큐(Q)'에서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대구여성회 정중숙(29)사무국장은 “이번 행사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열린 첫행사인 점에서 뜻 깊다. 더불어 대구여성회만의 아닌 지역 여성단체들의 공동연대 행사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내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할 것을 전했다. 대구경북지역 3·8여성대회는 경북여성농민회, 대구여성회, 대경 여대협, 여성의 전화, 지역탁아소 연합 대구위원회, 참길회 여성부, 포항지역 여성모임, 함께하는 주부모임 등 8개 단체가 함께 마련했다. 이들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생리휴가의 무급화 반대, 성폭력법의 올바른 시행과 성교육의 의무교육화 실시, 쌀 및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을 반대”를 밝혔다.

### ◆ 공 판 안 내 ◆

- 3월 22일(화)
  - 10시, 이순심, 폭력남편 살해, 수원지방법원 210호, 1회
  - 10시, 오세중, 국가보안법, 311호, 1회
  - 11시, 원완영의 4, 업무방해, 속행
  - 2시, 장영자의 1, 특경법(사기)등, 311호, 1회
  - 5시, 성희롱 사건, 서울민사지법 562호
- 3월 23일(수)
  - 10시, 조희성, 사기등, 421호, 1회
- 3월 24일(목)
  - 10시, 배정수, 업무상횡령, 424호, 2회
  - 2시, 김형렬, 국가보안법, 311호, 1회
  - 3시, 김택기의 2, 국회 증인·감정법, 319호, 1회
- 3월 25일(금)
  - 10시, 김남현, 국가보안법, 319호, 속행
  - 10시, 박법진(국회의원), 국회의원선거법, 309호, 항소심
  - 2시, 심우식의 1, 배임수재등, 318호, 속행
  - 11시, 이정부의 1, 배임수재등, 422호, 재개

## 제10차 인권운동사랑방 월례세미나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해부한다'

### -제50차 인권위원회 분석과 전망

·유엔의 인권관련기구와 인권위 소개  
·제50차 인권위원회 분석 / 제51차 인권위원회 전망  
·유엔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 사 : 장소영(인권운동사랑방)  
·이대훈(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민간단체 공동회 집행위원)

·일 시 : 3월 24일(목) 오후 7시  
·장 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참가비 : 3천원

\*간단한 저녁식사 제공합니다.

##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사회문제 같이 풀어야 한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 인권' 정책강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재, 이하 장애우연구소)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 한달에 한번씩 '장애와 인권'을 주제로 한 정책강좌를 연다. 정책강좌-「장애와 인권, 어디까지?」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각종 인권침해, 장애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마련된다. 「장애우연구소」의 조문순 간사는 “일반인보다 장애인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를 인권과 연관해서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강좌를 연 동기를 밝혔다. 또 “ESCAP에서 선언한 아·태 장애인 10년(1993년-2002년)과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장애인 문제를 소박하나마 내용적으로 집중시켜내고 싶다”고 밝혔다. 장애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환영한다고. 장소는 「장애우연구소」 사무실(위치 방배전철역 근처), 회비는 5천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를 인권과 연관해서 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강좌를 연 동기를 밝혔다. 또 “ESCAP에서 선언한 아·태 장애인 10년(1993년-2002년)과 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장애인 문제를 소박하나마 내용적으로 집중시켜내고 싶다”고 밝혔다. 장애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환영한다고. 장소는 「장애우연구소」 사무실(위치 방배전철역 근처), 회비는 5천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는 장애인뿐만이

###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 3월 29일(화) :인권의 의미와 장애인과의 상관성
  - 강사 : 서준식/권도용
  - 인권의 보편적 개념/장애인의 인권의 의미
- 4월 26일(화) :장애인의 공채시험탈락과 장애인의 인권
  - 강사 : 조창영/윤찬영
  - 장애인과 고용과 각종기회의 탈락실태와 문제점/권리의 제도적 보장과 방법
- 5월 27일(금) :성폭력과 여성장애인
  - 강사 : 신혜수/남정현/시설문제연구소
  - 성폭력과 여성/청주성화원의 사례와 발표-지역사회와 여성의 대응과정과 성과/시설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6월 28일(화) :정신보건정책과 장애인의 인권
  - 강사 : 김병후/이철용/조홍식
  - 장애인과 정신보건정책/한국 정신보건의 현실/각국의 정신보건법 고찰
- 7월 26일(화) :장애인복지시설 건립반대와 장애인의 인권
  - 강사 : 박태영/차성환
  - 장애인시설의 존재양태/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이유와 대책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는 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입니다

재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 '인천여성의 전화', 개원후 활발한 활동

구타당하는 여성에 대한 상담 등과 인천지역의 여성 운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29일 설립된 「인천 여성의 전화」(대표 김예원)는 3월 3일부터 4월 19일까지 여성문제를 개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강의내용은 「한국사회 현실과 여성의 문제」(지은희), 「아내구타와 피해여성의 심리」(한우섭) 등으로 모두 15강좌로 이루어져 있다. 「인천 여성의 전화」가 지난 1월 29일 개원한지 한 달만 동안 상담한 100여건 중 남편의 구타 및 위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여성의 전화」는 상담활동 외에도 2월 23일-26일까지 「페미니즘 영화제」를 열어 「로자 룩셈부르크」, 「어떤 여인의 사랑」등 9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전화 : 032-529-2545

## AI 한국지부 사형제도 폐지운동

### 사형제도 폐지운동

사형제도에 대한 사형선고 반대 「엠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지난 19일 대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미국의 사형제도 폐지

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미국내에 최소한 36명의 소년범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대기중”이라고 밝히고 93년 한해에 3명이 사형집행되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서 92년 12월 31일 현재 2천 7백 5십명 여명이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며, 77년이후 2백 2십 3명이 사형집행되었고, 93년 한해 동안에도 35명에 대해 사형집행을 받았다”고 발표하며 사형대기중인 소년범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형철폐 캠페인은 엠네스티가 펼치고 있는 주제별, 나라별 캠페인의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정치적 실종을 반대하는 캠페인이 최근 활발하게 벌어지기도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6조 5항에는 「18세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현황」 제37조 a항에 「18세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석방될 가능성이 없는 중신형이나 사형이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 ◆ 알 림 ◆

- 세미나-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 주최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전화 776-5660)
  - 일시 : 3월 23일(수) 오후 1시30분-오후 5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참가비 : 5천원
- 주제발표--가족의 역기능으로서의 아동학대(홍강의 교수) / 학대가정을 위한 가족접근(성민선 교수)
- 사례발표--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의 역할(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 / 학대가정의 아동(의료사회사업가 박혜영) / 방임된 아동(서울시립아동상담소 윤인채 상담원)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제4호
  - 주요내용 : 문국진씨에 대한 신체감정서 요지/고문후유증 피해사례-지하셋방 안에서 공포에 떨며 지낸 7년의 세월/4월 11일 고문후유증 토론회
- 부산불교인권위 창립1주년 기념법회
  - 일시 : 3월 23일(수) 오후 7시 / 문의 : 051-466-1680
  - 장소 : 프라자호텔 2층(부산역 앞 대한통운 빌딩 뒷편)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원진노동자 14명 새로이 직업병 판정

21일 현재까지 '직업병' 판정 3백 49명 울들어서만 32명

### 산재종합병원설립등 종합대책 마련 절실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14명의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환자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이로써 원진레이온 직업병환자는 모두 3백49명으로 늘어났다.

22일 「직업병대책과 고용보장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진비대위) 박인도(37)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부속 안암병원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 중 28명(남자 25, 여자 3)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생산부 방사과 6명, 후처리과 4명, 원액과 3명, 정비과 1명 등 14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환자로 확인돼 21일 의

정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직업병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직업병환자로 판정을 받은 14명 중 30대가 4명, 40대가 9명, 60대가 1명이며 근무년수별로 5-10년은 9명, 11-16년은 5명으로 나타나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기간에 무관하게 증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퇴직후 직업병판정을 받기까지 기간을 보면 1년 8명, 8-12년 5명, 19년 1명으로 언제든 직업병환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88년 9월부터 실시하게된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3백49명의 노동자가 직업병

환자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원진노동자들이 지난해 11월 합의서 규정에 따라 경희대 의료원, 순천향병원 등 3개 병원에서 1주일씩 20명씩 이황화탄소 중독 여부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어 직업병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려대부속 안암병원 등 각 대학병원은 "산업재해, 직업병환자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없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직업병환자들은 최소한의 치료조차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어 원진 직업병환자에 대

한 근본적인 치료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원진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재종합병원설립 계획서 공개, 원진노동자 정부투자기관 재취업 보장, 설립된 원진재단법인에 원진비대위 참여보장"을 촉구했다.

###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씨 첫공판

지난 1월 14일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살해, 같은 달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순심씨에 대한 첫공판이 22일 수원 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렸다. 검사의 직접신문에 이피고인은 낮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다가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흐느끼기도 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검사

( 2면으로 계속 )

### 제10차 인권운동사랑방 월례세미나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해부한다'

-제50차 인권위원회 분석과 전망

·유엔의 인권관련기구와 인권위 소개

·제50차 인권위원회 분석 / 제51차 인권위원회 전망

·유엔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 장소영(인권운동사랑방)

·이대훈(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인간단체 공대위 집행위원)

·일시 : 3월 24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참가비 : 3천원

\*간단한 저녁식사 제공합니다.

### 알림

□세미나-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주최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전화 776-5660)

·일시 : 3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5시 / 참가비 : 5천원

□부산불교인권위 창립1주년 기념법회

·일시 : 3월 23일(수) 오후 7시 / 문의 051-466-1680

·장소 : 부산역 앞 프라자 호텔 2층

### '고물' 컴퓨터를

기증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각종 인권관련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컴퓨터가 절대 필요합니다.

### 양심선언 조정희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육군교도소에서 종교활동 보장, VTR 시청등 요구

「군무이탈」과 「민족한남활동가 조직」 구성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되어 기소돼 지난 1월 13일 이적단체구성혐의는 무죄선고를 받고, 군무이탈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경기도 이천군 장호원 육군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조정희씨가 지난 21일부터 재소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위원장 김종일, 이하 군.경대책위)에 따르면 조씨는 운동시간 연장, 종교활동 보장, VTR 시청, 독서.서신등의 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 같은 사실은 「군.경대책위」의 한 실무자와 조씨의 아버지가 21일 조씨 면회과정에서 밝혀졌다. 「군.경대책위」는 또 면회에서 조씨가 "오늘 아침부터 단식을 시작했다"고 밝히자 면회시작 1분도 되지 않아 조씨의 아버지 등 2명이 헌병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교도소는 21일의 전화통화에서 종교활동, VTR 시청등이 「특수동」 복역자에게도 보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월 25일-26일에도 재소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인적이 있다. 조씨는 92년 7월 「민족한남활동가 조직사건」 관련혐의로 기무대에 연행돼 기소유예로 나왔다가 같은

해 9월 28일 「민족한남활동가 사건」이 기무사에 의한 조작임을 폭로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양심선언후 93년 7월 체포되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3월 29일 오후 2시 육군교도군사법원에서 열린다.

### '일본 전쟁책임 확실히 정대협, 전국연합등 줄속처리 경계, 배상요구

「김영삼대통령의 매국적 방일 규탄 및 한일정상회담 반대를 위한 시민대회」가 오늘 오후 1시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정대협」, 「한청협」, 「한총련」, 「전국연합자통위」 등 10개 단체는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을 규명하고,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배상 등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반대하고 김영삼 정권의 자주적 외교를 촉구할 예정이다. 집회를 마친뒤에는 일본대사관앞으로 거리행진을 갖는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등)는 23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일본의 전후책임 문제를 포함한 양국간의 과거사 문제가 줄속적으로 처리될 위험이 많아 일본의 책임을 확실히 하도록 촉구하는 '제111차 수요시위'를 가진다.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는 월 1만원에서 3만원까지 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 '사법부의 반민주적 요소 극복' 경험 나누기

'과시즘 경험', '해방후 반민주적 법체계' 살펴

3월 27일-28일 일본 오사카 한.일 법률가 교류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독립침해의 역사와 비민주적 사법제도의 여러 측면을 조명하는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의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간사 홍성우, 이하 민변)과 일본의 「한.일 법률가 교류회 추진모임」은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을 주제로 「한.일 법률가 교류회」를 연다.

토론회에서 「민변」은 해방이후 반민주적 법체계와 그 극복과정 및 앞으로의 대안을, 일본측은 2차대전

전의 과시즘의 법체계와 전후의 극복과정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각 분과별로 나누어 진행될 토론회는 형사분과가 「오펜의 원인과 그 극복」을, 노동분과가 「최근의 고용조정 문제와 근로자 파견법」을, 국제인권분과가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일본 오사카에서 「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을 주제로 「한.일 법률가 교류회」를 연다.

일본의 법률가 교류회 추진위는 「일본 민주법률가협회」, 「일본 노동변호단」, 「자유인권협회」 등 7개의 법률가단체들이 참가하여 구성된 연락기구 성격의 모임이다.

### '이제는 여성이 정치에 참가해야 할 때'

3월 27일 '여성대회' 계기로 20% 할당제 도입요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축제 제10회 한국여성대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27일(일) 오후 12시-6시까지 동국대 중앙당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살림의 참일꾼,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여성의식 20% 확보!'를 주제로 내세운 한국여성대회를 시점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추진동이 결의된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20%할당제 도입' 요구를 모아내고 지방의회에 '좋은 여성 후보 보내기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숙희씨 사회로 진행되는 본대회는 올해의 여성운동상 대상자 홍미영씨 시상식이 있고, 전주 「해오름」의 출판 '여성을 지역살림의 주체로'가 선보인다.

이밖에도 노래가사바꿔부르기, 김지숙의 모노드라마, 가수 양희은씨의 노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

되어 있다. 본행사가 치뤄지는 같은 시간에 중앙당 앞 잔디밭에서는 야외행사도 풍성히 진행된다. 나감구, 길쌈짜기, 강강술래등 전통 공동체놀이와 공동벽화그리기, 사진전시회, 비디오방이 운영되며, 여성자료와 우리농산물이 전시·판매되고, 먹거리장터가 마련될 예정이다.

( 1면에서 계속 )

질문사항이 지나치게 많으며 특별기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순심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30여 명이 공판진행을 지켜보았다.

다음 공판(4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는 이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이씨가 남편에게 폭행당한 사실 등과 사건당시 정황, 아내구타 문제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학대당하는 아동 “아내구타 가능성 높다”

23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학대자상담 프로그램 마련돼야

아동학대는 아내학대와 더불어 나타나며 아동 학대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는 그들 역시 아내학대자의 피해자라는 보고가 23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다. 박혜영(의료사회사업가)씨는 발표문 「학대가정의 아동」에서 13명의 학대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히고 “가정폭력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이 폭력의 학습을 통해 다시 아동학대자와 아내학대자가 될 높은 가능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강의(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씨는 「가족역기능으로서의 아동학대」를 통해 “아동학대는 가족역기능의 표현 결과이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에서 연결되는 성폭력(성폭력)의 실례를 국내외의 경우를 들어 설명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이근배씨의 논문 등을 예로들어 배우자를 학대하는 부모는 자녀도 학대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동학대를 통해 나타난 가족의 역기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민선(성심여대 사회사업학과 교수)씨는 사회사업가의 과제로 학대자상담의 중요성과 가족전체를 위한 사회적 서비스의 중대를 얘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으로 박명환(한국청소년연구원장)씨가 선출되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올해로 창립 5주년

을 맞으며 전국 8개 지역 협회를 통해 아동학대상담, 가족상담 및 상담교육 등을 해오고 있다.

### 일본 시효부적용조약 가입해야 정대협, 전국연합등

「정대협」(공동대표 이효재등)는 23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11차 수요시위’를 갖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대협」은 성명에서 전후처리 해결없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김영삼 대통령은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부적용조약’ 가입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연합 자동위」,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등은 같은 날 탑골공원에서 대통령의 방일을 맞아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등을 촉구했다.

### 힘 출판사 압수수색 영장없이 대표연행

서울경찰청 보안2과는 23일 오후 1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도서출판 힘’(대표 김연인)을 수색하고 93년에 출판된 ‘실천철학’, ‘지배와 항거’, ‘청년학생운동’ 등 책 1천 5백여권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구속영장도 없이 김씨를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목록 작성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직접 경찰서로 와서 수량을 확인하라며 압수수색시 작성하게 되어있는 압수하는 물품의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의 강제연행 사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받자 김씨가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현행범이라며 24일중으로 구속영장을 품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서출판 힘’의 압수수색과 김씨의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보여준 행동은 최근 영장없이 유치장에 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뒤 경찰내부의 부산한 인신구속절차 개선 움직임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 ‘중고’ 컴퓨터를 기증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각종 인권관련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컴퓨터가 절대 필요합니다.

## 국제인권소식

### EU, 외국인민자의 동등한 권리행사에 관심가져

EU(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파드라이그 플린 사회분과 집행위원은 지난 22일초 집행위에 영주권을 얻어 유럽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얻어 살고 있는 제3국인들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며 EU 12개 회원국을 마을대로 여행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EU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불법적인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 등은 엄격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한국인을 포함한 유럽내 9백만 명 가량의 외국인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플린의 제안은 12개국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가능한데 영국·독일·프랑스·덴마크 등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유럽국가들이 외면해온 외국인민자의 동등한 권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의의를 갖는다.

### 유럽, 인종주의 희생자 증가 유럽에서 72명 외국인 희생-93년

93년 한해동안 유럽지역에서 72명이 인종주의에 희생되었다고 최근 영국의 인권단체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반대운동(CARF)’이 보고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는 독일에서 발생했는데 92년에 25명, 93년에 52명이 피살되었다. 또 영국에서는 92년에 12명이, 93년에 6명이 피살됐다.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이민이나 난민에 대한 살해행위는 주로 극우단체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범죄는 유럽의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자의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예산의 축소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럽의 실업자수는 2천만 명에 달한다.

프랑스의 한 관계자는 2천년째까지 유럽대륙에는 유색인종의 인구가 1억 3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제일한국정치범 석방 전후처리 해결 요구’

제일인권단체 19-21일 단식농성도

22일 일본의 ‘제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공동대표 : 김태명·김윤철·고정신, 이하 민권협)는 김영삼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제출한 요망서에서 △제일한국인정범의 석방문제 △전후처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여러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등에 관해서 한일 양정부가 한일수뇌회담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대표들은 당일 오전 11시 제일한국대사관을 방문하고 박영관 법무협력관, 오후 3시 45분에 일본수상관저를 방문하여 하토야마 내각관방 부장관을 면담하고 위의 요망서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순유형씨를 지원 하는 모임’과 ‘관서 한국정치범 구원 연락처’는 김영삼대통령의 일본방문(24일-26일)을 앞두고 19일-21일까지 3일간 순유형씨를 비롯한 제일한국정치범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식투쟁을 오사카 세이와 교회에서 벌였다.

이들은 단식에 들어가며 발표한 선언문에서 “지난 3월 2일 한국을 방문한 호소카와 수상은 ‘한·일 신시대 개막’이라는 한·일관계의 발전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한국의 감옥에는 순유형씨를 비롯한 7명의 제일한국인이 있다. 진정한 일한 신시대의 출발은 이들의 석방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단식 중 매일 아침집회를 가진 뒤 일본내 한국정치범 구명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물을 역전과 주택가에서 배포했다.

단식을 마치며 이들은 “한국의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주장을 일본에 광범위하게 호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단식에 들어가기에 앞서 ‘순유형씨를 지원하는 모임’ 등은 일본정당과 도이다까고 중의원의장, 일본외무성과 제일한국대사관 등을 방문, 면담을 통해 한국정치범 석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이들 단체들은 오는 29일 한국으로 최병모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장)를 초청, 한국의 인권상황을 듣는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씨 신체감정서

고문피해자 문국진씨에 대한 신체감정서가 지난 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되었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궁 기(연세의료원 정신과)씨는 신체감정서에서 “문국진씨가 86년 이전에는 기왕증(이전의 동일한 병역)이 없었으며, 문서의 정신분열증 발병이 고문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씨에 대한 신체감정은 93년 12월 28일부터 94년 1월 12일까지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가 지정한 연세의료원 정신과 전문의인 남궁 기씨에 의해 이뤄졌다.

문씨는 작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고문 등에 의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해서 노동능력 등을 상실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문씨는 ‘보임·다산 사건’으로 86년 10월 27일 청량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47일 동안 구타 등의 고문을 받아 정신분열증세를 일으켜 중공동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다가 87년 2월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 조정희씨 단식해제

지난 21일부터 경기도 이천군 육군장호원교도소에서 ‘특수동’ 복역자들에게 대한 종교활동 보장, VTR시청허용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조정희씨가 23일 단식을 해제했다.

조씨는 교도소측이 자신에게 종교활동과 VTR 시청 등을 보장한다고 약속함에 따라 단식을 해제한 사실이 23일 조씨를 면회한 어머니를 통해 밝혀졌다.

### ◆ 바로잡습니다 ◆

3월 23일자 <인권하루소식>의 ‘양심선언 조정희씨 교도소 처우개선 요구 단식’ 기사중 21일 조씨를 면회하면서 조씨의 아버지 등이 헌병대에 끌려나갔던 것이 아니라 조정희씨가 끌려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알림 ◆

□제28차 민가협 목요일집회  
·일시 : 24일 오후 2시, 탑골공원앞  
·주제 : 창작·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 제10차 인권운동사랑방 릴레세미나

**바로 오늘!**  
**저녁 7시**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해부한다’**  
-제50차 인권위원회 분석과 전망

- 유엔의 인권관련기구와 인권위 소개
- 제50차 인권위원회 분석 / 제51차 인권위원회 전망
- 유엔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강사 : 장소영(인권운동사랑방)  
· 이대훈(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한국민간단체 공동위 집행위원)

장소 :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3천원  
\*간단한 저녁식사 제공합니다.



# 인권하루소식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미군범죄 신고센터’ 4월 1일 개설

전국 13개 지역 하루평균 5건 발생 미군범죄에 적극 대응

### 미군범죄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재열, 이하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는 미군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각 미군주둔 지역에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한 끝에 동두천, 의정부, 군산, 대구 등 13군데에 설치하고, 오는 4월 1일 「미군범죄 신고센터」를 공식 발족, 활동에 들어간다.  
「미군범죄 신고센터」는 미군에게 범죄를 당하고도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상담, 법률구조 활동 등을 펴고, 실태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미군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법률구조 활동은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산하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에 소속된 변호사와 학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또 미군범죄 백서를 발간하고 「미군범죄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미군범죄는 연평균 2천 2백여 건, 하루평균 5건(법무부 집계)이 발생하고 있고, 92년 10월부터 93년 8월까지 8백 50건의 미군범죄 중 한국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0건(1.17%)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미군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미군범죄 신고센터」는 바

로 이런 사실에 주목하여 앉아서 당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개

## 희망세 단원등 6명 영장없이 불법연행

24일 신분·이유·행선지 전혀 밝히지 않아

### 시민항의에 폭언으로 화답

경찰이 23일 ‘도서출판 힘’ 대표를 영장없이 강제연행한데 이어 하룻만에 또 다시 법률이 정한 신체구속 절차를 깰려 무시하는 불법연행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5시30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집회에 출연했던 극단 「희망세」 단원 황성현(30, 희망세 무대감독)씨 등을 포함한 6명이 집회를 마친뒤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경찰로 추정되는 남자 15명에게 납치되었다.  
「희망세」 단원들은 식사를 한 뒤 흥대 영자신문사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 종로2가 파출소 앞을 지나던 중 파출소 앞에 세워진 승

합차에서 뛰어나온 15명의 남자에게 의해 불법연행된 것이다. 황씨 등은 영장제시를 요구하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봉고차 밖으로 머리를 내밀며 항의했으나 결국 머리카락을 쑤셔박힌 채 연행되었다.  
이 장면을 본 시민들이 “왜 그러냐”며 봉고차를 가로막고 항의하자 “비켜라,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과 함께 시민들을 밀쳐냈다.  
한편 경찰이 황씨 등을 연행하는데 사용한 승합차(서울 6보 1848)는 지난 2월 20일 부산에 있는 「희망세」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도 사용됐으며 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 2면으로 계속 )

## ‘중고’ 컴퓨터를 기증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각종 인권관련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컴퓨터가 절대  
필요합니다.

## 각 지부별 미군범죄 신고전화

지부 이름	신고 전화
서울 본부	02-744-1211
동두천, 의정부	0351-62-7852
평택, 송탄	0333-51-3556
파주	0348-941-5469
매항리	0339-58-2806, 7
대전	042-257-9790
원주	0371-731-1364
춘천	0361-55-7810
군산	0654-63-5313
대구	053-565-5687
부산	051-817-8801

## ‘장애인의 지하철 무료이용 가능한가’

수도권 지하철 124개역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녹색교통운동

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이 장애인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 보면 장애인이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라는 것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료이용’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재)와 「녹색교통운동」(대표 정운광)은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장애요소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전문가, 학생, 시민들로 구성된 실태조사단은 경인지역의 1, 2, 3, 4호선 지하철에 한정해 지하철 편의시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지하철 실태조사는 1호선 30개역, 2호선 44개역, 3호선 31개역, 4호선 19개역 등 모두 124개역에서 지하철 계단, 승차권 발매기, 대합실등 역사시설, 승강장 및 승강기, 공중전화, 화장실등 모두 8개항의 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인 및 아동 등 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불편을 겪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역마다 실태를 조사하여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철 편의시설의 실태조사로만 끝내지 않고 2차·3차로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철도교통수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단체에서 한가지 사안에 대한 세세한 통계분석과 이에 기초한 안을 내놓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시민운동에 모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고용약화」 등 인식공유 여성지도자·정무장관 간담회

「3·8 세계 여성의 날 86주년 기념 공동위원회」(이하 여성의 날 공동위)와 권영자 정무 제2장관은 24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평등과 고용안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영선(한국여성노동자협회 대표) 등 노조여성위원장등 25명과 권 장관 등이 참가한 간담회에서 ‘여성의 날 공동위’는 여성들이 겪는 고용불안정 상태, 생리휴가제 무급화를 철폐할 것과 종합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참석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실시가 안 될 경우 이우를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여성정책 주무부서장인 정무 2장관과 ‘여성의 날 공동위’ 소속의 노조 여성대표자와 여성단체 대표 등이 악화되어가는 고용실정을 공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PC통신 김형렬씨 공판연기  
24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8호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김형렬(현대철학동호회장, 진보저널 근무)씨의 재판이 4월 6일(목) 오후2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유인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유포혐의로 구속되었다.

## ‘산재없는 세상만들기’ 그림전

4.27-5.3 산업보건종합센터 건립기금 마련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의로기 관인 ‘산업보건종합센터’ (이하 산보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그림전이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7일간 인사동 인덕로 화랑에서 열린다.

「산보센터 설립추진위원회」(대표 양길승)등이 ‘산보센터’ 건립을 위한 그림전 준비 모임을 구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림전에는 작가 임옥상, 김정현씨의 작품을 비롯해 연변·북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한국화, 서양화, 조각, 판화는 물론 생활미술등 광범위한 분야가 포괄된다.

「산보센터」 기금마련전은

### 사노맹 재건기조사 집유선고

「사노맹」 재건 기도 혐의를 받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찬호(29, 전 광노협 교육부장) 등 3명의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모두 풀려났다.

광주지법 형사 제1단독 김동주판사는 23일 ‘사노맹 조직원과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 피고인과 이판재 피고인(24, 전 민중정치연합 광주지부대의원)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류상열 피고인(37, 전 금호광주공장 노동쟁의부장)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등 3명은 93년 12월 16일 ‘사노맹 조직원’과 만났다는 혐의를 받아 전 남경철청 보안국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다.

단순히 전시회의 차원을 떠나 산업재해에 희생당하는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산보센터’ 건립은 이제껏 국가발전의 논리를 내세워 방치되어온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계, 학계, 법조계등 사회 각분야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문의 : 한국노동보건 직업병연구소 ☎ 839-3446, 7).

### 부산불교인권위 1주기 법회

「부산불교인권위원회」(상임대표 정각)는 등 23일 프라자호텔에서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1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정각스님은 「인권운동이 곧 불교교포 운동입니다.」는 기념사에서 “불자들이 인권운동에 동참하여 이를 통해 불국토와 세계일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1차년 활동평가, 법률상담소 운영 평가, 2차년 활동계획 등이 보고되었다.

### ( 1면에서 계속 )

으로 밝혀졌다.  
24일 연행된 사람은 황씨 외에 이상열(26, 희망세 가수), 이윤정(26, 희망세 사무국장), 장지범(26, 희망세 기약부), 김미경(25, 한음출판사 직원), 이권섭(22, 동아대 정의과 4년)등 모두 6명이다. 이날 「민가협」 주최의 목요일집회는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는 내용으로 열렸다.

### ◆ 알 림 ◆

- ☐양심선언 이종수씨 항소심 선고공판  
·3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고법 303호
- ☐‘쉼터’ 개원 7주년 기념식 및 ‘쉼터이야기’ 출판기념회  
·일시 : 3월 25일(금) 오후 3시/ 장소 : 기독교연합회관 4층



<이달의 주제 - 여성>  
입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경찰 불법연행 불법체포·감금 고발 희망새·민가협 책임자 처벌요구 불법행위 처벌하는 계기되어야

노래극단 「희망새」(대표 김태일)의 단원 불법연행과 관련 단원 이운정, 김미경 씨의 가족 2명이 25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 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므로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체포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을 뒤로 꺾으며 허리를 비틀어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김준열씨와 김상근씨는 수사지휘기관인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행위이며,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전면탄압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구속자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모든 인권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김준열(이운정씨 어머니) 씨와 김상근(김미경씨 아버지)씨는 고발장(접수번호 1450)에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 15명을 피고발인으로 하고 있다. 피고발인들은 24일 이운정씨의 5명을 불법연행한데 가담한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회원들과 연행자 가족들은 24일부터 장안동 대공분실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래극단 「희망새」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단원에 대한 불법연행은 비민주적인 인권유린을 단적으로

구하였다.  
한편 이운정씨 등 24일 연행된 사람들도 가족,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연행에 가담한 경찰관들을 고소할 뜻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24일 경찰이 희망새 단원들을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각 인권단체 등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 이내창 추모회 정기총회

이내창열사 추모사업회는 오늘 오후 5시 중앙대(혹석동) 학생회관 2층 여학생휴게실에서 94년 상반기 정기총회를 갖는다. 주요안건으로는 백서형식의 '이내창열사 추모집' 발행이 다뤄지게 된다. 이밖에 94년도 사업방향과 예산심의,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인준 등이 잡혀있다. 회비 1만원. 문의 02-821-3212

### 알림

- 김삼석씨 돕기위한 일일 주점
  - 일시 : 3월 26일(토) 오후 1시-오후 10시
  - 장소 : 외대앞 보스톤 호프(이문동)
  - 주최 : 한국외대 왕산 동문화
- 베를 78호(쉼터 7주년 개원기념호)-한국여성의 전화
  - 주요내용 : 베를칼럼-공기총 난사와 가정폭력/여성의 눈으로 본다-교육 전문가,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부족해/가족이란 무엇인가-가족의 본질/여성의 전화 '93년 상담통계분석/베를좌담-쉼터에 있을때 처럼 편해보고 처음이었어요/쉼터통계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0회 한국여성대회
  - 주최 : 3·8 86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공동위원회
  - 일시 : 3월 27일(일) 12시-오후 6시
  - 장소 : 동국대 중강당
- 산보센터 소식(제9호)-산업보건종합센터 설립추진위
  - 주요내용 : 산보센터 건립기금마련 '그림전' 개최/94년 을 산보센터를 다지는 해로 만듭시다(양길승)/은행단말기 취급자 건강장해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중고' 컴퓨터를  
기증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각종 인권관련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컴퓨터가 절대  
필요합니다.

## 매 맞는 여성의 피난처 '쉼터' 7주년 행사 25일 「쉼터이야기」 발간도

87년 3월14일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매 맞는 여성들의 피난처인 '쉼터'가 올해로 7주년을 맞았다. 「한국 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는 쉼터 7주년을 맞아 25일 오후 3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은 쉼터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쉼터이야기」(그린비 펴냄) 출판기념회도 아울러 진행됐다.

다. 앞으로 쉼터는 독일 프라우엔 재단의 지원으로 넓혀질 예정이다.  
이날 93년 쉼터의 한 이용자는 "자살기도로 병원에 입원중 새벽에 화물차를 타고 도망쳤다. 도망와서 쉼터에 머물면서 처음에는 남편이 무서워 쉼터 문밖으로 한걸음도 나갈 수 없을 만큼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이제는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용기를 가지라는 말과 함께 상담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1부 개원 기념식을 마친 뒤 2부는 출판기념회로 계속되었다. 「쉼터이야기」는 1부 '갈곳이 어디고?', 2부 '아무리 크게 물어도', 3부 '나를 찾아서' 및 편지 등도 구성되었는데, 쉼터 이용자들의 상담일지와 일기를 통해 그들의 변화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놓았다.

### 쉼터 이용자 통계분석

87년부터 93년까지 쉼터 이용자는 93년 현재 총4백47명으로 집계되었다. 87년 27명, 88년 31명에서 해마다 늘어나 93년에는 1백13명이었다. 한국 최초의 매 맞는 아내 피난처로서는 많은 숫자일지 모르나 선진국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이다. 가부장적 사회속에서 집을 나온다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지만 쉼터가 알려질 수록 이용자는 늘어가고 있고 최근들어 장소가 좁아 다른 기관 이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 것

을 볼 때 이전에는 나오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 못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백 47명의 사례를 보면 구타가 3백 39명(78.1%)으로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밖에 의도 25명(5.6%), 구타에 알콜중독 22명(5%), 시집갈등 13명(3%)순으로 나타났다. 쉼터이용자들의 이후 진로는 귀가가 2백 41명(53.9%)으로 절반이상을 나타냈고, 취업 71명(15.97%), 별거 41명(9.1%), 이혼 22명(5%)등으로 조사되었다.

### 쉼터 이용자 현황(87-93년)

년도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이용자(단위 명)	27	31	28	51	73	124	113	
	27	58	86	137	210	334	447	

## 출판노조 시대적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위원장 박광호)은 24일 검찰의 출판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1일 일빛출판사의 이성우 사장 연행에 이어 23일 힘출판사의 김연인 사장의 연행과 압수수색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출판탄압'이라고 항의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실천철학」, 「지배와 항거」 등은 이미 출간된지 3-7년이 지난 것들로 군사정권 하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성명서에서는 또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과학 이념서적일지라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국가보안법 존속 필요성 운운' 및 남북·북한 긴장관계를 악용하여 출판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면서 출판탄압의 즉각 중지 및 구속된 출판인 즉각 석방,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한편 24일 밤12시 김연인 사장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담당검사는 서울지방법원 신중대 검사이며 김씨는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김씨는 면회를 통해 출판사 직원에게 "연행되기 1년전이나 최소한 6개월전부터 집주변에서 감시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우기 연행되기 얼마전부터는 날마다 미행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며 자신의 구속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 양심선언 이종수씨 항소심에서도 유죄선고 서울고법 '전경의 시위진압은 위법 아니다'고 판결

전경대설치법을 위반하여 근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양심선언 전경' 이종수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합의1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상현)는 24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LA사태처럼 국내의 치안문제에도 군이 개입하는 것이 현대의 추세"라며 "80년 후반기의 한국의 데모 진압에 전경이 동원된 것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전경이 대간첩 작전에 동원되는 것 등을 규정한 전경대설치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91년 5월 13일 연세대에서 전경대 해체 등을 요구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93년 7월 21일 연행, 구속되었다.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는 월 1만원에서 3만원까지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김영삼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심포지움 4월 2일 9개분야 2곳에서 동시 진행

김영삼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인권, 여성, 사법, 노동, 환경 등 9개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는 심포지움이 열린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노현)가 4월 2일(토)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김영삼 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라는 주제로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창립5주년을 기념으로 마련한 심포지움은 각 분야별로 발제자와 2명의 토론자가 참가하여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곳의 회의실에서 같은 시간에 2개의

주제가 동시에 진행된다(아래 표 참조). 심포지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이번엔 마련한 심포지움의 취지를 "김영삼정부 개혁을 각 분야별로 분석해서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0회 한국여성대회(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가 27일 오후 동국대 중앙관에서 여성단체 회원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지역살림의 참 일꾼, 여성 대표를 지방의회로'를 슬로

진으로 내건 한국여성대회에서는 '이천만 여성에게 드리는 글'을 채택하고, 양희은씨 등의 노래와 '한국여성민우회'의 '어머니 노래단'의 노래가사 바뀔때까지, 김지숙(연극배우)씨의 일인극 '일하는 여성'등의

**"여성의 정치적 평등권 실현하는 방법 필요"**  
**제10회 한국여성대회 여성의석 20% 할당제 주장**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창립5주년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김영삼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

주제	제목	발표자	토론자
10:00-	기조발제	강경선(방송대)	
10:30-	정치	정치관계법을 통해 본 정치개혁의 전망 김민배 (인하대)	성정엽, 홍성방
	노동	문민정부의 노동법과 노동정책 김선수 (변호사)	이철수, 박석운
11:30-	행정	행정에 관한 법적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홍준형 (아주대)	정준현, 임재홍
	경제	김영삼정부의 재벌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 박노현 (방송대)	김성태, 옥무석
14:00-	공안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 장영민 (인하대)	김기진, 김동한
	환경	문민정부의 환경정책 비판과 환경권 실현방향 석인선 (이화여대)	김명환, 조준래
15:00	사법	진정한 사법민주화란 무엇인가 박홍규 (영남대)	한상수, 박원순
	여성	여성인권의 현주소 이종걸 (변호사)	김영림, 최은순
16:00	인권	문민시대 인권운동의 과제 서준식	오완호, 이승호
17:00	종합토론		

각종 문화행사가 이어졌다. '이천만 여성에게 드리는 글'에서는 "여성들이 항상 부딪히고 있는 교육, 노인, 환경, 교통문제 등 모든 문제가 정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와 정치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통장에서 국회의원까지 여성의석 20%할당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알림◇  
장애와 인권(정책강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문의 521-5364)  
일시:3월 29일 오후 2시  
장소:연구소 강의실  
강사: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토론자:권도용(한신대)

### ◆공판안내◆

- 3월 29일(화)
  - 강정일,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2호, 09:30, 선고
  - 이상욱,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14:00
  -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항소심, 14:00
- 3월 30일(수)
  - 유영상의, 공문서위조등, 서초동법원 318호, 2회, 10:00
  - 노태훈, 국가보안법, 319호, 항소심 선고, 10:00
  - 고용출,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302호, 선고, 10:00
  - 허현준,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311호, 2회, 14:00
  - 장은,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311호, 2회, 14:00
  - 정재원의, 특가가법(사기), 서초동법원 311호, 37회, 14:00
  - 이용철,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311호, 2회, 14:30
- 3월 31일(목)
  - 봉철의,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1호, 선고, 10:00
  - 배정수, 업무상횡령, 서초동법원, 424호, 3회, 10:00
  - 이진삼, 폭력, 422호, 속행, 15:00
- 4월 1일(금)
  - 김선민의 1, 업무방해, 서초동법원 318호, 속행, 10:00
  - 오세중,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선고, 10:00
  - 장영자의, 특가가법(사기), 서초동법원 423호, 1회, 14:00
  - 안훈찬의1,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311호, 2회, 16:00

## 여성의 전화 93년 6천7백59건 상담

아내구타 30% 법률적 지원, 피난처 제공 필요

한국여성의 전화(대표 이문우) 상담 통계결과에 따르면 93년 한해동안 상담 건수는 모두 6천7백5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화상담은 6천1백건, 면접상담은 6백59건으로 92년도에 비해 12%의 증가를 보였다. 평균적으로 보면 매일 5백63건, 매일 18.8건의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상향을 보면 나이는 31-35세가 26.86%, 26-30세가 22.47% 순이었고, 학력은 고졸이 33.33%, 대졸이 20%를 나타냈다. 또한 결혼년수는 10년 이내가 40%, 15년 이내가 23.33%였다. 또한 구타당하는 아내들이 여성의 전화에 가장 원하는 것은 법적지원 41%, 피난처 제공 31%였으며, 정신적·심리적 지원 28%,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이 27%였다(복수응답 포함).

6천7백59건의 상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구타가 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부갈등(22%), 외도(18%) 순이었다. 이 빈도와 순위는 92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이중 93년 4/4분기 상담건수는 1천8백22건으로 전화상담 1천6백44건, 면접상담이 1백64건에 달했다. 상담 내용 분류에서는 93년 통계와 마찬가지로 구타가 34%로 가장 많았다. 특히 면접상담 결과 61%가 구타로 나타나 아내구타 문제의 현실을 짐작케 했다. 이를 61%중 한 달에 1번꼴로 매를 맞는 여성들은 30%였고, 한 주에 2-3회 정도 매를 맞는 여성들은 18%, 거의 매일 매를 맞는 여성들은 무려 10%나 되었다. 게다가 이들중 50%가 구타남편이 아이를 때리고 있다고 대답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던져주었다.

###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 15명 불법체포 고발

민가협 "고발운동 전개로 경찰폭력 뿌리뽑아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는 노태극단 '희망새' 단원을 불법연행한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수사관 15명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접수번호 1544). '민가협'은 고발장에서 "시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피고발인들이 고위와 공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인신구속을 하였다"며 철저적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선 25일에 가족들이 고발장을 냈다.

상염씨등 2명은 구속되고, 황성현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 경찰 또 불법연행, 감금 학사노사건 노동자 4명 연행

27일 밤 울산 현대중공업 백행록 대의원이 불법연행된 데 이어 서울에서 28일 까지 조돈희·이완순·함평기씨 등 4명이 '혁명적 국제사회주의 노동자동맹'(학사노) 사건으로 연행되었다.

백씨는 27일 밤 10시 10분 경 회사에서 분양한 동부아파트 관리인을 앞세워 들이닥친 정채불명의 괴한 10여명에 의해 납치당했다. 백씨의 부인이 누구냐고 물으며 항의하자 감금하기도 했다.

또한 함씨는 28일 오전 11시경 전래투 사무실(여의도 민주당사)이 있는 여의도 백화점 1층에서 경찰과 몸싸움 끝에 연행되었다. 이씨는 이날 아침 출근길에 연행되었으며, 백씨등 4명은 홍계동 대공분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3년 상담유형별 통계 (총 6,759건)

구타	30%
부부갈등	22%
남편외도	18%
법률문제	11%
미혼여성문제	7%
시집갈등	6%
주부개인문제	3%
강간	2%
기타	1%

한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올봄 임금협상을 앞두고 백행록 대의원의 납치사건은 현대중공업 2만2천여명에 대한 공세이다. 노조는 이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히며, 백씨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10일 학사노 사건으로 연행된 6명은 공판이 진행중이다. 이번 학사노 사건의 연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백행록(34);현대중공업 대의원 ◇조돈희(36);현대중공업 조직쟁의실장, '울산민주노동자협의회 의장' ◇이완순(34);인천 동흥전기 노조위원장 ◇함평기(31);삼익악기 해고노동자

의문사 진상규명 노력할 터  
이내창추모사업회 총회

이내창열사추모사업회(명예회장 장임원 중대의대교수)는 26일 정기총회에서 김종현(83,영어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를 새로이 꾸렸다. 또한 올해 주요사업으로 이내창열사추모집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10월경 발행예정인 추모집은 ▲이내창열사의 의문사 백서 ▲한국 및 국제인권사학들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그밖에도 열사유고작품등이 실릴 예정이다. 한편 이철규추모사업회 등 의문사관련 추모사업회 모임이 4월 4일(월) 오후 3시 유가협사무실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전국민족민주열사 추모(기념)사업회 연대회의가 열려 총회준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문의 764-1684).

양심선언 군경 소식지 발행  
'양심선언 제3호'

'계속되는 양심선언' '자주 국방의 실현과 평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전경대설치법 왜 위험인가' 등의 내용으로 24일 발행했다.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장애인운동을 인간의 권리를 되찾는 운동으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인권-어디까지?’ 첫번째 강사 서준식씨 주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성재, 이하 장애우 연구소)가 주최한 ‘장애인 인권-어디까지?’의 첫번째 강의가 29일 오후 2시에 「장애우연구소」 강당에서 열렸다.

‘인권의 의미와 장애인과의 상관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좌는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가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발표와 ‘장애인 인권과 실천체계’를 주제로 권도용 교수(한신대 재활학과)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 대표는 주로 역사속에서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인권’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시대에 따라 내용이 구체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서 대표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인권사상과 제도, 빠리프론에서 출발한 민중

의 인권론을 서로 비교한 후에 현대의 인권보장제도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자연법에 기초한 인권사상의 핵심인 생명권, 자유권 및 재산권은 부르조아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전개의 필수

### “역사노조직은 오래전에 해체되었다”

28일 연행된 함기평씨 변호사 접견에서 밝혀

역사노사건으로 27일, 28일 사이에 연행된 함기평씨의 3인이 29일 현재 낮에는 홍계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밤에는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것으로 함씨를 접견한 김선수변호사가 전했다.

김변호사는 “함기평(삼익 약기 해고노동자)씨의 경우 이미 오래전에 역사노를 정리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미행을 당했다고 한

적인 조건이 되어 ‘국민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게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면 계속)

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보아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조작할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의문을 제시했다.

한편 함씨는 28일 오전 11시 연행 당시 전해투 상황실에서 젊은 여자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로 가던 중 불법연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호(28) 전해투 대외협력부장은 “전해투 집행부는 변호사 접견을 통해 파악한 상황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희생세 단원은 양심수”  
 즉각적인 석방 요구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24일 연행되어 25일 구속된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이윤정(24, 부산수산대출)씨 등 2명과 지난 2월 21일, 22일에 연행된 김태일(희망새 대표), 조재현씨 등 4명을 양심수로 본다고 밝히고, 엠네스티 회원들에게 노래극단 ‘희망새’ 회원들의 무조건적이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라는 ‘긴급구원활동’ 서한을 보냈다.

한편 엠네스티는 지난 2월 희망새 단원들이 연행됐을 때와 지난 24일 이윤정씨 등 6명이 연행, 구속되었을 때에도 ‘긴급구원활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명백한 법의 남용’이라고 지적했었다.

‘긴급구원활동’은 국제 엠네스티 사무국에서 발행하는 서한으로서 해당 정부를 통해 국제적인 압력활동을 하는 엠네스티의 대표적인 활동방식 중의 하나이다.

### 알림

□제112차 정대협 수요시위

- 일시 : 3월 30일(수)
- 장소 : 안국동 일본대사관 앞
- 주관 : 한국총학생회연합

□<나눔의 집> 이전

불교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정신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이 서교동에서 혜화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전화번호: 744-9223)

□조정회 일경 재판 면기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회 일경의 항소심 공판이 29일에서 4월 12일(화) 오후 2시(대전 계룡대 육군고등법원)로 연기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1」 발간됩니다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합니다. 총 340쪽의 합본호에는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머리글 「김영삼정부 1년의 인권」이 실리며, 주제별로 색인도 정리하여 기사를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팩스신문이란 단점때문에 보관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바랍니다.

발간예정일 : 4월 2일(토)  
 값 : 15,000원 (정기구독료 납입자는 무료 기증합니다)

## 국민들의 사법접근권 보장위한 개선방안 논의

경실련 4월 1일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 공청회

지난 2월 16일 「사법제도 발전위원회」(사법위)는 사법개혁과 관련한 29가지 안건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김성남변호사)는 사법위의 안건에 대해 “실추된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의가 법제 개폐를 통해 제도화되기 전에 그 문제점을 토론했다는 공청회를 마련했다.

오는 4월 1일 오후 1시 30분 홍사단 강당에서 열릴 공청회의 주제는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이다. 이날 발제는 시민입법위원회 회원들이 맡았는데 발제자들은 사법위의 개선안이 법원 내부 조직에 대

한 문제제기는 많으나 시민법률 개선부분은 적다는 공통된 지적을 하고 있다.

조병률교수(명지대)는 ‘개혁시대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서 “사법연수원에서 하는 법관 교육이 법관자질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돼야”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경환교수(서울대)는 ‘시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에서 시민의 법률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안교수는 시민들에게 법원의 문턱은 높고 수입료는 비싸기만한 문제점을

말하며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종섭 교수(건국대)는 ‘사법제도 발전위 개혁안, 국민을 위한 것인가?’에서 사법위의 29가지 안건을 분석하게 된다.

이날 토론자로는 한상호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유선호 변호사(민변), 양정자 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이인제의원(민자당 법사위 소속), 정기호 의원(민주당 법사위 소속)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문의 02-766-5393, 경실련 정책연구실 최홍섭간사).

## 1달제 학무모교사 25명의 두밀국교 학생 교육

군교육청 폐교조치 도교육청 ‘통폐합계획’에도 어긋나

작년보다 4명이 들어난 25명의 두밀국교(분교) 학생들은 3월 2일 폐교된 후 1달째 마을회관에서 학무모 4명에게 교육을 받고 있다. 가평군 교육청은 폐교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의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3월 7

일에 이어 22일에도 ‘무인교수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경고장만 보냈다.

마을주민들이 입수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가평군 교육청에 보낸 ‘소규모 학교 통폐합계획’이란 공문에는 폐교 선정기준으로 △학업성취도 △간물노후도 △시설설비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사회문화적

요인고려(주민·학부모 반대 여부) 등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두밀리 주민들은 위의 다섯가지 기준에 보더라도 폐교를 결정한 것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 건물은 3년전에 신축하였고, 피아노 1대 컴퓨터 6대와 조리대, 식당이 독립되어 있어 시설설비율도 우

교에 비하여 학생수가 많아 1인당 교육비도 적게 들며,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점등을 볼때 ‘폐교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수) 주민대표들은 군 교육청 관계자와 만나 ‘두밀분교 폐교 근거 및 절차’와 ‘두밀국교 학생들을 본교인 상색국교로 위장전입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일단 동교시키면 서류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주민 장호순씨는 “두밀국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학교기자재를 그대로 두겠다던 교육청이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전부 실어갔다”고 분개하면서 “상색국교로 동교하면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약속 또한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29일 문화방송 PD수첩에서 두밀분교 문제가 방영된 후 구체적인 수하, 폐교 안된 다른 학

##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월 1-3만원입니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농협 011-01-404581	예금주; 서준식
국민은행 015-21-0723-021	예금주; 서준식



<이달의 주제 - 여성>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  
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할 것  
<여성·차별·철폐·협약, 11조2항>

# 인권하루소식

발행처 : 인권운동 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염규홍  
(140-01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01호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 노태훈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  
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  
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  
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  
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로 기소된 노태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  
예 2년형을 내린 원심판결  
을 재확인했다.

출소장기수들의 글이 실  
려 있는 『빠앗킨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를 소지한  
것이 이적목적의 아니라  
단순소지한 것이라는 항소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미  
필적 인식이 있으면 이적  
목적이 성립된다"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한  
출판물이 언론기관에도 배  
포된 것이고 통일원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에  
서도 볼 수 있는 등 누구

나 북한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데도 특정인에게  
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범집행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야구선수야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  
지만 폭력단원이 야구방망  
이를 드는 것은 폭력의 도  
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소지  
하느냐에 따라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북한이 여  
전히 위협적 존재이고 어  
떤 법이든지 그 나라의 독  
특한 환경에 따르므로 외  
국에서 국가보안법이 인권  
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영  
향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  
였다.

노씨는 판결후 "똑같은  
출판물을 소지했는데 소지  
한 사람에 따라 유무죄가  
가려진 셈"이라고 공박하  
며, 재판부가 그 어떤 수단  
으로도 파악할 수 없는 내  
심을 판결의 대상으로 삼

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씨는 또 "판사가 '야구  
선수든 폭력배든 야구방망  
이를 들고 있는 것 자체로  
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재판  
의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  
는 것 같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반박하였다.

노씨는 93년 7월 구속되  
어 같은 해 10월 20일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의 과제 한·일 합동심포지움 29-30일 부산대

29-30일 이틀간 한·일노  
인복지 학술심포지움이 부  
산대 사회과학대학과 일본  
사회사업대학 공동 주최로  
부산대에서 1백50명이 참  
석한 속에 열렸다.

'21세기를 향한 노인복지  
의 과제'의 주제로 열린 심  
포지움은 양국의 노인복지  
현황과 과제가 5가지 주제  
발표로 다루졌다.

'21세기를 향한 노인문제  
와 노인복지의 방향' 주제

발표는 마에다 아이사쿠  
(前田大作, 일본사회사업대  
학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과 최성재(서울대 사회복지  
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또한 김기태(부산대 사회  
과학대) 학장이 '한국시설  
노인의 욕구를 통한 사회  
복지 실천방안과 정책과제'  
를, 사회복지연구소의 우야  
마카츠요시(宇山勝義) 주관  
이 '일본에 있어서의 유료  
노인홈 현황과 과제'를 발  
표했다.

이번 학술심포지움은 부  
산대 사회과학대학과 일본  
사회사업대학이 93년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처음 가  
진 행사로 해마다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 계획이다.

### 혁사노사건 4명 구속 '잠 안재우고 수사중'

'혁명적 국제사회주의노  
동자투쟁동맹'에 가입했다  
는 이유로 불법연행된 백  
형록, 조돈희, 이완순, 함평  
기씨에게 30일 저녁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  
장이 발부되었다.

백씨등은 구속영장 제시  
없이 연행된데 이어 30일  
현재까지 잠을 재우지 않  
고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  
로 면회결과 밝혔었다.

### ◆ 알 림 ◆

□제29차 민가협 목요일회  
"희망새 석방, 창작의 자유 보장"  
·일시 ; 3월 31일(목) ·장소 ; 안국동 일본대사관 앞  
·출연 ; 노래마을, 노래공장, 김영남, 류금신씨등이  
'희망새의 석방'을 위한 노래를 부른다.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3월 30일자 '혁사노사건' 기사에서  
'합기평'씨는 '합평기'씨로 바로잡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I' 발간됩니다

준비1호부터 제100호까지 발행했던 <인권하루소식>을 한권의 책으로 묶어 발간합니다. 총 340쪽의 합본호에는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의 머리글 '김영삼정부 1년의 인권'이 실렸습니다.

발간예정일 : 4월 2일(토)  
값 : 15,000원 (정기구독료 납입자는 무료 기증합니다)

## ● 국제 인권 소식 ●

인터뷰; IS 사무소장 아드레앙 졸라

###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평가 "인권단체 전문성과 상호연대 더 중요"

아드레앙 졸라(Adrien Zoller)는 국제인권봉사회(IS, <인권하루소식> 3월 8일자 참조) 사무소장이다. 84년부터 10년동안 유엔 인권기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온 국제적인 인권문제 전문가 졸라씨를 '인권운동 사랑방' 장소영씨가 3월 18일 제네바 IS 사무실에서 취재했다. 다만 제50차 인권위원회가 3월 11일 끝나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번 인터뷰 기사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 50차 인권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는 IS에서 4월에 발간하는 『Human Rights Monitor』 24집에 실린다.

▶이번 50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평가해 달라.

▶아직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 흐름을 살펴보면,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정부대표들이 이번 회기에서 좋지 않은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할 때 혹은 발언을 할 때, 비엔나 인권대회 선언문을 인용하여, 비엔나대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비엔나 선언문은 이제까지 확보한 인권의 각 기준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최소 수준에 머문 문안들이 많았다.

그리고 특정 나라나 지역에 대한 결의안의 경우 작년보다 나은 내용이 없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토고(Togo)의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은 작년보다 그 결의내용이 약하다.

반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 및 공정성을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두기로 결의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특히, 이미 작년에 거의 확정된 이야기이지만, 여성 특별보고관은 여성인권단체들의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결정도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년이 '원주민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결의안은 초점이 불분명하다. 내 생각에는 대부분의 정부대표들과 유엔 사무국원들이 원주민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평가는 이

후 『HR Monitor』 24호에 실겠다.

▶특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인권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무분과(Working Group)와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들의 역할이 존중되고 그 위임사항이 넓어지고 있다. 그동안 운영의 효율과 인권신장을 위한 절차들은 거의 사무국이나 의장이 제출하는데 번번이 정부대표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관행에 비추어볼 때 위의 경향은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는 좋은 현상으로 발전이라 볼 수 있다.

▶결의안들이 갖는 균형감각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인권위에서의 남북갈등은 어떠했나?

▶선진국과 비선진국들의 정치적 갈등이 역시 반영되었고, 전반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 편파적이었다고 본다. 특히 남미의 경우 쿠바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물론 쿠바에 인권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미의 다른 나라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비해 불공평한 결정이었다. 이를 무리하게 추진한 미국의 입장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또, 서방국가들은 그룹으로 대응하는데 인권문제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전략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계획없이 즉흥적인 발언을 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미국의 경우 자신의 목표, 즉 쿠바를 공격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중국과 쿠바에 대한 표결동향은?

▶중국의 경우 작년에 비해 중국 지지표가 줄어들었으며, 쿠바는 일부 반쿠바표를 기권표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쿠바는 미국의 봉쇄정책이 가져온 고통을 설득력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문제가 우선이고 인권은 내정문제라며 국가주권을 강조하여 호응이 약했다. 하지만 실제 결의안 처리과정에서는 중국이 큰 나라이고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점이 작용했다. 특히 작은 나라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도 쿠바결의안에는 미국을 쫓아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국결의안

에서는 기권했지 않은가?

▶이번 회기 인권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소감은?

▶비효율적인 모습과 발전된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앞으로, 특별보고관과 실무분과의 역할 증대는 더 많은 논란거리, 더 많은 문서, 더 많은 정보를 뜻한다. 또한 인권단체들의 할 일이 많아진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안전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몇가지 주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의 개선이나 다른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권단체들의 전문성과 상호간 협조관계가 중요하다.

###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김삼석 남매 고문사태 다뤄

동아시아 경제문제 전문주간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는 3월 31일자에 한국의 인권문제를 다룬 기사를 한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국제엠네스티의 한국 인권보고서와 김삼석 김은주 고문사태를 다룬 이 기사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모든 국가보안법 피의자들이 잠 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동시에 주광일 부장검사가 "우리는 잠 안재우기가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도 인용 보도했다.

### 아시아학생연합, 북경 세계여성 대회를 위한 준비회의 가져

아시아국가들을 회원단체로 두고 있는 아시아학생연합(ASA) 지난 2월 18-20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사상 처음으로 남아시아 여학생회의를 가졌다. '평등, 자유, 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모임의 취지는 95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될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제기할 공동입장과 공동대응 방침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석자들은 북경회의에서 "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상황과 여성인권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입장을 제기함과 아울러, 아시아 정부들의 거짓 보고서와 문서들에 대한 체계적인 반박활동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직 동북아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모임은 계획된 것이 없다.